

2024년 봄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연구논문】

- 주요 일간지의 20대 대선 보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편향성 분석
: 답러닝을 이용한 분류 및 Doc2Vec을 이용한 유사도 비교를 중심으로
박상현 / 1
-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 의존, 인과적 설명
: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대처리즘을 중심으로
정영우 / 45
- 어떤 의원들이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에 지정되는가?
: 정당 충성도, 상임위원회 지정 경험, 선거 안정도를 중심으로
강신재 / 75
-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이성진 · 최성진 / 109
-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조직만족도 간의 관계
: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배성희 · 양난미 / 139

【연구경향】

-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김덕렬 · 엄기홍 / 165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발행처: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인 쇄 일: 2024년 3월 28일

발행인: 엄기홍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주소: 우)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39호

전화: 053-950-7396

팩스: 053-950-6206

이메일: basicdatakreditor@gmail.com 인 쇄 처: 도서출판 책과세계

홈페이지: <http://www.basicdata.kr/> (053-953-2417)

편집위원장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편집간사 민정훈(국립외교원)

편집위원 국내영역: 박원호(서울대학교), 엄기홍(경북대학교)
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지병근(조선대학교)

국제영역: 김동수(부경대학교), 이유신(영남대학교),
정한범(국방대학교), 황태희(연세대학교)

해외논문: Satoshi Machida(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USA)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is issued twice in one volume per year. Inquiries concerning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The Institute for Basic Social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s Room 339,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E-mail:basicdatakreditor@gmail.com)

Editor in Chief: Jinman Cho

Managing Editor: Jeonghun Min

Editors: Domestic Studies: Won-ho Park, Kihong Eom, Jae Mook Lee,
Byong-Kuen Jhee

Global Studies: Dong Soo Kim, Yusin Lee, Hanbeom Jeong,
Taehee Whang

Foreign Submission: Satoshi Machida

제9권 제1호

ISSN 2508-2183

연구방법논총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2024년 봄

차 례

【연구논문】

주요 일간지의 20대 대선 보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편향성 분석: 딥러닝을 이용한 분류 및 Doc2Vec을 이용한 유사도 비교를 중심으로 박 상 현 / 1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 인과적 설명: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대처리즘을 중심으로 정 영 우 / 45

어떤 의원들이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가? 정당 충성도,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 선거 안정도를 중심으로 강 신 재 / 75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이 성 진 · 최 성 진 / 109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 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배 성 희 · 양 난 미 / 139

【연구경향】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김 덕 렬 · 엄 기 흥 / 165

『연구방법논총』 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201

『연구방법논총』 저술 윤리강령 208

『연구방법논총』 편집 및 심사 규정 210

『연구방법논총』 편집위원명단 214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4.3.9.1.1>

【연구논문】

주요 일간지의 20대 대선 보도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편향성 분석 : 딥러닝을 이용한 분류 및 Doc2Vec을 이용한 유사도 비 교를 중심으로*

박 상 현**

논문요약

본 연구는 주요 일간지의 20대 대선 보도에 정치적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형으로 정치 성향별로 보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Doc2Vec으로 유사도를 측정하여 보도 지형의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정치 성향에 따른 보도 성향 차이를 감성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딥러닝 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진보-중도-보수'는 89.8%의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진보 성향 매체와 다른 성향의 매체의 이진 분류에서는 93%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되고 있어 정치 성향에 따른 보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Doc2Vec 분석 결과 진보 성향 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 보수 성향 매체인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신문사들은 중도 매체에 해당하는 신문사들과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감성분석 결과 진보 성향의 매체일수록 20대 대선 보도에서 부정적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후보에 따른 긍정/부정 보도의 강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대 대선에 관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 행태에는 '진보-중도-보수'라는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중도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보도 지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딥러닝, Doc2Vec, 언론, 정파성, 20대 대선, 대선 보도, 감성분석

* 본 연구는 2022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연구입니다. 논문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대식 박사님과 심사과정에서 연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유의미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수료.

I. 서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거는 단순히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국민은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선택하기에, 후보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경쟁함으로써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들이 경합하는 장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단순히 정책과 공약만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에는 후보자들이 소속된 정당을 비롯하여 후보자와 유권자의 이념 성향, 정치 경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변수들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중에서 언론의 선거 보도는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매체로 기능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Kahn and Kenny 2002; Jacobs and Shapiro 2005; Prior 2013; 유현중 2008; 조진만 2015; 양승찬·신지희 2022).

이러한 이유로 선거 보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통해 언론기관의 선거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의 의무를 바탕으로 하여 매체별로 선거 보도 심의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져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통해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보도를 접하는 경로가 인터넷 기반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TV 뉴스 이용률을 추월할 정도로 대세가 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칙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 보도가 공정하며, 후보자 간의 균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의 주된 원인으로는 국내 언론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승엽 외 2017; 최창식·임영호 2021a).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조진만 2015; 김수정·정연구 2018). 그러나 유권자들은 언론보도 관련 현상 중 ‘편파적 기사’가 문제라고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자사 이기주의적 기사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언론보도의 편향성에 대한 유권자의 경각심은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2년의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대 대통령선거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이전의 어떠한 대통령선거보다도 양대 정당의 후보자를 중심으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1% 미만의 매우 적은 격차로 당선인이 갈렸던 선거였기 때문이다.¹⁾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선거의 중요성에 더해 이와 같은 격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만약 특정 언론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선거 보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대 대선에서 경쟁을 펼쳤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 보도가 언론의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에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안철수 후보는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였기에 제외하였으며, 제3당이라 할 수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건인 유효총투표수 10%를 넘기지 못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20대 대선의 주요 후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두 후보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를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의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딥러닝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Open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기계학습(machine-learning) 방법으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56%를 득표하였으며, 이는 제6공화국 이래로 가장 적은 격차로 당선 여부가 갈린 사례였다. 두 번째로 치열했던 선거는 1997년 제15대 대선으로 김대중 후보는 이회창 후보보다 약 1.53% 높은 40.27%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으며, 세 번째는 2002년 제16대 대선으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보다 2.33% 높은 48.91%로 당선되었다.

로써,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의 은닉층(hidden layer)을 여러 겹 쌓아 인간의 생체 신경망을 모방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망을 이용하여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에 내재된 관계를 발견해내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주요 일간지의 선거 관련 보도를 학습시킨 모형이 선거 보도를 기반으로 정치 성향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딥러닝을 통해 보도 내용의 구분을 시도한 후 주요 일간지의 선거 보도들이 얼마나 동질적인지 혹은 이질적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문서 간의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는 Doc2Vec을 사용하여 주요 일간지 간 보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요 일간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선거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도 지형을 드러내는 한편, 주요 일간지의 보도 내용에 대한 감성분석을 시행하여 정치 성향에 따라 신문들이 평균적으로 각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언론이 선거 보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언론의 정파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선거 기간에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과 공약을 홍보함으로써 지지를 구하며, 유권자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자신의 선호(preference)를 반영하는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하게 된다(진영재 2023). 이 과정에서 언론은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에 기여를 하게 된다(조진만 2015).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사의 정치 성향이나 이익에 따라 뉴스의 주제나 보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치 성향이 밀접한 정당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또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Shoemaker et al. 2009; Levendusky 2013a).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원으로써 언론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윤영철 외 2015),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서 기인하는 편파적 보도는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수용자인 독자 또한 선택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며 정치적 태도와 신념이 변화하거나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Iyengar and Hahn 2009; Stroud 2011; Levendusky 2013b; Leeper 2014; 양승찬·신지희 2022). 물론 언론이 실제로 수용자를 변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던 태도나 신념이 선택적 노출을 일으킴으로써 더 강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이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여론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Holbrook 1999; Chiang and Knight 2011; Lopez de Leon 2013; 유현종 2008; 박지현·나은영 2021; 이한수 2021). 따라서 단순다수대표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에서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대통령선거 보도에도 투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언론을 지칭할 때 흔히들 ‘보수 언론’ 혹은 ‘진보 언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곤 한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하여 진보-보수 언론들이 상반된 시각을 갖고 보도를 하는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한다(손영준 2017).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언론사의 정치 성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도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나 이슈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현주(2010)는 신문들의 이념성으로 정치이념적 차원과 경제적 가치배분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국내 신문들의 보수-진보 이념성 스펙트럼이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으며, 김수정·정연구(2018)은 19대 대선 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정당과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일괄적으로 언론에 적용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언론의 정파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파적 스펙트럼 적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왔다. 그러한 연구들은 정치적 입장이 드러날 수 있는 정당이나 선거, 정치인 등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신문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이라 할 수 있는 사설뿐만 아니라 취재원 선택, 인용 방식, 기사 구성의 프레임, 서술 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강진숙 2006; 김경희·노기영 2011; 김경모·정은령 2012; 박재영 외 2014; 이상기 2014).

선거 보도에 관련하여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연구는 크게 기사 보도량에 기반을 두는 물리적 편향과 보도 논조의 편향, 보도 주제의 편향 등과 같이 내용에 기반을 둔 편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승엽 외 2017; 김수정·정연구 2018). 먼저 물리적 편향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남지나·최윤정(2010)은 한국과 미국의 TV뉴스의 대선보도에서 후보자가 보도되는 비율, 순서,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원희영·윤석민(2015)는 18대 대선에서 취재원이나 인터뷰이 등의 보도 시간까지도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도 하였다.

보도주제나 논조와 같은 내용적 측면의 연구들은 후보나 정당이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선정한 이슈에 대해 언론의 보도 태도를 정리하거나 이들 이슈에 대한 프레임을 추출하여 프레임이 어느 정도로 등장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은영·유세경(2014)는 철도노조 파업 이슈와 관련한 보도 주제를 분류하고 보도에 대한 앵커/기자의 태도와 취재원의 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이완수·배재영(2014)는 18대 대선 보도에서 리포터의 보도 태도를 후보자별로 분석하여 특정 후보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을 보여줌으로써 18대 대선의 방송보도가 기계적 공정성은 존재하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밝혀냈다. 송병권(2019)는 19대 대선기간 동안 보도된 언론 기사들을 분석하여 언론매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보도 편향이 특정 후보에 대하여 편향성을 보이는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행태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승엽 외(2017)은 특정 정당이 등장하는 빈도와 보도 주제와 내용이 유리한지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하여 후보의 등장 순서를 제외하면 특

정 방송 채널에서 물리적 편향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도 주제 측면에서는 일부 방송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 채널들에서는 유의미한 편향성을 보이지 않음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채영길·유용민(2017)의 연구에서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모바일 포털의 뉴스사이트가 제공하는 선거 뉴스를 분석하여 포털에 따라 선거 기사에서 후보자가 출현하는 빈도라는 물리적 편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의미 연결망 구조를 통하여 내용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선거 보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2. 선행연구에 사용된 방법론 검토 및 연구질문

한국 언론의 정파성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법론에는 기본적으로 대량의 기사를 분석해야 하기에 작업량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분석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정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론사를 선정하거나 주제 및 기간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최창식·임영호 2021a). 선술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방식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윤영철 외(2015)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26개 키워드에 대해 46개의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총 31,251개의 기사를 분석 모 집단으로 하여 언론매체의 이념적 지형도를 분석하였으며, 정파성이 강한 매체일수록 이념적 성향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인 관점의 의견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종희(2016)는 28개 매체의 세월호 참사 보도 12만여 건에 나타난 당파적 문구를 추출 및 분석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를 분석한 바 있으며, 박지영(2020)은 ‘검찰’ 관련 사설을 수집하여 텍스트 스케일링(text scaling) 기법 중 하나인 워드피시(Wordfish)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주요 일간지의 이념적 편향성을 분석한 바 있다. 함승경 외(2021)은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하여 토픽 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보도하는 의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텍스트 분석 외에 감성분석의 방식으로 언론의 정파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

도 있다. 최창식·임영호(2021a)은 감성분석을 통해 언론보도에 나타난 표현의 특징을 산출하여 기존에 논의된 신문의 정파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신문마다 일정한 분포의 범위 안에서 감성지수가 각자의 정파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최창식·임영호(2021b)은 또 다른 연구에서 감성분석을 통해 집권 초반에는 보수 성향 신문은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진보 성향 신문은 진보 정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는 밀월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언론의 정파성 관련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코로나19에 관한 보도 내용에 차이를 있을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해낸 김나현·이상엽(2021)의 연구에 주목하였다. 해당 연구는 지도학습 알고리즘(supervised learning algorithm)인 인공신경망 중에서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개선한 LSTM(Long Sort-Term Memory)와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하는 딥러닝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보수 성향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진보 성향 신문으로 알려진 '경향신문, 한겨레'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신문사 간의 보도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류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보수 신문사와 진보 신문사에 따라 보도 내용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신문사 간의 구분에서는 진보 신문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구분이 어려워 동질적인 보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다른 신문들 간에는 구분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어 신문사 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딥러닝 기법으로 한국어 신문 기사를 분류하거나 방송 뉴스에 나타나는 감정, 후보들의 대선 TV토론에서의 채널별 등장 빈도, 표정과 응시 방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는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김도우·구명완 2017; 남영자 2020; 최윤정 외 2021), 언론의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딥러닝 분석을 시도한 것은 김나현·이상엽(2021)의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시기에 이규호·이준환(2021)의 코로나19 2차 유행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보도 연구에서 딥러닝 기반의 임베딩 방식인 토픽 투 벡터(Topic to Vector, Top2Vec)를 사용하기는 하였으

나, 정치 성향이 아닌 기사의 주제(Topic)를 분류하고 응집성을 살펴보는 분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김나현·이상엽(2021)이 수행한 연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라는 4개의 매체만 사용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언론사를 확대하는 한편,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된 박지영(2020)의 연구에서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보-보수’가 아니라 ‘진보-중도-보수’라는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여도 딥러닝 모형을 통해 정치 성향에 따른 대선 보도 구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연구질문 1>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언론의 정파성이 제20대 대선 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질문 1 :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선 보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김나현·이상엽(2021)의 연구에서 진보 성향의 ‘한겨레-경향신문’의 보도 내용 분류가 다른 신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신문사 간에는 보도 내용의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딥러닝 방식은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구분을 통해 정확도 등과 같은 분류 모형의 성능을 산출할 수 있을 뿐 문서 간의 유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신문사 간의 유사도가 얼마나 높게 나타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인 Doc2Vec을 활용하고자 한다.

Doc2Vec을 뉴스 유사성 분석과 분류 문제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Kim et al. 2019). 싱과 샤시(Singh and Shashi 2019)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사 분류를 위해 TF-IDF 방식과 Doc2Vec 방식의 활용 결과를 비교하여 뉴스처럼 양이 많으며 새로운 정보가 계속 추가되는 문서 집합에는 TF-IDF보다 Doc2Vec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냈다. 부디아토 등(Budiarto et al. 2021)은 Doc2Vec으로 기사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분류한 후 분류된 집단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LSTM을 사용해 결과를 비교

하였으며, Doc2Vec의 성능이 기사 간 유사도 측정에 적절한 방식임을 밝혀내었다. 국내에서도 이종혁(2021)이 Doc2Vec을 사용하여 기사의 유사도를 측정함으로써 매체 간 기사 내용의 유사성이 높아지는 뉴스 동질화 현상에 대해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Doc2Vec을 사용하여 정치 성향별-매체별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대선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보도 지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질문 2>는 아래와 같다.

연구질문 2 :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선 보도는 얼마나 유사한가?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감성분석을 통해 정치 성향에 따라 신문사가 각 후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보-중도-보수'로 분류한 주요 일간지들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후보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드러내는 보도 성향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앞선 연구질문에 대한 검증에서의 딥러닝 모형과 Doc2Vec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함께 조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연구질문 3 :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선 후보에 대한 긍정/부정 보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III. 연구설계

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윤석열·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 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일자인 2022년 2월 15일부터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월 9일까지의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주요 일간지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이 되는 '주요 일간지'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10개 신문사를 선정하였다.

주요 일간지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보수’, ‘중도’의 3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워드피쉬(Wordfish) 모형을 활용하여 신문사의 정체성과 이념 성향이 잘 드러나는 자료인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일간지의 이념적 위치를 측정한 박지영(2020)의 연구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이용하여 정치적 경도를 측정한 박종희(2016)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류이다. 박지영(2020)의 연구에서 언론의 사설을 분석한 결과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로,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로 ‘보수’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나머지 신문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중도’로 분류하였으며, 박종희(2016)의 연구에서 당파적 비중을 고려한 빈도를 사용하여 추정된 정치적 경도의 스펙트럼이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에 박지영(2020)의 분류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흔히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동아일보’가 중도로 분류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박종희(2016)과 박지영(2020)의 연구에서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른 보수 매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딥러닝 방식으로 정치 성향에 따른 보도의 차이를 분석한 김나현·이상엽(2021)의 연구에서도 진보 신문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구분이 어려웠던 반면 보수 신문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상대적으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보았을 때, 두 신문사의 보도에 내재된 상대적인 이념적 거리가 실재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아일보를 ‘중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사 수집을 위해 파이썬(Python ver 3.9)의 requests와 BeautifulSoup, selenium 등의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여 신문사명, 기사 날짜, 제목, 본문 등을 수집하여 검색 키워드 컬럼을 추가하고 신문사별로 이념 성향을 라벨링(labeling)한 후 피클(pickle)의 형태로 저장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본문 수집의 편의

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개별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뉴스’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url을 가공하였다. 또한 수집된 결과물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포토뉴스’ 등과 같이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이 붙어 있거나 내용이 없는 ‘속보’ 등의 경우는 보도 내용을 분석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300자 미만의 기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로 분석 대상이 되는 뉴스 기사는 총 13,376건이며, 검색 키워드별·신문사별 분석 대상이 되는 기사의 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때 ‘이재명 후보’로 검색된 기사의 수는 6,390개, ‘윤석열 후보’ 기사의 수는 6,986개이며, 진보 성향 신문(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의 개수는 총 4,391개, 중도 성향 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의 개수는 총 5,235개, 보수 성향 신문(문화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의 개수는 총 3,750개이다.

<표 1> 검색 키워드별·신문사별 기사 건수

신문사명 (가나다·정치성향순)	정치 성향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경향신문	진보	677	744
서울신문		518	562
한겨레		442	529
한국일보		424	495
(소계)	4,391	2,061	2,330
국민일보	중도	697	745
동아일보		561	611
세계일보		1,197	1,424
(소계)	5,235	2,455	2,780
문화일보	보수	254	234
조선일보		757	732
중앙일보		863	910
(소계)	3,750	1,874	1,876
총계		6,390	6,986

2. 데이터 전처리

보도 내용 분석을 위해 먼저 파이썬(python ver.3.9)에서 한글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인 KoNLPy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시도하였다. KoNLPy의 형태소 분석기에는 Kkma, Okt, Komoran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분석기를 수집된 데이터에 적용하여 결과물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Komoran을 이용하였다. Komoran은 정당명, 정치인 이름, 역사적 사건의 명칭 등에 있어서 다른 분석기보다 더 나은 토큰화 결과물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사전 기능을 갖고 있어 어휘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조어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20대 대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이대남’ 등과 같은 주요 단어들은 사용자 사전을 추가하지 않는 형태소 분석기에서는 ‘이대’와 ‘남’ 또는 ‘이’와 ‘대남’ 같은 식으로 토큰화가 이루어져서 제20대 대선 보도 분석을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슈화된 여러 단어들을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기에 Komoran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Komoran을 사용해 기사 본문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1차로 수행한 이후 분석된 결과와 기사 내용을 토대로 사용자 사전을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Komoran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품사에 해당하는 형태소만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석에서는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는 명사가 많이 사용되지만, 정치 성향에 따라 사용하는 형용사와 동사의 종류와 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이예담 외(2018)의 연구를 토대로 할 때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사와 형용사 또한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토큰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1글자 이하인 단어를 제거하는 불용어 정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리스트(list) 형태로 정리하여 기존에 신문사명, 이념 성향 등을 정리해놓은 데이터 프레임에 부착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 방법

1)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기사 분류

본 연구에서는 대선 보도가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딥러닝 모형을 사용하여 기사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도학습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중에서 LSTM(Long Short-Term Memory)와 Bi-LSTM(Bidirectional LSTM), 그리고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사용하는 세 종류의 딥러닝 모형의 정확도(Accuracy)를 비교한 후 가장 성능이 좋은 모형을 사용하여 최종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딥러닝으로 언론의 정치 성향 분류를 시도한 김나현·이상엽(2021)의 연구에서 LSTM, Bi-LSTM, CNN을 비교하였을 때 CNN의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결과가 선거에 관한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추후 딥러닝을 사용하여 언론의 보도를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함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인공신경망이란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을 뜻한다.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함으로써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s)이 존재하고 각 층(layer)의 노드들과 이전과 이후 층(layer)의 노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엄기홍·김대식 2021). 즉, 입력층을 통해 투입된 정보가 각각의 층(layer)을 거치면서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정답에 해당하는 출력층의 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각 단계 노드들의 계수를 조정하며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여 모형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입력층의 값이 [2, 3, 4]이고 이에 대응하는 출력층의 값이 [6, 9, 12]라고 할 때, 입력층에서 출력층을 도출할 수 있는 계수가 3이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만약 처음 입력되었던 계수가 3이 아니라 5라면 출력층의 값인 [6, 9, 10]보다 큰 [10, 15, 20]이라는 값이 나오기에 더 낮은 계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망을 활용하는 딥러닝은 이를 더 많은 은닉층과 노드를 사용하여 출력층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계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LSTM은 기본적인 인공지능망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RNN)에서 발생하는 장기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장기의존성 문제란 정보의 범위가 넓을 때 멀리 떨어진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그 영향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LSTM은 기억셀(memory cell)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기억을 줄이고 오래전에 출현한 단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문맥을 고려하는 예측이 가능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이다(Yu et al 2019; Staudemeyer and Morris 2019). 다만 LSTM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순으로 문서를 읽지 않으면 추출하지 못하는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Bi-LSTM(Bidirectional LSTM)이 고안되었다(Huang et al 2019).

CNN은 본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딥러닝 모형으로, 필터를 사용하여 주변 정보를 요약하는 컨볼루션(convolution)과 요약된 2차원 행렬을 축소하는 풀링(pooling)을 수행하여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특성들을 추출하는 딥러닝 기법이다. 즉, CNN은 입력된 데이터를 작은 정사각행렬 모양의 필터(filter)를 사용해 일정 구간만큼 이동하면서(stride) 내적(inner product)를 구하여 특징 지도(feature map)를 만들며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박대민 2022). 최근 자연어 분석에서도 CNN을 활용하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Kim 2014; Albawi et al 2017; 김도우·구명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LSTM과 Bi-LSTM, CNN을 모두 사용하여 20대 대선 보도에 대한 분류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딥러닝을 이용한 분석은 크게 ‘데이터셋(dataset) 준비 → 모델 학습 → 모델 평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절차인 데이터셋 준비는 앞서 서술한 방식을 토대로 네이버에서 수집한 기사들을 토큰화 및 불용어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보도 내용을 토큰화한 결과물에 정치 성향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셋을 준비하였다. 또한 모델 학습과 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셋(Training dataset)과 평가 데이터셋(Test dataset)을 8.5:1.5

의 비율로 분리하였으며, 모델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습 데이터셋 중 15%를 검증 데이터셋(Validation dataset)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은 두 번째 단계인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평가 데이터셋은 세 번째 단계인 모델 평가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인 모델 학습의 경우 준비된 데이터를 딥러닝 모형에 적용하여 적절한 계수를 찾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문서별 최대 토큰의 개수(maximum length), 한 번에 학습하는 범위(batch size), 학습률(learning rate), 반복 학습 횟수(epoch size) 등을 지정하게 되며, CNN의 경우 필터의 개수(number of filter)와 커널의 크기(kernel size)도 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수들을 다양하게 조정하는 한편 학습 과정에서 딥러닝 모형이 학습 데이터셋에 과적합(over-fitting)되어 오히려 최종적인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증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형의 과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반복 학습 횟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모델 평가 단계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가 산출되는 값을 사용하였다.²⁾

마지막으로 모델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된 모형을 평가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분류 성능을 측정한다. 평가 데이터셋은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로써 모집단이 되는 데이터셋과 유사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모형이 평가 데이터셋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분류해내는지를 의미하는 '정확도'를 모형별로 비교한 후 <연구질문 1>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진보-중도-보수'라는 세 가지 정치 성향을 라벨링한 기사들이 분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이념별로 짝을 지었을 때에도 분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류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신문사 간의 보도 내용의 차이가

2) 보도의 최대 길이는 2,237이지만, 샘플 중 99.99%가 길이가 2,000 이하이므로 최대 토큰의 개수는 2,000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사용자가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인 학습 범위(batch size)는 16, 학습률은 0.001, 최대 반복 학습 횟수(epoch size)는 15로 하였다. CNN 모델의 경우 필터의 수는 64개, 커널의 크기는 5로 지정하였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에 정치 성향별 대선 보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Doc2Vec을 이용한 유사성 분석

딥러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신문사 간의 보도 내용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파이썬의 Gensim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Doc2Vec 분석을 시도하였다. Doc2Vec은 2013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단어 임베딩 기법인 워드 투 벡터(Word to Vector, 이하 Word2Vec)의 확장된 모형이다. Word2Vec은 단어를 벡터값으로 임베딩하여 벡터 공간 속에서 단어들의 분포를 추정한다(차영란 2020; 김수정 2020). 각 단어에 벡터값이 부여되기에 단어 간의 벡터값으로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며, 의미가 유사한 단어는 서로 비슷한 벡터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수학적으로 단어가 문서에서 사용된 맥락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Mikolov et al. 2013a, 2013b). 분석에 사용된 단어들을 다차원의 벡터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기에 단어가 문맥 안에서 사용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단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다. Word2Vec을 이용하면 단어들의 관계를 토대로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에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맥락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자연어 처리 기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현정 2021; 박상현 외 2022).

Word2Vec이 단어를 임베딩하는 방식이라면, Doc2Vec은 문서까지도 임베딩한다는 것 외에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동일하다. Doc2Vec에서는 문서가 하나의 단어처럼 간주되며, 문서의 토픽(Topic)을 기억하는 역할을 맡는다(Le and Mikolov 2014). Doc2Vec 분석을 위해 앞서 딥러닝 분석을 위하여 토큰화한 결과물에 대해 ‘신문사명’이라는 변수를 각각 할당하였으며, Doc2Vec 방식으로 국내 언론매체 간의 뉴스 동질화 현상을 분석한 이종혁(2021)의 연구를 참조하여 벡터 크기(vector size)는 100, 윈도우 크기(window size)는 5로 하였다. 분석 방식으로 pv-dm(Distributed Memory version of Paragraph Vector)³⁾을 사

3) pv-dm은 주변 단어를 가지고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윈도우 크기란 중심 단어 앞뒤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를 의미한다.

용하여 Doc2Vec을 시행함으로써 신문사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도 분석을 통해 ‘진보-중도-보수’로 분류한 정파성에 따른 보도 지형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3) 감성분석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은 텍스트에 나타난 의견, 정서, 평가,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Liu and Zhang 2012). 일반적으로 감성분석에서 사용되는 감성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positive), 중립(neutral), 부정(negative)의 세 분류로 나누어지며, 분석 대상에 따라 중립을 생략하고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감성의 정도를 극성(polarity)라고 하며, 감성분석에서는 극성을 숫자로 표현하여 양수이면 긍정, 0이면 중립, 음수이면 부정으로 사용한다(Liu 2017). 이와 같은 감성분석은 수작업으로 뉴스 프레임을 식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인식과 해석으로 인한 편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Burscher et al 2016)

감성분석의 방법에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감성분석과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이 있다. 전자는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분석기가 자료를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극성을 판별하는 방식이며,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은 명사나 형용사 등과 같은 감성이 표출될 수 있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긍정이나 감성의 정도를 매겨서 감성 사전(lexicon)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에 대한 감성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이다(정지선 외 2015). 기계학습 기반의 감성분석의 경우 학습 데이터셋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감성분석을 위해서는 일일이 각 기사에 대한 감성의 정도를 라벨링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은 이미 만들어진 사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만 있다면 빠르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창식·임영호 2021a).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각 기사의 형태소를 분석하여 명사와 형용사, 동사를 추출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그 결과물을 딥러닝과 Doc2Vec 분석

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딥러닝과 Doc2Vec 분석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휘 기반의 감성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국내 감성분석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군산대학교의 ‘KNU 한국어 감성사전(KNU Sentiment Lexicon)’을 사용하였다. KNU 사전은 Bi-LSTM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키백과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용어구 및 축약어 등 인간의 보편 기본 감성 표현을 나타내는 14,843개의 감성 어휘를 수록하였으며, 각 어휘 및 표현에 대해 긍정과 부정, 중립의 극성값을 -2점에서 2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박상민 외 2018). 예컨대 ‘무질서한 정치’라는 문구에는 -2점을, ‘바른 정치’에는 2점을 매기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부당하다(-1점)’, ‘부당하게(-2점)’, ‘부당한(-1점)’ 등의 사례처럼 하나의 단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도 극성값을 구분하여 매기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서에 사용된 용어들의 극성값을 합산하였을 때 양수일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감성이 우세하며, 음수인 경우 부정적인 감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KNU 감성 사전이 선거 보도나 정치적인 용어들에 대한 극성을 적절하게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KNU 사전은 우리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감성을 타당성 있게 분석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특정 도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성 어휘로 구성되어 있기에(박상민 외 2018; 박상민 외 2019; 최창식·임영호 2021b),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주요 일간지의 선거 보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사에 사용된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토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KNU 사전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탑재된 극성의 정도를 매기고, 일치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0점을 주었다. 각 기사에 사용된 형태소별로 감성의 정도인 극성을 측정하여 합산함으로써 기사의 감성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매체별·정치 성향별로 묶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감성지수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사 분류 모형 결과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라 20대 대선 보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질문 1>을 검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LSTM, Bi-LSTM, CNN을 사용하여 정치 성향에 따른 기사 분류를 시도한 후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형의 평가에는 '정확도'와 'F1 score'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정확도는 모형이 평가 데이터셋(Test dataset)에 대해 얼마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의미하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형 평가를 위한 척도로써 정확도만 사용할 경우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이 불균형할 때 잘못된 예측을 해도 그 결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1,000개의 평가 데이터 중에서 990건이 오답이고 10건이 정답이라고 했을 때, 모형이 1,000개를 모두 오답이라고 분류한다면 정확도는 99%가 된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Novacovic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정확도는 데이터셋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데이터가 불균형한 경우에는 F1 score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F1 score는 '재현율(Recall)'과 '정밀도(Precision)'의 조화평균으로 산출된다. 이때 재현율은 실제로 정답인 것 중에서 딥러닝 모형이 정답이라고 예측한 비율이며, 정밀도는 모형이 정답이라고 예측한 값 중에서 실제 정답의 비율이다. 재현율과 정밀도는 상호보완(trade-off)적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값을 조화평균으로 산출한 값으로 모형이 얼마나 정답을 정확하게 산출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Derczynski 2016). 본 연구에서 분류 대상으로 삼는 '진보-보수-중도' 집단의 경우 비교적 균등한 비율의 분량을 갖고 있어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습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을 분리할 때에도 전체 집단의 구성비율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정확도를 중심으로 보고하되, 모형의 성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보고를 위하여 F1 score도 함께 사용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정치 성향을 토대로 하는 기사 분류 모형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것은 CNN이었다. '진보-중도-보수'와 같은 다층 분류에서 각 모형의 정확도는 LSTM

은 0.723, Bi-LSTM은 0.733였던 반면 CNN는 0.898였으며, 이는 CNN 모형이 89.8%의 정확도로 정치 성향별로 기사를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1 score의 경우에도 정확도와 유사하게 0.896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인한 오류의 문제 또한 본 연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모형별 성능 비교

	보수 매체	보수	중도	보수
	중도 매체	진보	진보	중도
	진보 매체			
	정확도 (F1 score)	정확도 (F1 score)	정확도 (F1 score)	정확도 (F1 score)
LSTM	0.723 (0.717)	0.831 (0.830)	0.823 (0.821)	0.798 (0.788)
Bi-LSTM	0.733 (0.729)	0.822 (0.821)	0.812 (0.810)	0.796 (0.791)
CNN	0.898 (0.896)	0.938 (0.938)	0.931 (0.930)	0.897 (0.894)

* 보수 매체는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이며, 중도 매체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진보 매체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치 성향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기사에 대해 딥러닝 분류를 시도한 김나현·이상엽(2021)의 연구에서 LSTM, Bi-LSTM, CNN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CNN의 성능이 가장 뛰어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 성향을 ‘진보-보수’로 분류한 것에서 나아가 ‘진보-중도-보수’로 세분화하더라도 딥러닝 모형이 대선 보도 기사를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른 대선 보도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추후 딥러닝을 이용한 언론의 정파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진보-보수’보다 더 세분화하여 이념적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도-보수’, ‘진보-보수’, ‘진보-중도’와 같은 이진 분류 문제에 대해서는 LSTM, Bi-LSTM, CNN의 모형이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여전히 CNN이 가

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진보-보수’에 대한 CNN의 분류 정확도는 0.938이었으며, ‘진보-중도’ 분류에 대한 정확도는 0.931로 나타나 진보 성향의 매체의 경우 중도 및 보수 성향 매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분류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수-중도’ 분류에 대한 정확도는 0.897로 상대적으로 분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분류 대상이 되는 정치 성향별 F1 score 값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F1 score는 딥러닝 모형이 얼마나 정답을 정확히 산출되는지와 관련된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화평균이기 때문에 분류 대상이 되는 범주별로 값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값들의 산술평균으로 모형의 최종적인 F1 score 값을 계산한다. 이에 아래의 <표 3>에는 CNN을 사용하였을 때 각 모형에서 범주별로 산출된 F1 score 값을 기재하였다.

<표 3> CNN 모형에서의 범주별 F1 score

CNN	진보-중도-보수 F1 score	중도-보수 F1 score	진보-보수 F1 score	진보-중도 F1 score
진보	0.916	-	0.942	0.923
중도	0.901	0.912	-	0.937
보수	0.871	0.875	0.933	-
Macro Average	0.896	0.894	0.938	0.930

<표 3>을 살펴보면 ‘진보-중도-보수’ 분류에서는 ‘보수’의 F1 score가 0.871로 낮으며, ‘중도-보수’의 경우도 ‘보수’의 값이 0.875로 다른 성향의 F1 score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딥러닝 모형이 보수 성향 매체들을 다른 범주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표 3>에서 ‘진보-보수’, ‘진보-중도’의 구분에서는 F1 score가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는 것과 함께 고려한다면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는 다른 성향 매체들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보수 성향 매체들의 보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구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명사만 사용하였을 때의 모형별 성능

모형	보수-중도-진보	보수-진보	중도-진보	보수-중도
	정확도 (F1 score)	정확도 (F1 score)	정확도 (F1 score)	정확도 (F1 score)
LSTM	0.707 (0.703)	0.810 (0.807)	0.811 (0.811)	0.780 (0.774)
Bi-LSTM	0.725 (0.721)	0.813 (0.813)	0.812 (0.812)	0.781 (0.774)
CNN	0.876 (0.875)	0.929 (0.928)	0.923 (0.922)	0.900 (0.898)

한편, 본 연구는 정치 성향에 따른 언어사용의 차이를 연구한 이예담 외(2018)의 연구를 토대로 명사 외에 동사와 형용사도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딥러닝 모형의 성능 개선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명사만 사용하였을 때의 정확도와 F1 score를 〈표 4〉에 기재하였다.

명사만 사용하면 명사와 동사, 형용사를 모두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와 F1 score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이예담 외(201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 성향에 따른 언어사용의 차이가 선거 보도에서도 반영되고 있기에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성능 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품사가 분석에 포함됨에 따라 더 많은 수의 토큰이 학습에 사용됨으로써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CNN 모형의 ‘보수-중도’ 구분에서 명사만 사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0.900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 0.897보다 소폭이나마 개선되기도 했기에 이러한 해석들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품사 사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비교와 명확한 해석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Doc2Vec 결과

앞선 <연구질문 1>에서의 분석을 통해 딥러닝 모형이 정치 성향에 따른 보도 내용을 비교적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선 보도가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연구질문 2>를 검증하기 위하여 Doc2Vec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출된 코사인 유사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때 코사인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함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각 매체별로 코사인 유사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앞선 딥러닝 모형을 사용한 대선 보도 분류에서 보수의 F1 score가 낮게 나타나고 중도와 보수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진보 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서로에 대한 유사도가 0.821로 가장 높으며 다른 신문과의 유사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신문사가 타 신문사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일보는 같은 진보 성향 매체인 서울신문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0.805), 중도 성향 매체인 국민일보(0.777)와도 상당한 유사도를 보여 진보보다 중도에 더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었다.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중도 성향 매체인 국민일보와 가장 유사도가 높았으며(0.824), 한국일보(0.805), 세계일보(0.802) 순으로 유사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한국일보보다 중도 성향 매체들에 더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 성향 매체의 유사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일보와 세계일보가 각각의 매체에 대한 유사도가 0.8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서울신문, 동아일보와 모두 0.8 이상의 유사도를 보이고 있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인 것은 보수 성향 매체인 중앙일보(0.835)이지만, 국민일보와도 0.820로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였으며, 세계일보와도 0.80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 매체 간에는 유사도가 매우 높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5〉 Doc2Vec 유사도 분석 결과

〈이념적 위치〉

	← 진보 →		← 중도 →		← 보수 →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0.821	0.511	0.639	0.603	0.529	0.544	0.561	0.620	0.528
한겨레	0.821		0.471	0.552	0.504	0.416	0.504	0.450	0.559	0.409
한국일보	0.511	0.471		0.805	0.777	0.730	0.681	0.691	0.637	0.504
서울신문	0.639	0.552	0.805		0.824	0.802	0.722	0.796	0.656	0.627
국민일보	0.603	0.504	0.777	0.824		0.872	0.820	0.781	0.613	0.634
세계일보	0.529	0.416	0.730	0.802	0.872		0.801	0.789	0.574	0.609
동아일보	0.544	0.504	0.681	0.722	0.820	0.801		0.835	0.664	0.766
중앙일보	0.561	0.450	0.691	0.796	0.781	0.789	0.835		0.670	0.747
문화일보	0.620	0.559	0.637	0.656	0.613	0.574	0.664	0.670		0.581
조선일보	0.528	0.409	0.504	0.627	0.634	0.609	0.766	0.747	0.581	

* 신문사 순서는 박지영(2020)의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일간지의 정치이념적 위치 순서를 토대로 구성함

** 가장 유사도가 높게 나타난 신문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으며, 회색으로 표기된 영역은 유사도 0.8 이상인 경우임

보수 성향 매체의 경우 중앙일보가 중도 성향 매체로 분류한 동아일보와 0.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신문(0.796), 세계일보(0.789), 국민일보(0.781)로 낮지 않은 유사성을 보여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와 비교하였을 때는 중도 성향 매체들과 가까운 보도를 하고 있었다. 문화일보의 경우 유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신문사는 동아일보였으나(0.664), 다른 일간지의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낮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일보 또한 동아일보와의 유사성이 0.766으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중도 매체로 분류한 동아일보가 Doc2Vec에서 보수 매체들과의 유사성이 나타

난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각 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기 위해 참조하였던 박종희(2016)의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정치적 경도 차이가 조선일보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던 반면, 검찰개혁에 관한 박지영(2020)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의 이념적 위치 차이가 중앙일보에 비해 크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Doc2Vec 결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이슈의 종류나 측정 방법에 따라 보수 성향 매체의 정치적 편향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동아일보는 다른 중도 매체인 ‘국민일보, 세계일보’와의 유사성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20대 대선에 관한 보도에서 동아일보의 이념적 위치는 앞선 딥러닝 분석뿐만 아니라 후술할 감성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수 매체로 분류한 ‘중앙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간에는 유사도가 타 성향 매체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용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대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아일보와 보수 매체의 유사성과 보수 성향 신문 간 보도 내용의 이질성은 딥러닝 모형에서 보수 범주의 분류를 저해하고 F1 score를 낮추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감성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주요 일간지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선 후보에 대한 긍정/부정 보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질문 3>을 검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주요 일간지의 대선 보도에 대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고 후보별·매체의 정치 성향별로 측정된 감성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앞선 딥러닝과 Doc2Vec 분석 결과와 함께 비교하고자 하였다.

〈표 6〉 후보별·정치 성향별 감성분석 결과

	전체	진보 매체	중도 매체	보수 매체	F-statistic	F-statistic
이재명 후보	-3.525 (7.869)	-4.158 (9.635)	-3.442 (6.907)	-2.936 (7.494)	11.526***	29.311***
윤석열 후보	-3.500 (8.059)	-4.270 (9.291)	-3.279 (6.835)	-2.872 (7.279)	18.311***	
편차	-0.025	0.111	-0.162	-0.065		
t-statistic	-0.178	0.389	-0.853	-0.269		
p-value	0.859	0.698	0.394	0.788		

* p<0.1, **p<0.05, ***p<0.01

* 진보 매체는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이며, 중도 매체는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보수 매체는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이다.

** 표준편차는 ()로 표기하였음

감성지수는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음수로 나타나 대선 보도에서는 KNU 감성 사전에서 부정적 의미로 분류되는 용어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수 매체보다 중도 매체가, 중도 매체보다 진보 매체가 평균적으로 더 부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보-중도-보수’라는 정치 성향에 따른 매체의 감성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9.311, p<0.01),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관한 기사들로 나누어 후보별로 매체의 정치 성향별 감성지수의 평균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선에 대한 긍정/부정 보도의 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색 키워드인 후보별로 구분하여 각 일간지의 기사들의 감성지수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보수 매체는 윤석열 후보에 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진보 매체는 이재명 후보에 더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후보별 감성지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매체의 정치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에 대해 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감성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7>에 기재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일수록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용어를 평균적으로 덜 사용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후보별로 감성지수 차이가 나타났으나 후보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각 신문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선 보도상의 감성지수 강도의 차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후보별로 긍정/부정 보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7> 신문사별·후보별·정치 성향별 감성분석 결과

	신문사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t-statistic	p-value	이념별 평균	F-statistic	F-statistic
진보	경향신문	-4.093 (9.400)	-4.216 (9.034)	0.252	0.801	-4.217	0.177	6.254***
	한겨레	-4.301 (11.687)	-4.361 (10.843)	0.083	0.934			
	한국일보	-3.892 (9.346)	-4.228 (9.420)	0.543	0.588			
	서울신문	-4.340 (8.139)	-4.290 (7.840)	-0.102	0.919			
중도	국민일보	-3.651 (6.712)	-3.662 (6.622)	0.030	0.976	-3.355	2.100	
	세계일보	-3.419 (7.286)	-3.174 (7.190)	-0.861	0.390			
	동아일보	-3.230 (6.291)	-3.057 (6.205)	-0.472	0.637			
보수	중앙일보	-3.462 (8.160)	-3.510 (7.857)	0.125	0.901	-2.904	16.543***	
	문화일보	-1.504 (7.568)	-1.248 (5.928)	-0.418	0.676			
	조선일보	-2.818 (6.559)	-2.597 (6.820)	-0.636	0.525			

* p<0.1, **p<0.05, ***p<0.01

* 표준편차는 ()로 표기하였음

전체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감성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254$, $p<0.01$). 또한 딥러닝 분석에서 '진보-중도-보수' 분류를 시도한 것처럼 정치 성향에 따른 감성지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9.311$, $p<0.01$). 마찬가지로 '진보-보수($t=-7.030$, $p<0.01$)', '진보-중도($t=-5.030$, $p<0.01$)', '중도-보수($t=2.940$, $p<0.01$)'의 감성지수의 평균 또한 비교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딥러닝 분석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성향 내에서 매체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였을 때는 진보와 중도 성향 매체 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보수 성향 매체 간에는 감성지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6.543$, $p<0.01$). 앞서 Doc2Vec 분석 결과에서 진보 성향 매체 중에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유사성은 높았으나 한국일보와 서울신문과의 유사성은 낮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달리 감성지수만을 보았을 때는 진보 성향 매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딥러닝에서 진보 성향 매체가 다른 성향 매체와 비교하였을 때 뚜렷이 구분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도 성향 매체의 경우 상호 간의 유사성이 높았던 Doc2Vec의 결과가 감성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 매체 간에는 감성지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를 검색 키워드로 하는 보수 매체 기사의 감성지수에도 차이가 나타났으며($F=6.904$, $p<0.01$), 윤석열 후보 기사에서도 차이를 보였다($F=9.935$, $p<0.01$). 이러한 결과는 보수 매체 내에서 후보별 긍정/부정 보도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후보에 따른 긍정/부정 보도의 차이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Doc2Vec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감성분석에서도 보수 매체 내의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어 딥러닝 모형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주요 일간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보도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로 인하여 언론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을 표출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대중의 인식 속에서 언론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 보도에도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형을 사용하여 정치 성향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딥러닝 모형만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신문사 간 보도의 유사도를 Doc2Vec을 활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정치 성향의 차이와 보도 지형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정치 성향에 따라 보도 행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감성사전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딥러닝과 Doc2Vec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딥러닝 모형을 사용하여 정치 성향별 분류를 시도하였을 때 '진보-중도-보수'는 89.8%의 정확도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진보 성향의 매체와 다른 성향의 매체의 이진 분류에서는 93%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되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여 정치 성향에 따른 보도 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중도-보수'라는 세 가지 정치 성향에 따라 기사를 분류하기 위해 LSTM, Bi-LSTM, CNN 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CNN을 활용할 때 가장 높은 정확도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딥러닝 모형은 '진보-보수', '진보-중도', '중도-보수'와 같은 이진 분류에서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CNN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때 진보 매체와 다른 성향의 매체 간의 분류가 93%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보수 매체와 중도 매체의 구분은 89.4%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범주별 F1 score를 살펴보았을 때 보수 범주의 값이 다른 성향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딥러닝 모형에서 보수 성향 매체의 구분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둘째, Doc2Vec으로 대선 보도를 분석한 결과 진보 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 보수 성향 매체인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신문사들은 중도적 매체에 해당하는 신문사들과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진보 성향의 매체로 분류되는 한국일보의 경우 같은 진보 성향 매체인 서울신문과의 유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신문의 경우 중도 성향 매체들과의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 매체에 속하는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서로 간의 유사도가 높았으며, 동아일보는 국민일보와 세계일보와의 유사도도 높았으나 보수 성향 매체인 중앙일보와의 유사도가 가장 높았다. 보수 매체인 문화일보, 조선일보의 경우 동아일보와의 유사성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신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Doc2Vec의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주요 일간지 중에서 ‘경향신문-한겨레’, ‘조선일보-문화일보’를 제외하면 제20대 대선 보도가 중도 성향 매체 중심의 보도 지형을 보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Doc2Vec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Doc2Vec으로 매체 간 뉴스 동질화 현상에 대해 연구한 이종혁(2021)에 따르면 유사도가 0.90 이상의 경우가 동질화의 문제를 제기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호간의 유사도가 0.875로 가장 높게 나온 ‘국민일보-세계일보’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경우에도 0.85를 넘지 않았기에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보도된 내용이 중도 성향 매체들과 상대적인 의미에서 가깝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딥러닝에서 ‘진보-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었던 결과와 다르게 일부 매체를 제외하면 모두 중도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술할 감성분석에서 ‘진보-중도-보수’, ‘진보-중도’, ‘중도-보수’, ‘진보-보수’의 감성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딥러닝 분석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함께 본다면 여전히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감성분석 결과 진보 성향의 매체일수록 제20대 대선 보도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신문사·정치 성향별 감성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보수 성향 매체 내에서 긍정/부정 보도의 강도 차이가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였던 신문사 간의 보도

행태에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보에 따라 긍정/부정 보도의 강도 차이가 나타난 신문은 없었기에 대선 보도에서의 감성지수 강도 차이는 신문사의 정치 성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 행태에는 ‘진보-중도-보수’라는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매체를 제외하면 중도 성향 매체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보도 지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 성향의 차이가 후보에 따라 더 공격적 내지는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차별적인 행태로 이어지는는 않았으며, 보수 매체 내에서 긍정/부정 보도 강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통해 볼 때 사실상 각 후보에 대한 보도 행태의 차이는 신문사가 가진 특성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oc2Vec과 감성분석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보수 성향 매체 간 보도 내용의 이질성은 앞선 딥러닝 분석에서 보수 범주의 정답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보-보수’ 스펙트럼을 국내 언론사에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움을 주장한 최현주(2010)와 김수정·정연구(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이어지는 것으로, 언론의 정파성 연구에 있어서 매체별 이념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분량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공식적인 선거 개시일인 2022년 2월 15일부터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월 9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하는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딥러닝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는 공식 선거 기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각 후보의 소속 정당별로 경선이 완료된 직후부터 분석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더 나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형을 만드는 등 본 연구의 방법론의 결과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범위에서 기인하는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후보 간의 차별적 보도 행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데이터의 범위가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 후보 간의 차별적 보도의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보다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후에는 특정 언론사가 갖

고 있는 문제의식과 이념적 시각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기형 외 2022). 마지막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도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그 이전의 대통령선거 보도에 대한 분석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주요 정당에 대한 보도 행태와 비교하였을 때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혹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다면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진숙. 2006.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3호: 7-52.
- 감미아·송민. 201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18(3), 53-77.
- 고현정. 202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공급사슬 리스크 관리의 논제 분석.” 『전자무역연구』 제19권 제3호: 65-83.
- 김경모·정은령. 2012.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저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7호: 109-136.
-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361-387.
- 김나현·이상엽. 2021. “신문사의 정치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내용 분석: 기계학습/딥러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방법 기반.”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3권 제1호: 69-105.
- 김도우·구명완. 2017. “Doc2Vec과 Word2Vec을 활용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한국어 신문 기사 분류.”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4권 7호: 742-747.
- 김수정·정연구. 2018. “한국 언론의 정치편향 성격에 관한 연구: 19대 대선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8호: 110-145.
- 김수정. 2020. “한국 문화정책에서의 문화 개념에 관한 연구: Word2Vec을 이용한 대통령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8권 제1호: 283-336.
- 남영자. 2020. “CNN을 활용한 방송 뉴스의 감정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4권 제8호: 1064-1070.
- 남지나·최윤정. 2010. “한국과 미국 TV뉴스의 대선보도 비교: 신 단위의 형식과 내용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4호: 87-121.

- 박대민. 2022. “미디어 인공지능 : 컴퓨터 비전 관련 딥러닝 모델의 미디어 동영상 분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8권 1호: 111-154.
- 박상민·나철원·최민성·이다희·온병원. 2018. “Bi-LSTM 기반의 한국어 감성사전 구축방안.” 『지능정보연구』 24(4), 219-240.
- 박상민·엄창민·온병원·정동원. 2019.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AR-KNU 감성사전 기반의 대학 평판도 평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11-21.
- 박상현·정민경·박지영. 2022. “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에서 등장하는 토픽 변화 분석 - 구조적 토픽 모형과 Word2Vec을 이용한 접근.” 『통일연구』 제26권 제2호: 99-156.
-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 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1992-2012년 국내주요 신문의 경우.” 『방송문화연구』 제26권 제2호: 33-66.
- 박중희. 2016. “세월호 참사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239-269.
- 박지영. 2020.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 및 선택적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상반된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29권 제3호: 213-244.
- 박지현·나은영. 2021. “정치적 동영상 콘텐츠의 선택적 이용이 태도극화에 미치는 영향: 집단에 대한 편향의 매개효과와 비판적 사고 성향·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5권 제5호: 112-154.
- 손영준. 2017. “정파성 따라 평행선 달린 북한 6차 핵실험 보도.” 『관훈저널』 59(4), 29-35.
- 송병권. 2019. “여론조사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편향: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제4호: 69-93.
- 송준모·강정한. 2018. “메갈리아의 두 딸들: 익명성 수준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제52집 4호: 161-206.

- 양승찬·신지희. 2022. “선거뉴스 선택적 노출이 의견보강 정보처리, 의견공고화 및 온라인 참여 활동에 미치는 연구: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배경으로.” 『의정연구』 65권 0호: 141-173.
- 엄기홍·김대식. 2021. “온라인 정치 여론 분석을 위한 댓글 분류기의 개발과 적용: KoBERT를 활용한 여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20권 제3호: 167-191.
- 원희영·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9권 제1호: 117-148.
- 유현중. 2008. “선거에서 정보환경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 대통령선거(제14대-제16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155-188.
- 윤영철·김경모·김지현. 2015. “의견 다양성을 통해 본 언론매체의 이념적 지형도: ‘경제민주화’ 이슈 보도의 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9호: 35-64.
- 이규호·이준환. 2021. “코로나19 2차 유행기 “사회적 거리두기” 보도 분석: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언론사 선정 주요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5권 6호: 249-294.
- 이기형·황경아·김은정. 2022. “언론이 재현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포퓰리즘'의 특징과 쟁점: 주요 일간지의 관련 사설에 관한 비판적인 텍스트 분석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30권 3호: 187-276.
- 이상기. 2014. “이중 잣대와 한국 언론: 인사청문회 보도에 나타난 이중 잣대(진영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0권 2호: 284-324.
- 이승엽·양기문·이상우. 2017.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1호: 149-183.
- 이완수·배재영. 2014. “영상보도의 기계적 공정성: 19대 대선후보 보도에 나타난 ‘전략적 의례’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0권 4호: 365-403.

- 이예담·김민지·김범준. 2018. “대통령 담화문에 나타난 보수와 진보의 언어사용 특성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9집 제2호: 61-78.
- 이종혁. 2021. “매체 간 뉴스 동질화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Doc2Vec을 통한 문서 유사도 측정의 활용.” 『언론정보연구』 제58권 제4호: 5-48.
- 이한수. 2021. “선거보도의 역동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의정연구』 64권 0호: 156-188.
- 정지선·김동성·김종우. 2015. “온라인 언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뉴스 감성분석을 통한 기업별 주가 예측.” 『지능정보연구』 제21권 제4호: 37-51.
- 조은영·유세경. 2014.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철도노조파업 이슈에 대한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3호: 433-461.
- 조진만. 2015.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성 평가.” 『현대정치연구』 제8권 제2호: 47-70.
- 진영재. 2023. 『선거정치 : 정당, 후보자, 유권자.』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차영란. 2020.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 전, 후에 대한 댓글 비교 분석: LDA와 Word2vec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0호: 119-133.
- 채영길·유용민. 2017. “네이버·다음 모바일 포털 뉴스 플랫폼의 19대 대통령 선거 기사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4권 제4호: 195-242.
- 최유정·정유진·김민정·윤호영·김나영·첸루·김나영·여은·이주희·신주연·강제원. 2021. “19대 대선 TV토론에 대한 방송뉴스 영상의 균형성, 진실성 연구.” 『방송통신연구』 114호: 113-157.
- 최창식·임영호. 2021a. “대통령 관련 보도의 감성분석과 정파성의 지형: 신문별 감성지수의 차이, 일관성, 대통령 지지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5권 1호: 35-70.
- 최창식·임영호. 2021b. “대통령-언론 간의 '밀월관계' 가설 검토: 역대 대통령

- 관련 보도에 대한 감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35권 제6호: 111-147.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2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슈 주기 및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한국언론학보』 제65권 1호: 148-189.
- 홍주현·손영준. 2017. “사드 루머(THAAD rumor) 보도에 나타난 한국 언론의 정파성 : 네트워크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4호: 152-188.
- Albawi, S., Mohammed, T. A., and Al-Zawi, S. 2017. “Understanding of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n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and technology (ICET) (pp. 1-6). Ieee.*
- Budiarto, A., Rahutomo, R., Putra, H. N., Cenggoro, T. W., Kacamarga, M. F., and Pardamean, B. 2021. “Unsupervised News Topic Modelling with Doc2Vec and Spherical Clustering.” *Procedia Computer Science* 179: 40-46.
- Burscher, B., Vliegenthart, R., and Vreese, C. H. D. 2016. “Frames beyond words: Applying cluster and sentiment analysis to news coverage of the nuclear power issu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4(5): 530-545.
- Chiang, Chun-Fang, and Brian Knight. 2011. “Media Bias and Influence: Evidence from Newspaper Endorsement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8(3): 795-820.
- Derczynski, L. 2016. “Complementarity, F-score, and NLP Evaluation.” *In Proceedings of the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LREC'16)* 261-266.
- Donghwa Kim, Deokseong Seo, Suhyoun Cho, Pilsung Kang. 2019. “Multi-co-training for document classification using various

- document representations: TF-IDF, LDA, and Doc2Vec.” *Information Sciences* 477: 15-29.
- Holbrook, T. M. 1999. “Political Learning from Presidential Debates.” *Political Behavior* 21(1): 67-89.
- Huang, Z., Xu, W., and Yu, K. 2015. “Bidirectional LSTM-CRF models for sequence tagging.” *arXiv preprint arXiv:1508.01991*.
- Iyengar, Shanto, and Hahn, K.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 19-39.
- Jacobs, Lawrence R. and Robert Y. Shapiro. 2005. “Polling Politics, Media, and Election Campaigns: Introdu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69(5): 635-641.
- Kahn, K. F., and Kenny, P. 2002. “The slant of the news: How editorial endorsements influence campaign coverage and citizens’ view of candid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2): 381-394.
- Le, Q., and Mikolov, T. 2014.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sentences and document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1188-1196. PMLR.
- Leeper, Thomas J., and Rune Slothuus. 2014. “Political Parties, Motivated Reasoning, and Public Opinion Formation.” *Advances in Political Psychology* 35(S1): 129-156
- Levendusky, M. 2013a. “Partisan media exposure and attitudes toward the opposi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0(4): 565-581
- Levendusky, M. 2013b. *How Partisan Media Polarize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u, B., and Zhang, L. 2012. A survey of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In Mining text data* (pp. 415-463). Springer, Boston,

MA.

- Liu, B. 2017. "Many facets of sentiment analysis." In *A practical guide to sentiment analysis* 11-39.
- Lopez de Leon, Fernanda L. 2013. "The Tuesday Advantage of Politicians Endorsed by American Newspapers."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13(2): 865-886.
- Mikolov, Thomas, Kai Chen, Greg Corrado and Jeffrey Dean. 2013a.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s in Vector Space." *arXiv* 1301.3781v3.
- Mikolov, Thomas, Yih, Wen-tau Yih and Geoffery Zweig. 2013b, "Linguistic regularities in continuous space word representations." In *Proceedings of the 2013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Atlanta, Georgia. June.
- Novaković, J. D., Veljović, A., Ilić, S., S., Papić, Ž., and Tomović, M. 2017. "Evaluation of classification models in machine learning." *Theory and Applications of Mathematics & Computer Science*, 7(1): 39-46.
- O'Keefe, G. 1975. "Political Campaign and Mass Communication." S. Chaffee. ed. *Political Communication*. Beverly Hills: Sage.
- Prior, M. 2013.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6: 101-127.
- Singh, A. K., and Shashi, M. 2019. "Vectorization of text documents for identifying unifiable news articles." *Int. J. Adv. Comput. Sci. Appl*, 10.
- Staudemeyer, R. C., and Morris, E. R. 2019. "Understanding LSTM--a tutorial into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s." *arXiv preprint arXiv:1909.09586*.

Stroud, Natalie Jomini.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hoemaker, P. J., Vos, T. P., and Reese, S. D. 2009. Journalists as gatekeepers. *In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93-107.

Yoon Kim. 2014.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Sentence Classification," *Proc. of the 2014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EMNLP)*, 1746-1751

Yu, Y., Si, X., Hu, C., and Zhang, J. 2019. "A review of recurrent neural networks: LSTM cells and network architectures." *Neural computation* 31(7): 1235-1270.

An Analysis of Political Bias in Major Newspapers' Coverage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 Focusing on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and comparison of similarity using Doc2vec

Sanghyun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ce of political bias in the coverage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by major daily newspapers and to identify its manifestations. To achieve,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reporting by political orientation with an artificial neural network-based deep learning model, examined the distribution of newspapers by measuring similarity with Doc2Vec, and analyzed the difference in reporting tendency according to political orientation with sentiment analysis. As a result, first, the deep learning model was able to classify 'progressive-moderate-conservative' with an accuracy of 89.8%, and in binary classification between progressive-oriented newspapers and newspapers of other orientations, an accuracy of over 93% was achieved, indicating that differences in coverage depending on political orientation could be identified. Second, Doc2Vec analysis revealed that except for the progressive media Kyunghyang and Hankyoreh, and the conservative media Munhwa-Ilbo and Chosun-Ilbo, the other newspapers had high similarity with moderate-oriented newspapers. Third, sentiment analysis showed that progressive media tended to use more negative terms in coverage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but no newspaper showed a difference in the intensity of positive/negative reports according to candidate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orientations of 'progressive-moderate-conservative' in the coverage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by major newspapers, and that the coverage terrainins centered around moderate-oriented media.

*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Keywords: Deep learning, Doc2Vec, Media, Political bias, 20th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Sentimental analysis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4.3.9.45>

【연구논문】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 인과적 설명: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대처리즘을 중심으로*

정 영 우*

논문요약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분석틀과 경로의존(path dependence)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을 통해 영국 대처리즘(Thatcherism)의 등장을 설명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영국 직업훈련 제도의 역사적 변화, 그리고 '결합있는 포드주의'로서의 영국 정치경제 체제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이 과거로부터 계승한 제도적인 유산을 자유시장경제로 전제한 뒤 1980년대의 대처리즘 등장을 설명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입장이 경로의존 개념의 적용에 있어 미흡하며 실제 일어난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본 연구가 제기한 방법론적이고 이론적인 쟁점 중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경로의존을 따르는 제도들의 균형상태가 실제로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적응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선택하는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 특정 국가, 특정 정책 영역에서의 제도적인 유산과 제도들의 집합적인 특성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방법론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대신 현실에서는 제도 집합이 갖는 특성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제도의 집합이 갖는 복수(plural)의 성격 중 일부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만 주도적인 경향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경로의존 개념을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역사적 제도주의, 경로의존, 대처리즘, 결합있는 포드주의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2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I. 서론

교육학 및 정책학을 중심으로 역사적 제도주의의 분석틀(framework)을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정부 정책 변화 및 정치적 입장, 정책 기조의 변화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강나은·김찬동 2022; 김민규 2023; 김혜정 2023; 문현미 2021; 박상완 2015; 백명숙 2022; 허남식 2020). 이들 연구는 주제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이론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path dependence) 개념을 중심으로 과거 시점에 내려진 정책적인 선택이 이후 정책 결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¹⁾ 또한 이들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론과 경로의존 개념을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한 논의만 한 뒤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분석틀이 처음 학계에 소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그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관행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을 경험적인 사회과학연구에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현우에 따르면,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을 이용하여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구현우 2009). 하나는 경로의존의 개념을 이용하여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선택지를 구조화하고 제약한다는 점을 묘사적으로 혹은 기술적(descriptive)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인과적인 설명을 중시하는 사회과학 일반의 통념에 따르면 연구자에게 관심을 끄는 결과물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다소 느슨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구현우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정치학의 고전인 퍼트남이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이탈리아의 민주주의 제도의 성숙도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및 신뢰(trust)의 차이가

1) 피터 홀과 로즈마리 테일러는 신제도주의 이론의 등장 이후 초기 학술 작업들을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세 가지의 하위 범주로 정리하였다(Hall and Taylor 1996). 이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을 행정학과 정책학 관점에서 정리한 작업으로는 하연섭(2002), 구현우(2009)를 참고할 것.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추적하는 작업이 경로의존 개념을 기술적인 서술에 접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3).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은 경로의존 개념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 선택의 지속을 설명하는 접근이다(North 1990; Pierson 2004; Mahoney 2000; Mahoney and Thelen 2009). 이 접근에 따르면,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개념이나 매몰비용(sunk costs) 개념을 이용하여 한 번 정해진 제도적인 배열이 부가하는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측정하여 행위자의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물로서 경로의존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특정한 제도의 형성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일 때 행위자들은 그 제도를 만들고 계속 이용할 유인 동기가 발생한다고 보는 제도 경제학의 성과를 제도의 생성과 유지를 설명하는데 적용하기도 하였다(Williamson 1979).

이 같은 두 번째 관점을 확장하여 사회과학자들은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제도적인 특징들이 세계 경제 위기나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을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해커(Hacker)와 피어슨(Pierson)은 미국에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요구가 꾸준히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복지 제도가 미발전된 상태로 경로의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2016). 마호니(Mahoney)와 텔렌(Thelen)은 이러한 경로의존 개념을 확장시켜 긍정적인 환류 효과(positive feedback) 이외에도 부정적인 환류효과(negative feedback)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009). 더 나아가 이들은 제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양방향의 환류 효과 때문에 사회 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유형화하며 내생적인(endogenous) 제도 변화의 메커니즘도 유형화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제도적인 환경이 형성되었을 때 그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물질적인 혜택, 상징적인 자원, 정치적 권력 등을 축적하는 집단과 그러한 자원들을 잃어가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새로운 제도의 등장이 경로의 지속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낸 제도의 승리자(winners)와 제도의 패배자(losers)가 된다. 이 때 승리자와 패배자는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두고 갈등을 벌이며 그 양상에 따라 제도가 특정한 형태로

지속되거나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주의 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로의존 개념은 경험 연구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과거 제도나 이전 시대의 관행이 경로의존을 따른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작 시점과 지속 시점,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개입하는 정치적인 동학을 매우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분석하지 않는다면, 흔히 “과거에 그러하였으니 지금도 그러하다” 식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지 않는 동어반복적인(tautological) 설명으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의 적용 사례 중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영국 정치경제 모델이 대처리즘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경로의존 개념의 올바른 적용을 논의할 것이다.

영국 정치경제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경로의존 개념의 올바른 사용을 논의하는 본 논문에 매우 필요한 작업인데 그것은 비교정치경제의 분야에서 영국 사례가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석상의 어려움을 특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경제 체제는 오랫동안 유럽대륙의 경제체제와 구분되는 시장 중심적인 체제로 여겨졌다(Shonfield 1965). 그러나 1970년대 초, 중반을 거치면서 영국 노동당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임금 및 물가 상승을 통제하는 한편 산업 평화를 유도하고자 하였고 세계 시장에서 영국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하여 마가렛 대처(Magaret Thactcher)를 중심으로 한 보수당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전환을 경험하였고 미국의 레이저노믹스(Reaganomics)와 함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이끌었다. 경로의존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극적인 정책 전환을 경험한 영국의 사례는 결코 분석하기에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영국 고유의 정치경제 체제가 본래 경로를 회복한 사례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김영순 2005), 아니면 정치적 위기를 포함한 중대국면(crticial juncture)을 경험한 뒤 새로운 평형(equilibrium)을 찾아 안정화된 것인지(Hay 2001)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상의 어려움은 앞서 지적하였듯 무엇을 경로의존 현상으로 파악하고 그 경로의 시작이 언제로 볼 것이며 경로의존을 일으키는 메커

니즘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의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경로의존 개념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영국 정치경제의 사례를 소개한 뒤 4장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사례로 영국 직업훈련 제도를 선정하여 그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2차 문헌을 중심으로 추적하며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규정한 영국 정치경제 체제의 제도적인 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5장에서는 영국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밥 제소프(Bob Jessop)의 설명에 근거해 특정 경로가 우발적으로 만들어져 경로의존 하기 이전에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6장은 결론으로 이전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며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II.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등장과 경로의존 개념의 적용

2000년대 초반 세계는 이른바 세계화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였다. 국민국가 경제에 더욱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게 된 국제시장의 등장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적응 전략에 대해서 학술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 논의 중에서 대중들에게 그리고 학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주장은 영미식 모델로 세계 각국의 경제체제가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수렴론에 따르면,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시장에 따른 조정이다. 수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들은 끊임없이 탈규제와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담보하는 전략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이 같은 수렴론을 반박하는 입장들도 등장하였다.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 역시 수렴론에 반대하며 등장하였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제도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경로의존 개념과 행위자들 중 특히 고용주들의

전략적이고 합리적 선택을 분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각 국가들의 경제 모델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하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모델(Liberal Market Economy)과 조정시장경제모델(Coordinated Market Economy)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모든 국가들이 영미식 모델로 수렴되지 않는다(Soskice 1990; Hall and Soskice 2001).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국가가 탈규제의 동일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보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근거한 수렴론에 강력한 반대 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계 전반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학계는 본격적으로 경험적인 분석에 경로의존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인과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경로의존 현상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경제체제로 세계 각국이 수렴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예상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갖는 기능주의적(functionalistic)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따르면, 제도주의 이론에 따라 국가들은 마치 탄생부터 지닌 목적(telos)을 실현하듯, 자유시장경제모델과 조정시장경제모델 중 하나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유시장경제모델에 속하는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모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탈의 경로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본래의 자리인 탈규제, 민영화, 유연화의 제도적 배치로 '돌아가게' 된다고 가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무엇이 이론적 가설인지, 무엇이 이를 뒷받침할 경험적인 근거인지를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이 같은 비판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연역적으로 구성된 베버 식의 이념형(ideal type)과는 다르다는 평가와도 맥을 같이 한다(Hancké et al. 2006, 7).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라는 이념형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적인 사실들을 회고함으로써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역적으로 이념형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가설을 제기한 후 경험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베버 식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제기하는 가설들은 이미 미국과 독일의 사례들로부터 도출된 것이기에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순환적인 논

리를 따르기 쉽다. 즉 미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식 모델에 적합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며, 독일의 정치경제 역시 독일식 모델에 적합하여 경쟁력을 지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식의 동어반복적 주장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대해서 경로의존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경로의존 개념을 고려할 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와 역사 구조적인 상황의 특정한 접목이 중요하며 만약 그 순서와 그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경로의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틸리의 설명은 사건들의 순서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사건의 유무와 독립적인 사건들 사이의 특정한 조합이나 상관성(autocorrelation)만을 고려하는 테다 스카치폴(Skocpol) 방식의 비교 역사적 접근(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과 분석적 차별점을 두는 것이다(Tilly 1988, 710). 또한 경로의존 개념의 적용을 두고 순서와 맥락을 중요하다는 점은 역사학자 윌리엄 수얼(William Sewell, Jr.)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에 따르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룰 때 그 순간을 마치 스냅샷을 찍어 맥락에서 추출하여 “얼린(freezing)” 후 여기에서 설명변수를 추출하는 구조적인 접근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들을 결코 파악할 수 없다(Sewell 2005, Chap. 3).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각 국가 사례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조절시장경제 모델을 도출하였고 이 각각의 모델이 역사적으로 경로 의존했다고 평가할 때 틸리와 수얼이 강조한 순서와 역사적인 맥락들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경로의존과 관련하여 방법론적으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비판은 우발성(contingency)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우발성은 경로의존 현상을 분석적으로 엄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험적 대상이 갖추어야 하는 이론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경로의존을 정치학 및 사회학에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이후에도 경로의존 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경로의 형성 자체가 그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닌 우발적(contingent)이어야 한다는 점이다(Pierson 2000, 253; Mahoney 2000, 515). 가령 어떤 국가의 정치경제가 경로의존 한다

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의 시작 시점과 지속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명확해야 한다. 만약 이미 사건들의 연쇄의 패턴을 관찰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연쇄를 새로운 경로라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로의존을 판단할 때 두 개 이상의 사건들의 연쇄 고리(chain)가 특정한 국면(conjuncture)에서 만나서 각 사건의 고리와 그 연쇄만으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들의 연쇄를 만들어 내고 그 흐름이 한 번 시작된 이후에는 긍정적인 환류(positive feedback)를 만들어 냄으로써, 혹은 대응 반응의 연쇄(reactive sequences)를 만들어 냄으로써 그 경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는 것을 경로의존이라고 규정한다.²⁾ 이 규정에 따르면,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경로의존 개념을 적용한 방법은 매우 분석적으로 불충분하며 엄밀하지 않은데 그것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경로의존 현상인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조정시장경제 체제가 각각 어떤 우발성을 거쳐 어떤 재생산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경로의존 개념의 적용을 두고 앞서 제기된 쟁점들과 관련하여 영국의 정치경제 모델 안에서 일어난 변화인 대처리즘(Thatcherism)의 등장을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마호니에 따르면 긍정적인 환류나 대응 반응의 연쇄(reactive sequences)가 경로의존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대응 반응은 특정 사건에 따른 사회적 집단 혹은 사회 전체의 대응을 말한다. 마호니가 제시한 대응 사례는 1960년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이 미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발전경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킹 목사의 암살 이후 사회적 소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그 사건(암살)에 대응하여 그전까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권리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도시 계층에 집중된 흑인 및 다른 인종적인 소수자들을 즉시 구난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 그 이후 미국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은 경로 의존하여 주로 인종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복지 수혜자들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경로의존 하였다(Mahoney 2000, 526).

Ⅲ.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본 대처리즘의 등장

1.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과 대처리즘

영국 정치사에서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하기 1년 전인 1978년 말부터 1979년 초까지를 ‘불만의 겨울’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는데 이 시기 동안 영국의 주요 노동조합들이 정부가 제안한 임금 인상분을 수용하지 않고 연쇄적인 파업을 벌이며 영국의 정치경제를 마비시켰던 시기였다(Hay 1996b). 이렇게 대규모의 파업이 산업 부문을 넘어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된 연유는 노동당 정부와 노동계가 맺은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이 노동계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Oil Crisis) 이후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노동계와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을 맺어 노동계를 억압하던 산업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Act)을 폐지하고 노동 단체들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대가로 노조의 자발적인 임금인상 억제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아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감소되었고 노동당 정부가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가격 정책을 충분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노동조합들은 대규모 파업을 벌여 저항하였다(Hay 1996a, 256-257).

노동조합의 대규모 파업이 겨울 동안 지속되자 영국 시민들이 경험해야 했던 불편도 커졌으며 이에 따라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파업을 벌이는 노조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도 커졌다. ‘불만의 겨울’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당시 사회 운동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대처리즘은 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힘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여 보수당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Marsh 1992, 59-64; Hay 1996b, 148). 해이(Hay)에 따르면, 불만의 겨울 동안 신보수주의자들은 먼저 국제사회에서 시작된 외부적인 경제적 위기를 파업 참여자들이 만든 위기로 새롭게 규정하였고 파업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시 노동당 지도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동시에 파업 참여자를 엄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복원하고 시장 매커니즘에 가격을 온전히

맡기며 통화주의적 접근을 취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위기를 해소할 책임자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은 1979년 선거에서 노동당 정부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Hay 1996a, 270-273). 이후 대처리즘은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 원리로 자리 잡았다.

2.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로의 복귀로서 대처리즘의 등장

그렇다면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는 대처리즘의 등장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은 제도적 상보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에 주요한 점을 두어 제도들이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로 분화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제도적 상보성이란 한 나라가 경제영역의 한 영역에서 특정한 유형의 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영역에서도 상보적인 관행들을 발전시킬 것이라 개념이다(Hall and Soskice 2001, 17). 그리고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다루는 제도들이란 한 시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Hall and Soskice, 2001, 13). 따라서 제도의 변화는 기존 제도들과 융합되었을 때 그 상보성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학의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논리를 적용하여 제도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입장에 따라 불만의 겨울을 거쳐 영국의 정치경제 체제는 제도적 상보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처리즘은 그 등장이 극적이었고 그것이 포괄하는 정책 내용이 새로워 보일지라도 이전 영국의 제도적 배열의 집단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입장에서 영국 사례를 다루는 연구들은 위와 같은 논리를 채택하여 영국의 생산 체제와 복지국가 유형이 서로 조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복지 제도가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는 생산 체제와 복지국가의 유형이 조응하는지 아닌지를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술 형성(skill formation)을 매개로 평가한다(Estevez-Abe et al. 2001). 그 구체적인 논리는 아래와 같다.

기술 형성에는 회사-특정 기술(firm-specific skills), 산업-특정 기술

(industry-specific skills)과 일반기술(general skills)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의 습득 과정을 내포한다. 회사-특정 기술은 고용된 상태에서 받는 훈련을 통해 습득되며 산업-특정 기술은 도제 교육과 직업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된다. 일반기술은 대중 교육을 통해 습득되며 특정 회사나 특정 산업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비 고용인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세 가지 기술 형성 중 무엇을 선택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한다(Estevez-Abe et al. 2001, 150).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은 기술일수록 습득할 때 위험이 적으며 특정 회사나 특정 산업에만 사용되는 기술일수록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을 익히는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재취업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시장경제에서처럼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국한된 기술을 예비 고용인들에게 습득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와 접목된 형태의 '보험'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반대로 영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보편적인 기술 형성을 촉진시키고 그것에 걸맞게 보험의 정도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전후 영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영국의 생산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체제는 사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영순 2005, 199). 이러한 부정합은 '사회협약'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공급 측면에서 케인즈주의적 정책 개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식료품 가격의 통제, 주택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로 실질임금을 보전하게 하는 노동당 정부의 시도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적 부정합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협약을 통해 시행된 케인즈주의적 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경로의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Wood 2001, 250). 먼저 고용주들은 그들의 비교우위를 자유주의적인 생산 체제로부터 얻고 있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도 형태를 거스르는 정책을 통해 그들의 비교우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자유시장경제의 유형에 있었던 고용주들에게 케인즈주의적 공급 정책은 집단행동의 문제(the collective action problem)를 야기하였다. 조정시장경제에서 존재하는 위계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 협의체가

없을 경우 정책을 강제하고 규제할 수단이 없어 고용주들이 쉽게 이탈하거나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 제도의 변화와 정치의 문제

이렇게 경로 의존성 이론에 따라 제도들의 잘못된 조합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굳이 그러한 조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영국에서 시민주의적 복지 제도와 자유주의적 생산제도의 불행한 결합이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옹호하는 우드는 영국의 정치제도의 특수성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Wood 2001, 259-260). 집권당 내각에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는 영국 특유의 구조 때문에 제도적 상보성이 주는 이익을 거스르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1979년 이전의 영국은 경로 의존성에 반하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예외적인 시기의 실험은 실패하고 영국은 다시 역사적인 경로로 '되돌아' 갔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스키스는 제도들의 잘못된 조합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았다(Soskice 1990, 130-133). 기업들 간의 집합행동을 조율하고 무임승차 문제를 단속할 제도적인 유산을 갖지 못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국가에서도 조정시장경제 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기업 조정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정치학은 결국 제도적 상보성의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텔렌은 이러한 제도 결정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권력관계의 평형상태와 경로의존 현상을 접목시켜 정치적인 동학을 설명하였다(Thelen, 2001, 71-73). 텔렌은 관성이나 경로의존으로 보이는 현상은 사실이 사실 권력관계의 평형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텔렌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 사례에서도 개별 공장 차원에서 강력한 조직력을 지닌 노조에 의해 일시적인 조정(coordination)이 발생하여 조정시장경제의 특징을 일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한 조정의 기능은 이를 장기적으로 지탱해 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한 권력관계의 균형상태에 변화가 생긴다면 쉽게 와해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영국이 대처리즘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서의 특징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된 것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일반적인 명제에 부합한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체제는 그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결국 그 체제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기초를 만드는데 실패하여 별도의 조정 기능을 담당할 제도를 두지 않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갔던 것이다. 또한 시장 이외의 제도적 장치들 통해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코포러티즘적 관행은 1차 석유파동이 초래한 권력 균형의 변화 속에서만 일시적으로 유지될 뿐이었던 것이다.

텔렌의 입장은 이후 홀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보다 정교화되었다(Hall and Thelen 2009). 이들은 적합성의 논리(the logic of appropriateness)를 적용하여 행위자들이 제도 선택지 리스트 속에서 무엇이 더 기존 제도들과 어울릴 제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복수의 제도적 선택지 안에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행위자들을 상정함으로써 홀과 텔렌은 제도가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겉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행위자들이 끊임 없이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 제도들의 재생산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은 기존의 제도들의 배열 속에서 구조적으로 규정되며 제도 형성의 순간이나 재생산의 순간에 개입한다. 이 같은 홀과 텔렌의 해석을 확장한다면,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대처리즘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은 결국 행위자들이 본래의 경로에서 벗어난 성격의 제도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상보성에서 오는 이익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로 집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경로의존에 입각한 해석이 20세기 영국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제도적 상보성의 한 축을 이루는 기술 형성 과정과 직업훈련제도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2차 문헌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IV. 영국 직업훈련제도의 경로의존과 변화

1. 직업훈련제도의 변화: 1960-1989

본 절에서는 영국의 직업훈련제도의 등장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도의 형성부터 지속, 그리고 대처리즘의 등장 이후 제도의 성격 변화를 알랜 턱만(Alan Tuckman)의 논의를 중심으로 추적할 것이다(Tuckman 1996). 영국에서 근대적 직업훈련제도의 발전 역사는 앞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통해 일괄했던 대처리즘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 각각 대응한다. 그런데 대처리즘으로의 전환 이후의 직업훈련제도의 변화 역사를 추적해보면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관련 제도들이 단순히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같은 맥락을 보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자.

1960년 이전 영국에서는 육체노동자 양성을 위해 도제제도(apprenticeship)를 적극 이용하였다. 영국의 도제교육은 틀 지어진 교육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의적인 개입의 여지가 많은 교육 방식이었으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교육제도와는 달랐다. 미, 영, 일 모두 자유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미국의 교육은 직업훈련 학교(colleges)의 민간 규약에 따라 운영되었고 일본의 교육은 기업 내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Tuckman 1996, 139).

턱크만에 따르면, 영국 도제제도는 196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산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미국의 사례를 따라 대량생산체제가 도입된 결과 영국에서 장인을 중심으로 한 도제제도의 유용성이 감소되었다. 동시에 바뀐 환경 속에서 교육 비용을 더 이상 고용주가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점도 도제제도의 변화를 촉진하였다(Tuckman 1996, 137-138). 턱크만에 따르면, 영국의 2차 교육의 기간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에 비해 길었다. 2차 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후의 시행하는 직업교육을 말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에서 1차 교육에 할당된 기간이 영국에 비해 월등히 길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영국 노동자들은 짧은 1차 교육 기간을 마친 후 고용주가 주관하는 2차 교육에 참여하여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밟았다. 이는 곧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 산업 국가들에 비해 영국에서 2차 교육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결과로 이어졌다(Tuckman 1996, 139). 민족경제에서 산업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은 고용주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선별적으로 2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자유 시장의 작동 원리에 기술 숙련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 전통적인 도제제도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던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직업훈련법(the Industrial Training Act)의 제정 이후이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인력교육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직업훈련위원회(ITBs: the Industrial Training Boards)가 만들어졌고 중앙에는 이를 감독할 중앙훈련위원회(CTC: Central Training Council)가 설립되었다. 직업훈련위원회들은 기본적으로 삼자협의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재정(levy)을 당사자들로부터 확보할 권한을 부여받았다(Tuckman 1996, 139-140).

직업훈련을 위해 결성된 삼자협의체적 기구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고용주에게만 집중되던 직업교육의 비용이 분담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기술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에는 거의 효과를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직업훈련위원회의 부담금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직업훈련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은 특정 기업의 요구에만 맞춘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웠다. 사실 직업훈련위원회 자체가 장인을 중심에 둔 도제시스템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당연해 보인다(Tuckman 1996, 140).

70년대 들어 직업훈련위원회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교육 기관으로서 주목받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실업문제에 대처할 주요 기구로서 Manpower Service Commission(MSC)가 1973년 발족하였다. 이 기구는 1973년에 통과된 Employment and Training Act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25년간의 고도성장의 시기가 끝나자, 영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에서 실업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1차 석유파동 시기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케인즈주의적 개입 정책 기초를 반영하고 있다. MSC는 지역의 직업훈련위원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영국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수급을 예측하여 관련 정부 부처인 고용부(Departmetn of Employment)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Tuckman 1996, 141). 이 기구를 이용하여 영국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였다.

1979년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내각이 출범하자 MSC를 비롯한 직업훈련위원회의 전체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동시에 지역 직업훈련위원회를 지원하는 MSC의 역할은 중지되었고 지역 직업훈련위원회(ITBs)의 운영 권한은 바로 지역 고용주들 개개인에게로 이양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위원회의 운영비 부담을 꺼려한 고용주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지역 위원회는 형해화되거나 상당수는 폐지되었다(Tuckman 1996, 142).

그러나 이러한 삼자협약적 직업 교육 기관들은 대처리즘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실업은 여전히 증대하고 제조업은 쇠퇴를 경험하고 있으며 도제제도는 붕괴되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다시 힘을 얻었던 것이다. 결국 MSC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보수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청년기회프로그램(YOP: the Youth Opportunity Programme)은 정규 학교 교육을 마친 자에게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규모로 제공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 제도에 해당하는 YOP 제도는 훈련생들의 저임금화, 직원으로 정식채용이 잘 되는 않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보수당 정부는 MSC를 통해 다시 청년기회프로그램 제도를 비숙련 고용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켰고 동시에 교육 과정에 대한 고용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노력은 청년훈련계획(YTS: the Youth Training Scheme)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보수당 정부의 고용정책 기초가 되었다. 청년훈련계획은 두 가지 양식으로 나뉘어졌다. A 양식은 고용주에 의해 회사 구내에서 시행되며 B 양식은 직업훈련워크샵(training workshop)에서 진행되었다. 곧 청년훈련계획은 장기채용을 위한 잠재적인 인재모집의 창으로 기

능하였다. 1986년 기준으로 학교를 마친 이들의 1/4 정도가 YTS 코스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Tuckman 1996, 142-143).

2. 직업훈련 제도 변화의 함의

터크만의 연구를 통해 파악한 영국 직업훈련제도의 역사적인 변화 과정이 주는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직업훈련제도에 국한해서 자유주의 생산 체제라는 경로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우며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제도 변화의 역사는 과거의 경로가 새로운 경로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꼬여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점은 경로의존을 규명하기 위해 경로의 시작 시점을 분석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전통적인 기술 형성(skill formation) 제도는 명백히 자유 시장에 근거한 도제제도였다.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도 영국의 장인들은 숙련 공으로서 공장제 노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자본의 집약도가 높지 않았던 영국에서 2차 대전 후 장인의 기술력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Tuckman 1996, 138-9). 동시에 미숙련공 양성을 목적으로 한 도제제도도 존재하여 공장제 생산 체제를 뒷받침하는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영국의 자유주의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데 순기능을 했던 도제제도가 외생적인 충격이라고 할 만한 사건 없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1차 교육 시기를 짧게 유지했던 영국적인 전통이 지속되면서 고용주들이 다른 국가의 고용주에 비해 더 긴 시간 동안 노동자들의 기술 교육을 담당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을 두고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어느 시점에서는 기술 숙련이 일개 고용주가 감당할 수 없이 큰 부담이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기고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이 보수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1964년 입법이었다.

문제는 영국의 도제제도가 1964년의 입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을 경로의 단절과 새로운 경로의 시작으로 규정하기가 분석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제시한 제도적 상보성의 원리에 따라 영국

고용주들이 집단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어긋나는 제도들을 도태시켰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원과 경제적 유인 동기에 반응하여 전략적인 방식으로 개별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 상황을 더욱 합당해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행위자의 전략적인 부분을 가미한 텔렌(Thelen 2001)과 홀, 텔렌의 후기 작업(Hall and Thelen 2009)에 더 가까운 해석일 수 있다.

둘째, 대처리즘의 등장 이전에 만들어졌던 직업훈련 제도는 대처리즘의 등장 이후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듯 보였지만 소멸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갖고 재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영국 제도 변화의 실제 사례가 주는 이론적인 함의는 현실 속에서 제도의 지속, 폐기, 용도 변경은 제도적 상보성의 논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선 논의에서 경로의존 개념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우발성(contingency)을 규정했을 때 강조한 것처럼 해당 제도가 다른 계열의 사건의 연쇄와 만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유지될 때 그 현상을 경로의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 직업훈련제도 중에서 MSC(Manpower Service Commission) 제도는 70년대 초반에는 지역별 직업훈련위원회를 지원하는 삼자협약적 기구였다. 하지만 대처 정부의 초기에는 예산 삭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것은 지역 고용주들에게 직접 전가되었다. 그 결과 많은 지역에서는 직업훈련위원회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MSC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니었다. 대처 수상의 통화주의적 접근으로도 영국의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이전 영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지역 MSC 제도는 다시 강화되었고 그 역할은 상황에 맞게 재정의되었다. 이후 이 기구는 과거의 도제 제도의 유습들을 일소하고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현대화되고 시장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위한 기구로 변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 관행은 새로운 관행, 즉 기업적 문화(enterprise culture)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든 노조운동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하였다(Tuckman 1996, 149).

종합하면,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영국 직업훈련 제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경로의존 개념을 통해 제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속되었고 무엇이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실제 제도 변화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호흡으로 대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따르면, 영국이 대처리즘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가 제도적 상보성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민족경제를 재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직업훈련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이는 매우 단선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의 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 영국은 도제제도와 자유시장 제도가 결합된 체제를 유지했고 이후 1964년 직업 훈련법의 제정 이후에도 MSC를 만들어 각 지역의 노, 사, 정 삼자의 협력을 유도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구가 1980년대 중반 대처 정부 하에서 변모하면서 기존의 노조의 힘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과 잠정적인 고용인들을 매개하는 기술 숙련 기구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이는 이전의 유형의 지속이라는 단순한 분석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보다 복잡한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V. 경로의존에 대한 다른 해석: ‘결합있는 포드주의’의 지속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제시한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특성들이 경로의존을 통해 영국의 1980년대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해석은 영국 정치경제 상의 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만약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가정한 자유시장경제적 특성이 대처리즘 전후로 복원되었다는 평가가 무리한 것이고 영국의 정치경제적 특징을 자유주의적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교정치학적으로 영국의 경제 체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만약 영국에서 경로의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밥 제سوب은 ‘결합있는 포드주의(flawed Fordism)’라는 답을 제시하였다(Jessop 1991).

제سوب의 주장이 본 연구의 맥락에서 흥미로운 이유는 과거로부터 연유한 제도 및 제도의 다발(a set of institutions)과 이를 통한 국민국가의 정치경제학적 경로

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고 복수(plural)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현실화 되어 경로의존을 통해 이후 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지는 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해야 할 주제이지 선형적으로 규정할 연구 주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소개할 제습의 주장과 ‘결함있는 포드주의’ 개념을 소개하는 것은 본 연구가 이 관점에 따라 영국의 정치경제의 특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그 대신 본 장에서는 제습의 주장을 통해 본 연구의 2장에서 강조한 경로의존 형성의 조건으로 제시된 우발성(contingency)의 조건이 영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경로의존을 두고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³⁾

제습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가 부과한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뒤에도 미국과 같이 대량생산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그 대신 이른바 결함이 있는 포드주의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결함있는 포드주의’란 포드주의의 온전한 발전에 미달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서로를 지지하며 선순환을 이뤄 거시경제적 지표의 발전을 이루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세계는 포드주의를 적극 추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세계 무역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국가 그룹과 타국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을 수입하고 고가 사치품 및 기술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을 노려 경쟁하는 국가로 나뉘게 되었다(Jessop 1991, 136).

제습에 따르면 영국은 포드주의를 채택하여 효율적인 대량생산을 도모하는 수출 지향적인 국가도 될 수 없었고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처럼 틈새시장을 노리는 국가도 될 수 없었다. 우선 영국에서 대량생산이 일어나는 부분은 전통산업(traditional staple industries)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들 전통산업의 발전 속도는 다른 산업 국가에 비해 느렸고 대부분 전문적인 경영인에 의해 운영되지

3) 본 연구의 2장에서 경로의존 개념을 적용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이론적인 조건으로서 우발성을 제시했는데 특정한 역사적 국면(conjuncture)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의 연쇄가 만나기 이전에는 이후 생성될 경로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하나의 경로가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여러 가능성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경로의존 개념과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을 통해 인과적인 설명을 할 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않았으며 이들 산업 부문의 작업 현장은 영국 특유의 장인 숙련공(craft labour)으로 구성된 노조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영국 기업들은 포드주의를 적극 수용하여 규모의 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 산업들을 그대로 모방할 수 없었다. 제습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 영국 석탄 산업이 ‘결함있는 포드주의’의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 ‘결함있는 포드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생산체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인 임금(social wage)을 통해 유지되었던 완전 고용의 효과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완전 고용에서 나오는 구매력을 국내 생산 수준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국산품이 아닌 수입품을 소비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영국에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리고 포드주의를 선택했다면 대량생산의 이점을 이용해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데 영국의 수출 대상국들은 주로 과거의 영연방 식민지에 속하는 국가들로 국한되었다. 같은 포드주의를 선택해 대량생산체제를 운영했던 유럽의 산업 국가들이나 북미를 상대로 경쟁을 할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산업화 시기 이후 세계 분업 체계의 위계에서 정점에 서 있던 영국은 점차 아래로 향하게 되었다(Jessop 1991, 137-138).

제습은 ‘결함있는 포드주의’ 체제가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지속되었고 영국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았다(Jessop 1991, 138-139). 먼저 제습은 영국 산업구조가 1차 산업혁명 때의 산업유형으로 고착되었다는 문제를 먼저 지적하였다. 작은 규모의 자본, 석탄 산업 중심성, 싸고 미숙련 노동자들이 바로 1차 산업혁명으로 고착된 영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2차나 3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 과학 발전이 영국에서는 미비했다. 셋째로, 가족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본주의적 전문 경영 방식이 부재했다. 넷째로, 미비한 기술 교육의 결과 영국 산업은 여전히 장인(craft)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제습은 이 점이 미국의 대량생산체제처럼 표준화에 근거한 유연한 노동체제를 수립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습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결합있는 포드주의’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경직성이 강화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제습은 그 이유를 이전 체제의 경로의존에서 찾는데 영국 정부는 과거부터 시장개입적인(market-interventionist) 정책 능력을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영국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관료제적 능력이나, 노사정 합의에 근거한 코포리티즘을 수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으며, 프랑스 정부와 같이 국가 주도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개입주의적인 전략을 양성한 경험이 없었다(Jessop 1991, 140).

제습은 ‘결합있는 포드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처리즘의 시도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처리즘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영국 경제 체제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경로 변환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개입이다. 즉 포스트 포드주의의 유연화된 생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대처리즘의 행정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습은 이와 같은 대처리즘의 전환을 통해 영국이 이전의 ‘결합있는 포드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첫째로, 영국의 제도적 토양에서 포스트 포드주의의 유연화된 생산에 맞는 노동인력을 과연 국가개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영국이 세계시장에서 점하고 있는 취약한 경제적인 입지가 포스트 포드주의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가 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Jessop 1991, 142). 아울러 대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세금 감면 정책은 중산층의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온전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인 영국의 상황에서는 다시 수입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습은 이를 근거하여 대처리즘이 생산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Jessop 1991, 158). 이는 앞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대처리즘의 등장을 제도적 상보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시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해석이다.

제습의 설명을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먼저 영국 정치경제 체제의 과거 경로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때로는 연구자들 간의 해석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실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거의 어떠한 요소가 대처리즘

과 같은 영국 현대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을 경험하여 이후의 제도적인 배열이나 정책적인 결과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복수의 과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작업이어야 한다. 이는 경로의존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틀을 적용하는 다른 정책 분야의 연구에서도 적용되는 점이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을 중심으로 영국의 대처리즘의 등장을 설명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영국 직업훈련 제도의 역사적 변화, 그리고 ‘결합있는 포드주의’로서의 영국 정치경제 체제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국이 과거로부터 계승한 제도적인 유산을 자유시장경제로 전제한 뒤 1980년대의 대처리즘 등장을 설명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입장이 경로의존 개념의 적용에 있어 미흡하여 실제 일어난 제도상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틀과 경로의존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적인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로의존 현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들의 존속은 실제로는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나 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애초에 그 제도를 만들 때 행위자들이 의도한 것과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영국의 직업훈련 제도의 하나로 만들어진 MSC가 이후 고용주의 지지를 받지 못해 비활성화의 단계를 경험하고 1980년대 실업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재활성화 단계를 거쳤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국의 직업훈련 제도가 보인 변화의 경로가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잡하며 그 과정에서 제도의 탄생기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취지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의존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국민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과거의 제도적인 유산들과 그 제도적인 배열이 갖는 집합적 특성은 실제로는 한 가지로만 규정될 것이 아니라 복수(plural)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합하는 다양한 성향들 중에서 어떠한 성격의 제도적인 배열이 특정 역사적 국면을 거쳐 다른 사건들의 연쇄와 조우한 뒤에 그 사건의 이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이어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선형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을 통해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반드시 경로의존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경험적으로 충분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은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 개념이 인과적인 설명에 활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방법론적 엄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영국 대처리즘의 등장을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로의존 개념의 성립 조건을 실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경로의존 개념을 탈맥락적이고 기능주의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질적이고 역사적인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방법론적인 고민을 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강나은·김찬동. 2022. “한국 지방공기업의 정책변동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권 1호: 33-56.
- 구현우. 2009.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 패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권 2호: 37-72.
- 김민규. 2023. “EU,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한국의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의 경로의존성 비교 분석.” 『직업과 자격 연구』 12권 1호: 109-132.
- 김영순. 2005. “영국의 경험(1945-1979)을 통해 본 생산체제 - 복지체제 조응문제의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45집 2호: 185-206.
- 김혜정. 2023.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역할 연구: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통합교육과정연구』 17권 4호: 27-50.
- 문현미. 2021.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 공공외교 연구.” 『현대중국학회』 23권 3호: 35-78.
- 박상완. 2015.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교장공모제도 변화 분석: 정책변화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3권 3호: 323-350.
- 백명숙. 2022.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6권 2호: 39-74.
- 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권 4호: 339-359.
- 허남식. 2020.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20권 2호: 227-259.
- Estevez-Abe, Margarita, Torben Iversen, and David Soskice.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P. Hall and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45-183.

- Hacker, Jacob S., and Paul Pierson. 2016. *Winner-Take-All Politics: How Washington Made the Rich Richer- and Turned its Back on the Middle Class*.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Hall, Peter, and David Soskice. 2001. "Introduction to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P. Hall and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68.
- Hall, Peter, and Kathleen Thelen. 2009. "Institutional Change in Varieties of Capitalism." *Socio-Economy Reviews* 7(1): 7-34.
- Hall, Peter A., and Rosemary C. R. Taylor. 1996.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Political Studies* 44(5): 936-957.
- Hancké, Bob, Martin Rhodes, and Mark Thatchcher. 2006. "Introduction: Beyond Varieties of Capitalism." in B. Hancké, M. Rhodes, and M. Thatcher (eds.) *Beyond Varieties of Capitalism: Contradictions, Complementarities and Chan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3-38.
- Hay, Colin. 1996a. "Narrating Crisis: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Winter of Discontent.'" *Sociology* 30(2): 253-277.
- Hay, Colin. 1996b. *Re-stating Social and Political Change*. Buckingham, U.K.: Open University Press.
- Hay, Colin. 2001. "The 'Crisis' of Keynesianism and the Rise of Neoliberalism in Britain: An Ideational Institutional Approach." in J. Campbell and O. Pedersen (eds.)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3-218.
- Jessop, Bob. 1991. "Thatcherism and Flexibility: The White Heat of a Post-Fordist Revolution." in B. Jessop, H. Kastendiek, K. Nielsen,

- and O. Pedersen (eds.) *The Politics of Flexibility*, Aldershott: Edward Elgar.
- Mahoney, James. 2000.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4): 507-548.
- Mahoney, James, and Kathleen Thelen, eds. 2009.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sh, David. 1992. *The New Politics of British Trade Unionism: Union Power and The Thatcher legacy*, New York, N.Y.: ILR Press.
- North, Douglas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son, Paul.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well, William H., Jr. 2005. *Logics of History: Social Theory and Social Transforma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onfield, Andrew. 1965. *The Modern Capitalism: The Changing 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Power*.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oskice, David. 1990.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in H. Kitschelt, P. Lange, G. Marks, J. D. Stephens (eds.) *Commun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len, Kathleen. 2001. "Varieties of Labor Politics in the Developed Democracies." in P. Hall and D. Soskice (eds.) *Varieties of*

-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1988. "Future History." *Theory and Society* 17(5): 703-712.
- Tuckman, Alan. 1996. "Labour, Skills and Training." in D. Coates (ed.) *Industrial Policy in Britain*, New York: Macmillan Press, 135-155..
- Wood, Stewart. 2001. "Business, Government, and Patterns of Labor Market Policy in Britain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P. Hall and D. Sos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m*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47-274..
- Williamson, Oliver E. 1979. "Transaction-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22(2): 233-261.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e, and Causal Explanation: Explaining Thatcherism in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ory*

Yongwoo Jeung*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framework frequently used in various fields of social science research, and path dependence, which explains the reasons why political decisions or policy outcomes persist. Focusing on the emergence of Thatcherism in the UK,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Varieties of Capitalism(VoC) literature and its understanding of the UK's political-economic system. The study also delves into the evolution of the UK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the "flawed Fordism" to explain the change in the UK's political-economic system.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argues that the VoC theory, relying on the concept of path dependence and assuming the institutional legacy of a free-market economy allegedly determining the current UK economic system, falls short in explaining the actu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emergence of Thatcherism in the 1980s. It also discusses the proper theoretical conditions under which one can apply path dependence to empirical works in the social sciences.

Keyword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e, Thatcherism, flawed Fordism

투고일: 2024.01.31. 심사일: 2024.02.16. 게재확정일: 2024.03.06.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2.

** Assistant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4.3.9.1.75>

【연구논문】

어떤 의원들이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가?

정당 충성도,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 선거 안정도를 중심으로*

강 신 재**

논문요약

상임위원회 배정은 정책 영역에서 의원들이 주요 활동 영역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차기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여 재선에 유리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원들이 재선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가? 본 연구는 정당 충성도,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 선거 안정도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나타나는 동학을 파악한다. 20대 국회 후반기의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 전반기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후반기에도 동일 유형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정당 충성도와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수당과 소수당을 구분한 모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선거 안정도는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정당 충성도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정치 맥락에서 의원의 입법 행태와 상임위원회 배정의 동학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배정, 특수재, 정당 충성도, 선거 안정도, 재선

* 이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강신재 2023) 5장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후연구원.

I. 서론

상임위원회 배정은 정책 영역에서 의원들이 주요 활동 영역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별 상임위원회는 소관 정부 부처의 정책 영역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안을 심사한다(Shepsle and Weingast 1987). 또한, 상임위원회마다 제공하는 보편재와 특수재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떠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받는지의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의원이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경우 지역구의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SOC)을 확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유권자에게 업적을 홍보하기 유리하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여(Stratmann 2013; 박상운·이호준 2015) 재선에 유리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위원회, 재선에 유리한 중요 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다(박천오 1998; 가상준 2007; 이현우 외 2009). 한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에 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원내대표가 소속 위원회 배정 결정과정에서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 전문성, 선수 등을 고려한다고 주장해왔다(박천오 1998; 정준표 2014).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원구성 이전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는지 조사한다.¹⁾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2년마다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야 하고, 순전히 의원들의 희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소속 의원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정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박상운 2019, 2),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결정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의원들은 재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Mayhew 1974),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민을 위한 법안 통과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1) 박상운(2019, 2)의 정당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행정기획실을 통해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원회를 3지망까지 신청을 받으며, 상임위원회 지원 동기와 향후 활동 계획까지 제출받는다고 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지는 자신의 지역구민을 위한 법안 통과나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예산 확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예를 들어, 포크 배럴(pork-barrel)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다.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관련된 안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하원의 경우 세출위원회나 공공사업위원회 같은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에 비해 SOC 예산이나 지역구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Evans 1994; Lazarus and Steigerwalt 2009). 그래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나 예산을 다루는 특수재 상임위원회는 경쟁률이 치열하다. 반면에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보편재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예를 들어, 환경노동위원회는 의원들에게 ‘일하고 욕먹는’ 위원회라고 인식되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지원 미달 상임위원회였는데, 이는 높은 업무 강도와는 다르게 의원들의 지역구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 2018.07.04).

그렇다면 정당의 원내대표는 어떤 의원들을 경쟁률이 높은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하려고 할까? 기존 연구들에서는 의원들의 선호도와 전문성, 그리고 선수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외의 기존 연구들은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나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증분석이 미미한 편이다. 한국 국회에서도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서 소속 정당에게 유리한 표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정당 충성도가 높은지 낮은지 잘 파악하는 행위자이고,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양한 요인들이 상임위 배정 결정에 고려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특수

재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소속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와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주장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가설 설정

1.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의원들이 어떤 유형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지, 상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 이론(Krehbiel 1991; Gillian and Krehbiel 1990; Sinclair 1986), 이익분배 이론(Sinclair 1986; Weingast and Marshall 1988; Shepsle and Weingast 1987), 정당 이론(Kiewiet and McCubbins 1991; Cox and McCubbins 2007)이 각각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론들은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동기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먼저, 이익분배 이론은 의원들이 정치적 의도와 야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선을 위한 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이용한다고 주장한다(Sinclair 1986; Weingast and Marshall 1988; Shepsle and Weingast 1987). 이 이론에 따르면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배타적인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여 차기 선거에서 재선에 유리한 발판을 얻는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러한 관련 위원회에 의원들이 배정받기를 선호한다고 본다(Fenno 1973; Fiorina 1987). 즉, 기존 연구들은 특수재 상임위원회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 재선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Cox and McCubbins 2007; Riera and Cantú 2016; 박상운 2019).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그 모체인 본회의와 비교했을 때 편향된 정치적 선호를 갖는다고 분석된다(가상준 2007). 애들러와 래핀스키의 연구는(Adler 2000; Adler and Lapinski 1997)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고려할 때 정당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지역구 이익을 고려하여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별 상임위원회가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동질적인 의원들로 구성되면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의사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동질적인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고, 의원들은 정파성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서로의 법안을 지지하고 통과시켜주는 입법 교환(log-rolling)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이익분배 이론과는 다르게 정보확산 이론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선호로부터 편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inclair 1986; Krehbiel 1991; Gillian and Krehbiel 1990). 즉,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재선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본회의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의원의 입장에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그 법안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고 정보가 부족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크레비엘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의회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정치적 선호는 동질적이며 의회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구라고 본다(Krehbiel 1991).

마지막으로, 정당이익 이론은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선호보다 소속된 정당의 선호나 의지에 따른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에서의 표결에서 소속 정당의 당론이나 정당 지도부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Kiewiet and McCubbins 1991; Cox and McCubbins 2007). 즉, 의원들은 정당의 이익을 이행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정당 지도부는 차기 선거에서의 승리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전략적으로 잘 배정하고자 하고, 개별 의원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 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줄이고 관리하고자 한다(Rohde 1991; Aldrich 1995; Cox and McCubbins 2007).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의석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Cox and McCubbins 2007, 177). 먼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신을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지역구민에게 특정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업적 과시(credit claim)를 할 수 있다. 의원들의 이러한 상임위원회 활동은 차기

선거에서 득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배정 권한을 사용한다. 두 번째로, 적절한 상임위원회 배정은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큰 규모의 입법을 위해 정당 단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당내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정당이 사활을 건 의제가 입법으로 전환되면 유권자들로부터 정당의 평판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정당이익 이론은 주로 다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차지하는 제도적 이점과 이익 추구하고 관련된 설명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다수당 카르텔 이론’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며(Groseclose and King 2001), 이는 책임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 이론과도 연결된다. 정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을 그들이 원하는 상임위원회나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의회를 넘어서 다른 국가의 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Kanthak 2009; Raymond and Holt 2014).

2.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한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위원회를 파악하고, 재선에 유리한 위원회나 중요 위원회를 구분해왔다(박천오 1998; 가상준 2007; 이현우 외 2009). 이는 원구성 시점에서 개별 의원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를 파악한 뒤, 실제로 해당 의원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를 구분하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갖는 가장 큰 목적이 재선(Mayhew 1974)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정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과거의 연구들에 의하면, 박천오(1998)의 연구는 의원들로부터 가장 권위 있게 평가되는 상임위원회는 재정경제, 건설교통, 통일외무, 내무, 국방위원회 순이었고 재선에 기여하는 상임위원회는 건설교통, 재정경제, 내무, 농림해양, 통산 산업위원회 순이었다. 김민전(1996)의 연구는 14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 통일외무, 농림수산, 통상산업 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현우 외(2009)의 연구는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토해양, 지식경제, 보건복지가족, 외교통상통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는 국토해양, 지식경제, 교육과학기술, 기획재정위원회를 의원

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파이낸셜뉴스 2012.05.13).

한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원내대표가 소속 위원회 배정 결정과정에서 개별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 전문성, 선수 등을 고려한다고 주장해왔다(가상준 2007; 2009; 정준표 2014). 가상준(2007)의 연구는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들의 이념성향과 함께 당선 횟수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17대 국회를 대상으로 위원회별 평균 선수와 본회의의 평균 선수가 차이가 있는지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선수가 본회의의 선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문화관광위원회의 선수는 본회의의 선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특히, 외통위가 한국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당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분석틀로 18대 국회를 분석한 후속 연구에서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본회의의 평균 선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본회의의 평균 선수보다 낮게 나타났다(가상준 2009).

19대 국회를 분석한 정준표(2014)의 연구에서도 평균 선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 정보, 기획재정위원회로 나타났고 평균 선수가 가장 낮은 하위 3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 여성가족, 환경노동위원회로 파악되었다.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당선된 지역구의 지지기반이 튼튼하고,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업적들이 쌓여 지역구민에게 인지도가 높아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단순히 재선을 위한 지역구 활동뿐만 아니라 더 높은 정치적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외교통일위원회 같이 국가의 중대사와 관련된 안건들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들을 누락하여 분석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미국 의회의 이론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원의 정당 충성도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의원의 정당 충성도와 상임위원회 배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를 찾아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박상운(2019)의 연구는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가까운 의원일수록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두 번째로, 국회에서 원 구성은 크게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국회 후반기의 상임위 배정의 경우 국회 전반기에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됐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가설들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3. 가설 설정

미국 의회 연구자들은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위원회나 특수재 위원회에 배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왔다(Ripley 1967; Rohde and Shepsle 1973; Shepsle 1978; Smith and Ray 1983; Maltzman 1997; Deering and Smith 1997; Cox and McCubbins 2007). 86대~90대 미국 의회를 분석한 로드와 쉘슬리의 연구는(Rohde and Shepsle 1973) 민주당에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경우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그들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쉘슬리의 다른 연구는 (Shepsle 1978) 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힝클리의 연구는(Hinckley 1983, 149) 정당 충성도가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정하는 공공연한 기준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의 실증분석 결과들도 하원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Coker and Crain 1994; Leighton and Lopez 2002). 콕스와 맥커빈스의 연구도 정당의 리더가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든 하지 않았든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가 대부분의 하원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Cox and McCubbins 2007).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은 본회의 표결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를 측정한 반면, 정당에 얼마나 기부금을 냈는지를 기준으

로 정당 충성도를 측정하여 금전적인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Heberlig 2003).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의 정당 충성도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러한 연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박상운 2019). 본 연구에서는 매 국회마다 개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재선을 추구하는 행위자라는 전제하에 재선과 관련성이 높은 특수재 상임위원회를 의원들이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지역구 유권자들의 선호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역구에 특혜를 줄 수 있는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기 위해 정당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박상운(2019)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속 정당과 이념 거리가 가까운 의원일수록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소속 정당과의 이념거리라는 정당 충성의 대리 지표(proxy)보다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당론이탈 투표율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국회법 40조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해놓은 이유는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머무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의원마다 선호하는 위원회와 기피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정당 지도부는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가상준(2012)의 연구는 18대 국회에서 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임기 동안 그곳에 잔류하는 의원들이 예상과 다르게 많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형평성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이 한 상임위원회에 2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의원들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39조는 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조항은 의원들이 국회 전반기에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후반기에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가상준(2012)의 분석 결과를 부분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은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후반기에도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의 국회 전반기에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받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설 2〉를 통해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후반기에도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의원의 정당 충성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한 의원들의 경우 정당 충성도가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 배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더 크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정당 충성도가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회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지 못한 의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직전 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선거 결과 정보도 상임위원회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전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선거안정도가 낮은 의원들은 선거안정도가 높은 의원들에 비해 지역구 표심을 더 얻기 위해 다른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활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윤종빈 2000, 2002; Ashworth and

Mesquita 2006).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지역구에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가져오면 지역구민들로부터 의원에 대한 호감과 지지가 증가할 것이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Fowler et al. 1980; 윤종빈 2002). 반대로 선거안정도가 높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구 활동에 대한 유인이 적고 정당이나 의회에서 본인의 정치 경력과 업적에 더 신경 쓸 개연성이 높다(Dropp and Zachary 2012; 윤종빈 2002). 이와 관련하여 정준표(2014)의 연구는 평균적으로 득표율 차이가 큰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다고 분석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특히 야당에서 지역구의 지지기반이 높고 다음 선거에서 여유가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했다고 설명한다. 정리하자면, 선거안정도가 낮은 의원들은 지역구민에게 지지와 표심을 더 얻기 위해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동기가 커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당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들의 선호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당의 의석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선거안정도가 낮은 의원일수록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개별 국회의원이며 연구의 범위는 20대 국회로 설정한다. 상임위원회 배정은 크게 국회의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 번씩 진행된다. 국회법 40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며, 동법 39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해놓은 이유는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머무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의원마다

선호하는 위원회와 기피하는 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외에도 의원들의 위원회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대 국회의 후반기에 실시되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려면 국회 전반기와 국회 후반기의 자료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²⁾

2. 종속변수

연구의 종속변수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점에서 진행되는 의원들의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여부로 설정한다. 기존 연구들은 상임위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해왔다. 먼저 콕스와 맥커빈스(Cox and McCubbins 2007)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를 특수재 위원회(targeted committee), 일률 위원회(uniform committee), 혼합 위원회(mixed committee)로 구분하였다. 특정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익과 손실이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경우면 특수재 상임위원회로, 이익과 손실을 보는 집단이 동질적인 경우에 해당되면 일률 상임위원회로, 두 경우가 혼합되어 있으면 혼합 상임위원회로 구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대상이 이질적인 집단에 해당되는 농업, 내무, 해양, 상선위원회는 특수재 상임위원회로, 정책에 대한 대상이 동질적인 집단에 해당되거나 보편재를 다루는 재향군인, 공공사업, 과학 등의 위원회는 보편재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였다. 유럽 5개국(포르투갈, 스페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의회 상임위원회를 분배(distributive), 고등 정책(high policy), 공공재(public goods) 상임위원회로 유형화한 연구도 존재한다(Riera and Cantú 2016). 그들은 농업, 어업, 수송, 건설, 공공사업 위원회를 분배 상임위원회로, 환경, 복지, 교육, 과학기술 위원회는 공공재 상임위원회로, 국방, 외교, 사법, 재정 위원회는 고등정책 위원회로 유형화하였다. 한편, 스트라트만과 바우어(Stratmann and Baur 2002)는 독일 상임위원회를 지역구(district), 정당(party), 중성(neutral)이라는 세 가지기준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건설, 농업, 교통 상임위원회는 지역구로, 국방, 여성, 보건 등은 정당으로,

2)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강신재(2023b)의 연구도 20대 국회 후반기의 상임위원회 지도부 선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 외의 상임위원회는 중성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그슈벤트와 지텔(Gschwend and Zittel 2016)의 연구는 독일 상임위원회를 지역구, 절차, 정당 상임위원회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관광, 농업, 수송 상임위원회를 지역구 위원회로, 선거 공정성과 청원 위원회는 절차 위원회로, 그 외의 위원회는 정당 위원회로 구분하였다.

해외의 기존 연구들은 저마다의 개념과 기준으로 다양하게 상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정책 영역을 구분하여 어떤 종류의 재화가 누구에게 배분되는지 유형화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가상준(2007)의 연구가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선호위원회, 기피위원회, 상충위원회로 유형화하였다.³⁾ 최근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를 콕스와 맥커빈스(Cox and McCubbins 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특수재, 보편재, 혼합 상임위원회로 유형화한 연구가 존재한다. 박상운(2019)의 연구는 건설교통, 농수산, 산업자원 위원회를 특수재 상임위원회로, 국방, 과학, 교육, 정보, 환경, 외교통상 등의 위원회를 보편재 상임위원회로, 운영, 법제사법, 재정경제 등의 위원회를 혼합 상임위원회로 유형화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특수재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에게 지역구 유권자에게 특수재를 제공하여 재선에 유리하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특수재 상임위원회를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16~19대 국회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를 특수재, 혼합, 보편재로 유형화한 박상운(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특수재, 혼합, 보편재로 유형화한 뒤, 개별 의원이 국회 후반기에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인 특수재 위원회에 배정을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변수 측정을 위해 '국회경과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정보를 활용하였다(국회사무처 2021). <표 1>은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상임위원회를 보여준다. 종속변수가 1과 0으로 측정되기에 로짓 분석(logit analysis)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3) 가상준(2007)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선호위원회: 통일외교, 정무, 재정경제, 산업자원, 문화관광, 행정자치, 교육, 보건복지, 건설교통. 기피위원회: 국회운영, 법제사법, 환경노동, 여성가족. 상충적 위원회: 국방,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 농림해양수산

〈표 1〉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분류

상임위원회 유형		
특수재	혼합	보편재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위원회, 정부위원회, 정보위원회, 통일의교통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3. 독립변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국회의원의 정당 충성도,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여부, 선거안정도로 설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정당 충성도는 20대 국회 전반기(20대 국회 개의회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본회의 표결자료에 기반하여 계산된 국회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율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당론이탈 투표는 본회의 표결에서 각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다수의 선택과 다른 표결을 한 것을 의미하며,⁴⁾ 당론이탈 투표율은 각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를 전체 투표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된다. 당론이탈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당 충성도가 낮다는 점을 의미하며, 최근 연구에서도 이를 통해 정당 충성도를 측정하였다(강신재 2023a; 2023b).⁵⁾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변수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은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선거안정도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혹은 재보궐 선거에서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을 2위 후보자의 득표율로 뺀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값이 클수록 선거안정도가

4) 여기서 본회의 불참은 당론이탈 투표로 계산되지 않는다.

5) 물론, 이러한 측정은 갈등법안이나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기에 실제 주요 정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의 표결을 통해 측정한 정당충성도와는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갈등법안이나 정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들로 정당충성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성별, 연령, 선수, 소속 정당,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 정치 후원금, 비례대표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2016년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나이를 그대로 측정하였다. 선수는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하여 의원의 당선 횟수를 측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은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던 정당을 기준으로 하되,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기 중 가장 오래 속해있던 정당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는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을 나타내는 W-NOMINATE 추정치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⁶⁾ 의원들의 이념 점수를 통해 정당별로 소속된 의원들의 이념 평균값을 산출한 뒤, 정당의 평균 이념과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이념 점수를 뺀 후 그 값에 절댓값을 취하였다. 정치 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20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이 받은 후원금 액수의 평균치에 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다. 비례대표 여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 지역구 국회의원은 0으로 측정하였다.

〈표 2〉 기술통계량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최댓값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 배정	303	0.24	0.43	0~1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	303	5.44	4.01	0.28~23.01 (%)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303	0.27	0.44	0~1

6) 20대 국회의원의 W-NOMINATE 점수는 서울대학교 폴랩과 조선일보가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1043.html). 원자료의 점수가 -50부터 50까지 분포하고 있어 -1부터 +1까지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득표율 차이	267	0.14	0.12	0~0.67
성별	303	0.83	0.37	0~1
연령	303	55.99	7	30~75
선수	303	2.13	1.34	1~8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124명, 자유한국당 117명, 바른미래당 29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기타 13명			
이념 거리	293	0.23	0.15	0~0.75
비례대표	303	0.16	0.37	0~1
전반기 정치후원금(log)	303	18.8	0.51	16.9~19.54

IV. 분석 결과

1.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로짓 분석

〈표 3〉은 제20대 국회의원들의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로짓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모형은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과 소속 정당과의 이념거리가 포함된 모형,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모형,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모형 그리고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모형 네 가지로 나뉜다.

〈모형 1-1〉을 통해 정당 충성도와 이념 요인이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은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p < 0.1$). 이는 정당 지도부가 국회 전반기에 나타난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율을 고려하여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결정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국회 전반기 정당 충성도가 높은 국회의원일수록 후반기에 재선에 유리한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령 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통제변수들이 모두 포함된 다른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

성이 사라졌다. 비례대표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1$),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례대표 제도가 직능 및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국구 정당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이익을 챙길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책 역량이나 경험과 관련된 위원회에 지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적게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의원들이 기피하는 상임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많이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정준표 2014),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모형 1-2>를 살펴보면,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지고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지정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보다 구체적으로,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지정 변수가 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지정에 의원의 정당 충성도 보다는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지정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지정된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비해 국회 후반기에도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2년마다 상임위원회를 이동해야 하는 형평성의 원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당이 국회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 지정한 의원들을 국회 후반기에도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지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재선 역량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선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이수록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지정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선수의 효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이미 자신이 갖춰 놓은 지역 기반이 탄탄하고, 유권자와 긴밀한 선거 관계

(electoral connection)가 형성돼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의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 지도부 입장에서 선수가 높은 의원들보다는 선수가 낮은 의원들을 재선에 유리한 특수재 상임위 배정에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정당 지도부가 선수가 높은 의원들을 특수재 상임위원회보다는 외교통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누적된 경험이나 높은 정책적 역량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가상준 2009, 84).⁷⁾

한편, 소속 정당과의 이념거리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모두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운(2019)의 연구는 특수재 상임위 배정에 소속 정당과의 이념 거리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는데 본 연구에서 이념 거리 변수는 당론이탈 투표율 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들의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의원들의 이념보다는 정당 충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⁸⁾ 전반기 정치후원금 변수 또한 포함된 모든 모형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 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수재 상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정치후원금 모금액이 높다고 분석한 정준표(20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성별과 연령 변수 또한 <모형 1-1>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형에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호작용 효과가 포함된 <모형 1-3>을 살펴보면,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과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을 곱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7) 18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배정 요인을 분석한 가상준(2009)의 연구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의 평균 선수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원회이고, 정보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선 의원들이 주로 배정된다고 설명한다.

8) 박상운(2019)의 연구에서는 정당과의 이념 거리와 특수재 상임위 배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20대 국회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정당충성도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통계모형에서도 정당과의 이념 거리 변수가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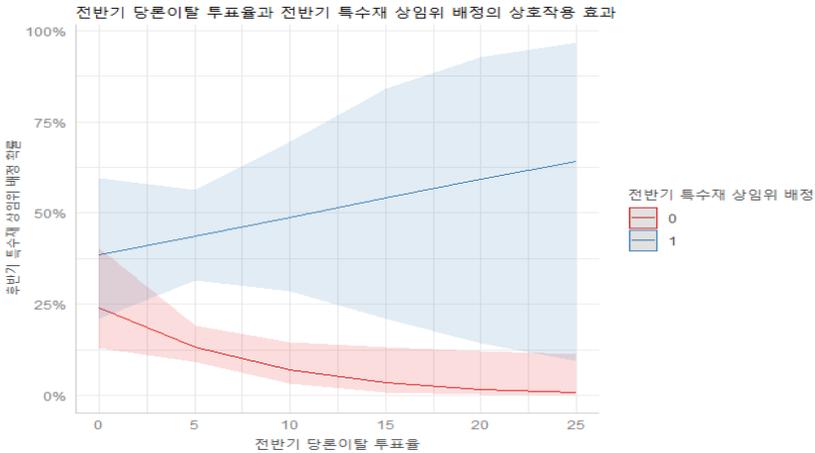
양(+의 방향으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적 영향력은 지역구 의원만 포함된 <모형 1-4>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났다.

〈표 3〉 20대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20대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 배정			
	<모형 1-1> 전체 의원	<모형 1-2> 전체 의원	<모형 1-3> 전체 의원	<모형 1-4> 지역구 의원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a)	-0.085* (0.046)	-0.070 (0.052)	-0.146** (0.068)	-0.166** (0.074)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b)		1.586*** (0.329)	0.680 (0.536)	0.540 (0.550)
a * b			0.188** (0.090)	0.203** (0.095)
이념 거리	-0.042 (0.983)	0.281(1.091)	0.429(1.105)	-0.120 (1.172)
득표율 차이				-1.140 (1.818)
선수		-0.682*** (0.184)	-0.708*** (0.188)	-0.718*** (0.197)
전반기 정치후원금(로그)		-0.261 (0.355)	-0.253 (0.361)	-0.069 (0.410)
성별	0.379 (0.460)	-0.173 (0.505)	-0.152 (0.506)	-0.154 (0.575)
연령	-0.051** (0.021)	0.001 (0.028)	-0.001 (0.028)	-0.001 (0.031)
비례대표	-1.172** (0.558)	-2.121*** (0.699)	-2.213*** (0.713)	
소속 정당	fixed			
상수항	2.405(1.346)*	5.587(7.077)	5.958(7.227)	2.491(8.099)
사례 수	293	292	292	245
로그우도비	-155.273	-130.553	-128.332	-115.344

*p<0.1, **p<0.05, ***p<0.01.

〈그림 1〉을 통해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림의 파랑색 선은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은 그룹, 빨간색 선은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타낸다. 먼저,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은 의원들은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이 높아짐에도(정당 충성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다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한 의원들은 정당 충성도가 높아질수록 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25%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이 없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정당 충성도가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확률을 부분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 상호작용 효과

2. 다수당 vs 소수당

이 절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이 정당의 국회 내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표 4〉에서

왼쪽 두 모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모형이고, 오른쪽 두 모형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모형이다. 먼저, 〈모형 2-1〉의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당 의원들의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다($p < 0.1$). 반면에 〈모형 2-3〉의 통계분석 결과는 소수당 의원들의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과 종속변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을 재선에 유리한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였다는 점을 뜻한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의 정당 충성도와 재공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다수당 위치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을 재공천할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에 소수당은 그렇지 않았다(강신재 2023b). 정리하자면, 20대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기율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에 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변수는 〈모형 2-1〉과 〈모형 2-3〉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이는 다수당과 소수당이라는 정당의 국회 내 지위와는 관계없이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국회 후반기에도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뜻한다. 선수 변수도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p < 0.01$), 이는 정당의 지위와 관계없이 선수가 낮은 의원일수록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다수당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소수당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된 변수들이 존재한다. 성별과 비례대표 변수는 소수당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각각 $p < 0.05$, $p < 0.01$). 소수당에서는 남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국회의원들에 비해, 그리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비해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모형 2-2〉와 〈모형 2-4〉에서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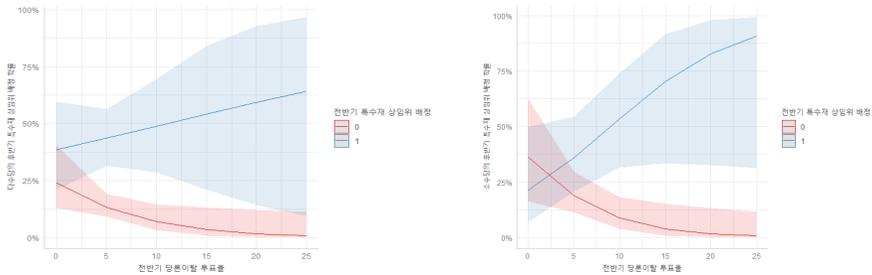
미하게 부(-)적 영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과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을 곱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 양(+)의 방향으로 종속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20대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다수당 vs 소수당)

	종속변수: 20대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 배정			
	〈모형 2-1〉 다수당	〈모형 2-2〉 다수당 상호작용	〈모형 2-3〉 소수당	〈모형 2-4〉 소수당 상호작용
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a)	-0.395* (0.235)	-1.163** (0.552)	-0.043 (0.055)	-0.174** (0.078)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b)	2.050*** (0.574)	-0.434 (1.512)	1.268*** (0.436)	-0.733 (0.810)
a * b		1.054* (0.627)		0.317*** (0.110)
이념 거리	1.812 (1.951)	1.270 (1.984)	-0.558 (1.419)	-0.461 (1.462)
선수	-0.702*** (0.352)	-0.848*** (0.380)	-0.768*** (0.231)	-0.835*** (0.242)
전반기 정치후원금(로그)	0.611 (0.856)	0.799 (0.910)	-0.442 (0.414)	-0.384 (0.429)
성별	16.621 (1322.426)	17.341 (2004.050)	-1.394** (0.663)	-1.459** (0.687)
연령	-0.005 (0.057)	0.014 (0.060)	0.032 (0.035)	0.031 (0.037)
비례대표	-0.278 (1.307)	-0.265 (1.417)	-3.143*** (0.877)	-3.424*** (0.916)
상수항	-28.347 (1322.541)	-31.813 (2004.135)	8.765 (8.083)	8.850 (8.454)
사례 수	123	123	169	169
로그우도비	-42.786	-41.119	-78.897	-74.434

* p<0.1, **p<0.05, ***p<0.01, 〈모형 2-3〉과 〈모형 2-4〉에서는 소속 정당 변수들이 포함되었음.

〈그림 2〉에서 왼쪽 그림은 다수당 모형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오른쪽 그림은 소수당 모형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다수당과 소수당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수당과 소수당 둘 다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된 의원들이 후반기에도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소수당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한 의원들은 당론이탈 투표율이 낮아짐에 따라 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소수당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2〉 상호작용 효과(다수당 vs 소수당)

V. 결론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통계분석을 통해 20대 국회 전반기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국회 후반기에 재선에 유리한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정당이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고려하며 정당의 기율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당 충성도가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변수가 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의원의 정당

충성도 보다는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를 2년마다 이동하는 관행과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당이 국회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한 의원들을 국회 후반기에도 동일 유형의 상임위원회에 배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재선 역량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⁹⁾

정당 충성도와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은 의원들은 정당 충성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다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지 못한 의원들은 정당 충성도가 높아질수록 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전반기에 어떤 유형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가설에서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선거안정도와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들의 영향력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이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의 기존 연구들은 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정당 충성도 변수를 분석에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주목함으로써, 국회 전반기의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9)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심사자들의 지적에 따라 <부록>에 20대 국회에도 연임하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대 국회 후반기 정당충성도는 20대 국회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19대 국회 후반기나 19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에서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20대 국회 전반기에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각각 $p < 0.1$, $p < 0.05$). 그리고 의원의 정당충성도와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는 직전 국회에서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 상임위원회 배정의 연속성이 작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하여 특수재 상임위원회를 재선에 유리한 상임위원회로 간주하고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들이 이러한 위원회에 배정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정당 지도부가 이러한 의원들을 배제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의원의 정당 충성도가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모형에 고려하는 것이다. 몇몇 기존 연구들은 선거 이후에 행해진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선호 상임위원회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는 의원의 선호 상임위원회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곧 22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의원의 선호 상임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정치 동학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재선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특수재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재선 가능성이 높은지, 득표율이 증가하는지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7.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236-279.
- 가상준. 2009.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2호: 67-95.
- 가상준. 2012.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5-30.
- 강신재. 2023a. 한국 국회의원의 정당 충성의 원인과 정치적 결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강신재. 2023b. “21대 총선에서 주요 양당의 공천 결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정당 충성도, 이념, 제도적 요인.” 『선거연구』 제19권 제1호: 5-30.
- 국회사무처. 2021. 『제20대국회경과보고서』. 서울: 국회사무처.
- 김민전. 1996. “14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구조: 상임위원회 배정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머니투데이. 2018. “[MT리포트] 후반전 맞는 ‘20대 국회 상임위’ ... 명당 찾는 의원들.” (7월 4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70319503130027> (검색일: 2024.03.22).
- 박상운, 이호준. 2015. “현직자 우위의 구성요소: 한국의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1호: 393-410.
- 박상운. 2019. 유권자의 재화 요구와 정당지도부의 선택: 총선 지역구 공천 방식, 상임위원회 배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천오. 1998.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성향과 동기.”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1호: 293-315.
- 윤종빈. 2000.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커리어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3권 제4호: 145-163.
- 윤종빈. 2002.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11권 제2호: 177-192.

- 이현우·조성대·안순철·오일환·황아란·정상호·최영진. 2009.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식조사 연구』.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보고서.
- 정준표. 2014.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의정논총』 제9권 제1호:73-112.
- 조선일보. 2018. “[20대 국회 이념지도] 17~20대 국회 이념성향 비교했더니.” (9월 7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1043.html (검색일: 2023.11.22.).
- 파이낸셜뉴스. 2012. “19대 국회 당선자 희망 상임위, 5명중 1명 국토위 선호.” (5월 13일), <https://www.fnnews.com/news/201205131734456111> (검색일: 2023.12.11).
- Adler, E. Scott, and John S. Lapinski. 1997. “Demand-side Theory and Congressional Committee Composition: A Constituency Characteristics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895-918.
- Adler, E. Scott. 2000. “Constituency Characteristics and the ‘Guardian’ Model of Appropriations Subcommittees, 1959-1998.”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1): 104-114.
- Aldrich, John H. 1995. *Why Par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shworth, Scott, and Ethan Bueno de Mesquita. 2006. “Delivering the Goods: Legislative Particularism in Different Electoral and Institutional Settings.” *Journal of Politics* 68(1): 168-179.
- Coker, David C., and W. Mark Crain. 1994. “Legislative Committees as Loyalty-generating Institutions.” *Public Choice* 81(3-4): 195-221.
- Cox, Gary W., and Mathew D. McCubbins. 2007. *Legislative Leviathan: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2nd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ok, Sara Brandes, and John R. Hibbing. 1985. "Congressional Reform and Party Discipl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Seniority System on Party Loyalty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5(2): 207-226.
- Deering, Christopher J., and Steven S. Smith. 1997. *Committees in Congress*. Washington D.C.: CQ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Dropp, Kyle, and Zachary Peskowitz. 2012. "Electoral Security and the Provision of Constituency Service." *Journal of Politics* 74(1): 220-234.
- Evans, Diana. 1994. "Policy and Pork: the Use of Pork Barrel Projects to Build Policy Coalitio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894-917.
- Fenno, Richard F. 1973. *Congressmen in Committees*. Boston: Little, Brown & Co.
- Fiorina, Morris. 1987. "Alternative Rationales for Restrictive Procedure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3(2): 337-343.
- Gilligan, Thomas W., and Keith Krehbiel. 1990. "Organization Informative Committees by a Rational Legislatur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2): 531-564.
- Groseclose, Tim, and David C. King. 2001. "Committee Theories Reconsidered." in Lawrence C. Dodd and Bruce I. Oppenheimer. eds. *Congress Reconsidered. 7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 Gschwend, Thomas, and Thomas Zittel. 2018. "Who Brings Home the Pork? Parties and the Role of Localness in Committee

- Assignments in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s.” *Party Politics* 24(5): 488-500.
- Heberlig, Eric S. 2003. “Congressional Parties, Fundraising, and Committee Ambi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2): 151-161.
- Jones Bryan D., Frank R. Baumgartner, and Jeffery C. Talbert. 1993. “The Destruction of Issue Monopolies in Cong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657-671.
- Kanthak, Kristin. 2009. “US State Legislative Committee Assignments and Encouragement of Party Loyalty: An Exploratory Analysis.”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9(3): 284-303.
- Kiewiet, D. Roderick, and Mathew D. McCubbins 1991. *The Logic of Delegation: Congressional Parties and the Appropriations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ehbiel, Keith. 1991.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rehbiel, Keith. 1993. “Where’s the Par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No. 2, pp. 235-266.
- Krehbiel, Keith. 1995. “Cosponsors and Wafflers from A to Z.”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4): 906-923.
- Krehbiel, Keith. 2000. “Party Discipline and Measures of Partisanship.”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2): 212-227.
- Lazarus, Jeffrey, and Amy Steigerwalt. 2009. “Different Houses: The Distribution of Earmarks in the US House and Senat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4(3): 347-373.
- Leighton, Wayne A., and Edward J. Lopez. 2002. “Committee Assignments and the Cost of Party Loyalt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5(1): 59-90.

- Maltzman, Forrest. 1997. *Competing Principals: Committees, Parties, and the Organization of Congr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yhew, David R.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oole, Keith T., and Howard Rosenthal. 1991. "Patterns of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1): 228-278.
- Poole, Keith T., and Howard Rosenthal. 1997. *Congress: A Political Economic History of Roll Call Vo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ymond, C. Christopher, and Holt, Jacob. 2014. "Due North? Do American Theories of Legislative Committees Apply to Canada?."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20(2): 174-192.
- Riera, Pedro, and Francisco Cantú. 2018. "Determinants of Legislative Committee Membership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Party Politics* 24(5): 524-535.
- Ripley, Randall B. 1967. *Party Leader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 Rohde, David W. and Kenneth A. Shepsle. 1973. "Democratic Committee Assignmen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trategic Aspects of A Social Choice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3): 889-905.
- Rohde, David W. 1991. *Parties and Leaders in the Post-reform Hou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psle, Kenneth A. 1978. *The Giant Jigsaw Puzzle: Democratic Committee Assignments in the Modern Hou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psle, Kenneth A., and Barry R. Weingast. 1987.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mittee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 85-104.
- Shepsle, Kenneth A., and Barry R. Weingast. 1994. "Positive Theories of Congressional Institu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9(2): 149-179.
- Sinclair, Barbara. 1986. "The Role of Committees in Agenda Setting in the US Congr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1(1): 35-45.
- Smith, Steven S., and Bruce A. Ray. 1983. "The Impact of Congressional Reform: House Democratic Committee Assignments." *Congress & the Presidency: A Journal of Capital Studies* 10(2): 219-240.
- Smith, Steven S. 2007. *Party Influence in Congr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tmann, Thomas, and Martin Baur. 2002. "Plurality Ru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German Bundestag: How Incentives to Pork-barrel Differ across Electoral Syste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3): 506-514.

〈부록〉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 결정요인
(19대-20대 국회 연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 A-1〉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원회 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20대 국회 전반기 특수재 상임위 배정			
	〈모형 A-1〉 19대 국회의원	〈모형 A-2〉 19대 국회의원	〈모형 A-3〉 19대 국회의원	〈모형 A-4〉 19대 국회의원
후반기 당론이탈 투표율(a)	0.118 (0.103)	-0.043 (0.138)	-0.114 (0.102)	-0.030 (0.146)
후반기 특수재 상임위(b)	0.846* (0.454)	1.196 (0.774)		
전반기+후반기 특수재 상임위(c)			0.960** (0.435)	1.921** (0.906)
a * b(c)		-0.133 (0.179)		-0.166 (0.178)
이념 거리	3.999* (2.059)	4.332** (2.134)	3.699* (2.088)	4.305* (2.208)
선수	-0.475** (0.232)	-0.472** (0.230)	-0.478** (0.232)	-0.498** (0.232)
정치후원금(log)	0.114 (0.553)	0.058 (0.552)	-0.014 (0.564)	-0.035 (0.565)
성별	18.260 (1510.910)	18.297 (1495.096)	17.913 (1542.095)	18.332 (1494.516)
연령	0.040(0.035)	0.037(0.035)	0.042(0.035)	0.039(0.036)
비례대표	0.762(1.713)	0.258(1.867)	0.251(1.834)	0.342(1.721)
소속 정당	fixed			
상수항	-23.010 (1510.950)	-22.114 (1495.135)	-20.407 (1542.135)	-20.593 (1494.557)
사례 수	145	145	145	145
로그우도비	-70.727	-70.404	-69.979	-69.227

* p<0.1, **p<0.05, ***p<0.01.

Which Legislators are Assigned to Committees Favorable for Reelection? Focusing on Party Loyalty, Committee Assignment Experience, and Electoral Stability

Sinjae Kang*

ABSTRACT

The assignment of legislators to standing committees is crucial in determining their primary areas of activity within policy domains. In addition, lawmakers can lay the foundation for re-election by increasing the vote rate in the next election through the standing committe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committee assignments, focusing on party loyalty, prior committee assignment experience, and electoral stability.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factors determining the assignment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particularistic good type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und that legislators with higher party loyalty during the first half were more likely to be assigned to this committee in the latter half. Those assign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particularistic good type in the first half were also more likely to be reassigned to similar committe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ty loyalty and prior committee assignment experience was observed. These main findings were consistent across models distinguishing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Contrary to expectations, however, electoral stability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ssignment to the committee assignment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discovering that party loyalty and prior experience in standing committee assignment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term, aspects previously overlooked in Korean research,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committee allocations in the latter half. This finding contributes a new perspective to understanding legislative behaviors and committee dynamics within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Keywords: standing committee, committee assignment, particularistic good, party loyalty, electoral stability, reelection,

투고일: 2024.02.02.

심사일: 2024.02.16.

게재확정일: 2024.03.06.

* Post-Doctoral Researcher, Yonsei University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4.3.9.1.109>

【연구논문】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品行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이 성 진* · 최 성 진**

논문요약

본 연구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品行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부산 소재에品行문제가 있는 15~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행동 평가척도를 통해 24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24명의 참가자는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에 각각 12명씩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집단은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대기무처치 하였다.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 주 2회, 총 4회기 60~90분씩 진행하였다. 사전-사후-추수에는 충동성 척도, 공격성 척도 및 자기통제력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를 사용하였고, 두 집단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충동성 척도, 공격성 척도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사전-사후-추수 시점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品行장애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品行장애 청소년보다 충동성 및 공격성은 감소하였고 자기통제력은 향상되었다. 이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品行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品行장애 청소년, 충동성, 공격성, 자기통제력

* 동명대학교 상담임상심리학과 박사과정생.

** 동명대학교 상담임상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I. 서론

品行장애는 다른 사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 규칙 및 규범을 위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장애이다(APA 2013). DSM-5에서는 재산파괴,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절도 또는 사기, 정해진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의 4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총 15가지 문제행동 영역들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된다(APA 2013). 특히,品行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부적절한 자기통제,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며, 이후 성인이 되면 약물 중독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질 수 있다(Teichner 외 2000; Wicks-Nelson 외 2003). 최근 보건복지부의 국립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5~17세의 흉악 강력범죄 건수는 2020년 1,918건, 2021년 2,178건, 2022년 3,03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아가 연령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아도 2022년 기준 15세 45%(951건), 16세 41.3%(1,047건), 17세 32.9%(1,038건)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보건복지부 2022). 이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함께品行에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청소년 백서 2022).

品行장애는 자아정체성과 사회성 및 도덕성의 결여 문제로 다양한 사회적·신체적·심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모, 교사, 또래관계문제 등의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정익중 외 2017), 신체 손상의 문제와 더불어 삶의 목표가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충동조절 능력 등이 부족하여 학업중단 등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유발한다(서석진 2011). 또한 낮은 자존감 및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동반한다(Eisenbarth 외 2016). 더불어品行장애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적 반응과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Griffiths 외 2016), 타인에 대한 무관심, 충동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Vittorio Lingiardi 외 2017). 정리해 보면品行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충동성과 높은 공격성으로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및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품행장애는 행동 및 정서장애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 왔지만, 청소년이 겪는 장애 중 개선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유성자 외 2017). 또한 반사회적 행동특성은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발달 특성을 띄고 있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의 반 이상이 청소년 비행에서 성인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Reid 외 2002). 이처럼 품행장애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범법행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강균영 외 2017).

품행장애의 진단준거는 충동성의 문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임상적 양상을 종합하면 충동성은 품행장애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Bassarath 2001; Moeller 외 2001; Vitacco 외 2001). 충동성이란 침착성이 결여되고 행위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미숙한 행동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허심양 외 2012). 청소년기 충동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반사회성, ADHD,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우울 등 다양한 변인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마다연 외 2023; 이경숙 외 2017; 이승현 외 2023; Ruiz 2010), 품행장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이경희 2012). Moeller 외(2001)는 충동성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세 가지 구성요소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미래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숙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고 계획되지 않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셋째,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의 민감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품행장애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중성 및 긍정적 사고를 향상하여 건강한 미래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공격성이란 개인적,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데, 타인에게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Bushman 외 2001). 특히, 품행장애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비판이나 반항으로 이어져 난폭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Baumeister 외 1998).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급이나 또래 안에서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Parker 외 1987).

또한 공격성은品行 문제와 관련된 핵심요인이자(최정아 2012),品行 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이혜정 외 2015; 정혜원 외 2012; Gilbert 외 2010; Hirschi 외 1990; Vaillancourt 외 2003). 즉, 공격성이 높을수록品行 문제가 악화하고 건강한 발달이 어려워진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공격성은 청소년의品行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品行장애의 원인적 요소를 가진 모든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공격성을 조절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정체성, 자기자비 등 다양한 보호 요인으로 밝혀내었다(Luthar 외 2000). 특히, 최근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 공격성을 조절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주목하고 있다(노희주 외 2022; 심혜인 2023; 이정임 2020). 자기통제력이란 청소년기 공격성을 제어 할 수 있는 힘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자기 안에 내재 된 힘으로 조절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말한다(이경님 2001). 국내에서는品行장애를 대상으로 한 자기통제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지만, 비행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곽현곤 2021; 노영수 외 2021; 이정임 2020).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 문제가 높았으며,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Hirschi 외 1990).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재산비행, 지위비행, 폭력범죄, 약물범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LaGrange 외 1999). 이를 종합해보면, 행동 조절이 어려운 청소년은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品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品行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品行장애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자비, 자기통제력 등 개인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보호요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에 시도되었던品行장애 청소년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는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 이야기치료 프로그램, 놀이중심 집단상담, 인지행동치료 등이 있었다(유성자 외 2017; 윤정미 2017; 한숙중 외

2018). 이러한 접근은 품행장애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자존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외부자원이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담자 신념체계의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지행동 집단치료는 문제 해결 및 기술훈련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목표로 제시한 기술 및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행동상의 변화를 낳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Weissberg 외 1991). 이는 인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더 중요한 원인적 통찰이나 장기적인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측면을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나 인지구조를 변화시키기보다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수용하도록 하여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특징인 수용전념치료를 적용하고자 한다.

Hayes(1999)가 개발한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는 인지행동치료를 잇는 행동치료 모델로 인지행동치료의 제 3동향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치료형태이다. 수용전념치료(Hayes 외 1999; Wilson 외 2002)는 심리적 유연성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맥락적 심리적 개입으로, 현재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에 충분히 접촉하도록 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Hayes 외 2004). 즉, 수용전념치료의 목적은 원치 않는 사적 사건의 빈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행동과 연결된 관점에서 사건과 상호 작용하도록 사람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회피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Luciano 외 2012). 또한, 심리적 사건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수용, 마음챙김, 인지적 탈융합 전략을 활용하여 사건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하는 개입을 한다(Hayes 외 2006). 실제로 수용전념치료는 품행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게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충동성, 공격성, 분노, 학교부적응 감소, 자기존중감 및 자기통제력 향상 등, 심리적 어려움에 개선에 효과를 보였다(김무신 외 2013; 노푸른 외 2014; 성슬아 2018; 장서윤 외 2012; Ruiz 2010) 이처럼 수용전념치료는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바쁜 현대사회에서 장기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Brotten 외 2011). 병원과 기관에서는 개인에게 시간 소모와 높은 비용, 그리고 여가시간을 고려할 때 항상 더 짧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고 있다(Liberman 외 1998). 빠른 변화와 해결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과 내담자의 요구, 경제적 고려사항 등에 의해 심리치료의 단기화가 확대되고 있다(김계현 1995; 이장호 외 2005). 단기적인 치료개입을 위하여 4회기의 짧은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병으로 재입원하는 환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우울증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었다(Bach 외 2002; Bach 외 2012; Gaudiano 외 2006). 또한 품행장애를 치료한 선행연구에서도 공격성 감소와 자기통제력에 효과가 있었다(Gómez 외 2014). 정신증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10회기의 장기 수용전념치료와 4회기의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수용 능력이 향상되고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제공이 타당하다고 하였다(Johns 외 2016). 이렇듯 목표가 뚜렷하고 단기간에 자기관리 기술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 장기 프로그램의 효과와 동일한 치료 효과를 가지며, 비용적, 효율적, 시간적 유리함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Saracutu 외 2018).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외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에게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과 연관된 선행연구(Gomez 외 2014; keulen 외 2023; Martínez 외 2004)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충동성과 공격성 감소하고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향상하여 품행 문제를 줄임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부산시 소재의 중, 고등학교에 오프라인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모집하였다.品行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행동 평가척도(K-YSR)를 실시하여, 총 점수가 55점(92%)이상인 임상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이 참여하였다. 실험집단과 대기 통제집단은 각각 12명으로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집단 평균연령은(16.1±.67)이며, 성별은 남자 9명(75%), 여자 3명(25%)이었다. 대기 통제집단 평균연령은(16.1±.67)이며, 성별은 남자 9명(75%), 여자 3명(25%)의 중, 고등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척도(K-YSR)

Achenbach(1991)가 청소년品行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청소년 자기보고식-아동행동 평가 척도(Youth Self Report-Child Behavior check List ; K-YSR)로 오경자 외(2001)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品行장애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중대한 규칙 위반, 사기 또는 절도, 재산 파괴,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등 4가지로 규정한 DSM-5의 진단기준(APA 2013)에 따라 K-YSR의 하위 요인인 공격성에 관한(19문항)과 비행에 관한(11문항) 척도를 합하여 사용하였다. “거의 그렇지 않다(0)”에서부터 “항상 그렇다(2)”까지의 3점 Likert 척도이고, 총점범위는 0~60점이다. K-YSR의 검사요강에 제시된 기준에 의해 공격성과 비행의 총점의 표준점수가 55점(92%)이상일 경우 임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격성과 비행의 문항에 대한 오경자(2010)가 제시한

신뢰도는 Cronbach α 에서 공격성은 Cronbach α 는 .66, 공격행동은 Cronbach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73으로 나타났다.

2) 충동성 척도(BIS-II)

Barratt의 Barratt Impulsiveness Scale II(1983)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충동성 척도(BIS-II)를 사용했다. 충동성 검사는 운동충동성척도 8문항(2, 4, 7, 10, 13, 15, 18, 22), 인지충동성척도 6문항(1, 3, 6, 9, 12, 17, 19, 20, 23), 무계획충동성척도 9문항(5, 8, 11, 14, 16, 21)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항상 그렇다(4)”까지 4점 Likert 척도다.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1, 3, 5, 6, 8, 11, 16, 19번은 역채점으로 처리한다. 이현수(1992)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87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3) 공격성 척도(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을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만든 한국판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Korea version ; AQ-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신체적 공격(9문항), 언어적 공격성(7문항), 분노감(7문항), 적대감(7문항)이고 각 문항별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 척도다.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7, 20번은 역채점으로 처리한다.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4) 자기통제력 척도

Gottfredson 와 Hirschi(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이 자기통제력 평정척도를 참고로 재구성한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20문항으로, 장기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 문항과 즉각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 중 장기적인 만족추구는, 집중력이 있으며 욕구 충족을 지연시킬 수 있어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즉각적인 만족추구는 충동적이며 자신의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것이다(송진영 2013).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Likert 척도다. 즉각적인 만족추구는 역채점(3, 5, 6, 7, 9, 14, 16, 17, 18, 19)해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일시적인 충동에 반응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남현미와 옥선화(2001)가 재구성한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3.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10월 부산소재의 중, 고등학교에 오프라인 공고문을 게시하여 모집하였다. 15세 이상 17세 미만 품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을 실시하여 총 점수가 55점(92%)이상인 임상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구상하였다.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각각 12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사전, 사후, 추수의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대기통제집단은 무처지 집단이었다. 측정 도구별로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 간 사전, 사후, 추수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추수검사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4주 뒤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4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2회, 회기 당 60~90분간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부산시 소재 D마을 공동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예비모임을 가졌고, 수용전념치료 매뉴얼은 대면으로 직접 전달하였다. 프로그램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고, 진행자는 활동 전후 집단원에게 피드백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 진행 시 기록, 수집된 정보 및 연구 결과의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한 파일로 보관하여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

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프로그램 진행 기록 및 연구 결과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4.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Brief ACT Protocol in At-risk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and Impulsivity』(Gomez 외 2014)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된 설명, 비유와 진행은 Hayes(2005)의『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에서 추모사 상상하기 비유를 참고하였다. 또한 FEAR & ACT 공식, 괴물과 줄다리기 및 매일 경험 일지는 문현미(2005)의 8회기 ACT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1회기 가치 명료화, 2회기 창조적 절망감, 3회기 수용·기꺼이 경험하기, 4회기 가치에 따른 행동화로 구성되었다.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Strosahl 외(2004)는 수용, 인지적 탈융합, 현재에 존재하기, 맥락으로서의 자기, 가치, 전념적 행동의 6가지 핵심적인 치료 과정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며, 각 차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문현미(2006)는 이 핵심 과정 사이에 일정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치를 설정하고 가치의 방향대로 전념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용과 기꺼이 경험하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창조적 절망감이 느끼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동안 사용해 온 통제 의제를 허무는 작업이 효과적이므로(Hayes 외 1999), 본 연구에서는 창조적 절망감을 2회기에 적용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 감소 및 자기통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먼저 충동성 감소를 위하여 1회기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조절해야 할 미숙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행동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게 되었다. 2회기에서는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가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고 새로운 대안적 행동을 생각해 보는 창의적 절망감 활동을 실시하였다. 3회기에는 수업 시간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조절해야 되는 나의 반응을 찾아봄으로써 자기 안에 내재된 힘으로 자신을 조절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가졌다. 마지막 4회기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삶의 가치에 따른 행동의 책임감을 알고 행동함으로써 자기통제력 향상의 목표를 두었다.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구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회기	주제	내용
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서, 서약서, 집단 구조화 안내 및 사전 검사 실시 • 수용전념 치료 프로그램 목표, 목적 및 내용 소개 • FEAR & ACT공식 • 자발적인 변화 선택에 대한 존중과 격려하기 • 집단원 소개 및 별칭에 대해 나누기
	가치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명료화 개념 소개 • 추모사 상상하기 비유 •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 자신의 행동을 기꺼이 경험하기 일지 작성
2회기	창조적 절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지난 회기 개관) • 창조적 절망감 개념 소개 • 괴물과 줄다리기 비유 • 공격적 행동이 나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지 알기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업의 중요성 교육
3회기	수용 기꺼이 경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받게 되는 부정적 영향 돌아보기(지난 회기 개관) • 알아차림 명상 • 수업 시간에 내가 한 행동의 장단점 분석하고 조절해야 되는 나의 반응 찾기
4회기	가치에 따른 행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 기꺼이 경험하기(지난 회기 개관) • 내가 선택한 가치에 따른 행동의 책임감 알기 • 중요한 삶의 가치에 따른 나의 행동 선택하기 • 미래의 충돌 상황을 생각해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작성 • 변화한 나의 모습 작성

5.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단기 수용전념치료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자기자비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은 독립표본 t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측정 시기별 종속변인의 사후 점수는 집단 간 시기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M ANOVA)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집단간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결과는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에 참여한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 수준이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동질한 집단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대기통제 집단의 각 종속변인의 사전점수를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공격성($F=5.558, p>.05$), 충동성($F=1.403, p>.05$), 자기통제력($F=1.166, p>.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두 집단의 사전검사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2.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수로 충동성 척도를 측정하였다.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충동성의 사전-사후-추수 평균값,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변인	집단	사전	사후	추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집단 ^x 시기
		<i>M</i> (<i>SD</i>)	<i>M</i> (<i>SD</i>)	<i>M</i> (<i>SD</i>)				
충동성	실험	3.54(.15)	1.74(.14)	2.59(.29)	35.30 ^{***}	9.27 ^{***}	-8.25 ^{***}	144.19 ^{***}
	대기 통제	3.44(.19)	3.57(.20)	3.45(.20)	-1.860	-.243	1.38	

* $p < .05$, ** $p < .01$, *** $p < .001$

충동성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44.118$, $p < .001$).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충동성에서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차이 값($t=35.300$, $p < .001$), 사전-추수 차이 값($t=9.273$, $p < .001$)과 사후-추수 차이 값($t=-8.253$, $p < .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대기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참가하지 않은 대기통제집단 품행장애 청소년들보다 충동성이 감소했다. 하지만 사후-추수 결과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충동성을 감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수로 공격성 척도를 측정하였다.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공격성의 사전-사후-추수 평균값,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변인	집단	사전	사후	추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집단* 시기
		<i>M(SD)</i>	<i>M(SD)</i>	<i>M(SD)</i>				
공격성	실험	4.11(.32)	1.99(.54)	2.24(.57)	9.38***	10.85***	- .96	54.71***
	대기 통제	4.03(.24)	4.16(.11)	4.06(.17)	-1.55	-.86	1.48	

* $p < .05$, ** $p < .01$, *** $p < .001$

공격성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54.707, p < .001$).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대기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에서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차이 값($t=9.379, p < .001$), 사전-추수 차이 값($t=10.85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사후-추수 차이 값($t=-9.55, p > .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대기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와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참가하지 않은 대기통제집단 품행장애 청소년들보다 공격성 감소했고, 추수 결과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검증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집단, 대기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전, 실시 후, 추수로 충동성 척도를 측정하였다.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자기통제력의 사전-사후-추수 평균값, 이원 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변인	집단	사전	사후	추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집단* 시기
		<i>M(SD)</i>	<i>M(SD)</i>	<i>M(SD)</i>				
자기통제력	실험	1.67(.23)	3.35(.28)	2.51(.27)	-13.78**	-8.033**	9.62**	103.07**
	대기통제	1.78(.26)	1.57(.17)	1.65(.26)	2.16	3.45**	-.98	

* $p < .05$, ** $p < .01$, *** $p < .001$

자기통제력에서 집단과 측정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03.074$, $p < .001$).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대기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 사후-추수 측정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력에서 실험집단은 사전-사후 차이 값($t=-13.782$, $p < .001$), 사전-추수 차이 값($t=-8.033$, $p < .001$)과 사후-추수 차이 값($t=-9.619$,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대기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와 사전-추수, 사후-추수 차이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品行장애 청소년들은 참가하지 않은 대기통제집단品行장애 청소년들보다 자기통제력이 향상했다. 하지만 사후-추수 결과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을 향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品行장애 청소년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V. 논 의

본 연구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品行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品行장애 청소년의 충동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品行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가 충동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Gomez 외 2014)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법의학 정

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충동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Polat 외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품행장애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활동을 했다. 이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숙고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Moeller 외(2001)가 제시한 충동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충족하여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감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보면,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품행장애 청소년은 지나치게 위협하고 상황에 부적절하며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미숙한 행동 특성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끝나고 4주의 기간이 지난 추수 결과에서 충동성이 사후 결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측하건대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설정했던 삶의 가치에 따른 목표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각하게 되고, 프로그램 참여 이전의 성급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충동적인 행동 방식으로 회귀하여 충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낮은 충동적 행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분노 및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장서윤 외 2012)와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공격성이 감소된 선행연구(김선희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용전념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분노사고를 감소하고 자기통제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실험한 성슬아(201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 장애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및 분노를 감소시키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Mohammadi 외(2015)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품행장애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적 반응과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riffiths 외 2016).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 품행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져 난폭한 공격적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Baumeister 외 1998). 더욱이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급이나 또래 안에서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며 (Parker 외 1987), 범법행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강균영 외 2017),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하고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은 품행장애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김재순 2012)와 8회기의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분노사고가 감소하고 자기통제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성슬아(2018)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다시 말해 품행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가 자기통제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Gomez 외 2014)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자기통제력, 정체성, 자기자비 등 다양한 보호 요인을 밝혀내었다(Luthar 외 2000). 특히,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재산비행, 지위비행, 폭력범죄, 약물범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LaGrange 외 1999). 이처럼 보호요인이 취약한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통제력이 향상되어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품행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끝나고 4주의 기간이 지난 추수 결과에서 자기통제력이 사후 결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측하건대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집단원과 종결 후 개별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공격성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 추수 결과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품행장애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향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에서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어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은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결과는 추후 국내에 도입될 다양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4회기의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통제력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근이 대상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며, 자기관리 기술 촉진과 자유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aracutu 외 2018). 짧고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품행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단상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을 품행 문제 개선을 위해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이 적극 활동되길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격성 결과에서 사후-추수 시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충동성 및 자기통제력의 결과에서는 사후-추수 시기에서는 치료 효과가 감소하였다. 치료 효과를 유지 및 향상하도록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품행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회기의 짧은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빠른 변화와 해결을 요구하고 단기화 되는 심리치료의 흐름에 맞추어 효과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품행장애 청소년과 관련된 개입 전략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비행에 따른 사회적 문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

하고자 했으나,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논의에 제한이 있었다. 이제 추후연구에서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 대기 통제집단 및 비교집단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나,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대기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수의 효과만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비교집단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변화요인을 변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단기 치료 개입은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수용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자기 관리 기술을 촉진하고, 목표지향적이어서 기존의 Full ACT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Saracutu 외 2018)를 근거로 후속 연구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8회기의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과 4회기의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의 치료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15~17세 품행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특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8회기의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4주간의 사후 추적 기간을 두고 사후 결과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 따라(성슬아 2018), 사후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과 연관된 선행연구(Gomez 외 2014; keulen 외 2023; Martínez 외 2004)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추후 효과성을 검증하였고, 6~12개월의 추적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 2주가 지난 시점의 추후 효과성을 검증하고 6~12개월의 추적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자의 행동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고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단기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에 연구자 편인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아닌 다른 심리치료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길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균영·임숙빈. 2017. “품행장애 십대 딸을 가진 어머니의 양육체험: Parse의 연구방법 적용.” 『Parse.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제26권 1호: 36-45.
- 김계현. 1995. “상담자-내담자 상호작용과 상담 협력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7권 1호: 95-116.
- 김무신·하용길·윤명희·박상규. 2013. “수용전념치료가 자살사고 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자살사고, 우울 및 역기능적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치료연구』 제5권 1호: 17-32.
- 김선희. 2017. 『수용-전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경험회피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채순. 2012. 『수용전념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증, 심리적 수용 및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영수·변상해. 2021. “비행청소년의 대상관계가 자아존중감, 충동성,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제15권 1호: 287-308.
- 노푸른·손정락. 2014. “수용전념치료(ACT)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9권 4호: 885-910.
- 노현곤. 2021 “청소년비행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상황적 행동이론의 검증.” 『한국교정복지학회』 제74권: 1-25.
- 노희주·조윤오. 2022.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矯正研究』 제32권 3호: 117-140.
- 마다연. 2023. “테니스를 활용한 신체활동 증재 프로그램이 ADHD 아동· 청소년의 주의집중력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단일대상연구를 활용하여.” 『한국리듬운동학회지』 제16권 2호: 67-82.
- 문현미. 2005. 『심리적 수용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수용-전념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제1권: 150.
- 서석진. 2011. “품행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 및 중재 프로그램 분석 연구: 1990년 이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7권 3호: 315-335.
- 성슬아. 2018. 『수용-전념치료(ACT)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분노사고 및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혜인. 2023.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영향요인: 법준수인식과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矯正研究』 제33권 1호: 151-170.
- 유성자·최연희. 2017. “이야기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및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0권 2호.
- 윤정미. 2017.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재소 품행장애 청소년의 분노 조절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24권 4호: 1007-1029.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2호: 97-110.
- 이경희.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Wee 프로젝트의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숙·이수정. 2017. “비행위험요인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서 냉담/비정서, 자기애, 충동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제2권 2호: 43-61.
- 이승현·황성현. 2023.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과 충동성의 간접효과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25권 4호: 173-195.
- 이장호·정남운·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이정임. 2020. 『비행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혜정·위슬아·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20권 4호: 675-695.
- 장서윤·손정락. 2012. “수용전념치료(ACT)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분노, 문제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31권 4호: 1059-1076.

정익중·김세완·신희주·박미경. 2017. “흡연, 음주, 인터넷 게임 이용의 공존이환이 청소년의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제40권: 145-171.

정혜원·정동우. 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9호: 1-23.

청소년백서. 2022. 『범죄소년의 연령별 현황』. 서울: 여성가족부.

최정아. 2012.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개인, 부모, 또래 영향요인 검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20권 3호: 431-455.

한숙중·방명애·권보미. 2018.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위험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4권 1호: 177-196.

허심양·오주요 김지혜. 2012.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11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제31권 3호: 769-782.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DSM-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ch, P., and Hayes, S. C. 2002. “The use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to prevent the rehospitalization of psychotic pati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5): 1129.

Bach, P., Hayes, S. C., and Gallop, R. 2012. “Long-term effects of brie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for psychosis.” *Behavior*

modification 36(2): 165-181.

- Bassarath, L. 2001. "Conduct disorder: a biopsychosocial review."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6(7): 609-616.
- Baumeister, R. F., and Boden, J. M. 1998. *Aggression and the self: High self-esteem, low self-control, and ego threat*. In *Human aggression*. Academic Press.
- Broten, L. A., Naugle, A. E., Kalata, A. H., and Gaynor, S. T. 2011. Depression and a stepped care model. Stepped care and e-health: *Practical applications to behavioral disorders* 17-43.
- Bushman, B. J., and Anderson, C. A. 2001. "Is it time to pull the plug on hostile versus instrumental aggression dichotomy?" *Psychological review* 108(1): 273.
- Eisenbarth, H., Demetriou, C. A., Kyranides, M. N., and Fanti, K. A. 2016. "Stability subtype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disorder symptoms and their correl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 1889-1901.
- Gaudiano, B. A., and Herbert, J. D. 2006. "Acute treatment of inpatients with psychotic symptoms using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Pilot resul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3): 415-437.
- Gilbert, F., and Daffern, M. 2010. "Integrating contemporary aggression theory with violent offender treatment: How thoroughly do interventions target violent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3): 167-180.
- Gottfredson, M.,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iffiths, A. J., and Hart, S. R. 2016. "Conduct Disorder." *Communique* 45(2): 1-26.

- Gómez, M. J., Luciano, C., Páez-Blarrina, M., Ruiz, F. J., Valdivia-Salas, S., and Gil-Luciano, B. 2014. "Brief ACT protocol in at-risk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and impuls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Therapy* 14(3): 307-332.
- Hayes, S. C. 2005. *Get out of your mind and into your life: The new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New Harbinger Publications.
- Hayes, S. C., Strosahl, K. D., and Wilson, K. G. 1999.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Vol. 6).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S. C., Strosahl, K. D., and Strosahl, K. (Eds.). 2004. *A practical guide to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Hayes, S. C., Luoma, J. B., Bond, F. W., Masuda, A., and Lillis, J. 2006.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odel, processes and outcom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1-25.
- Hirschi, T., and Gottfredson, M. 1990. "Substantive positivism and the idea of crime." *Rationality and Society* 2(4): 412-428.
- Johns, L. C., Oliver, J. E., Khondoker, M., Byrne, M., Jolley, S., Wykes, T. and Morris, E. M. 2016. "The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a brie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group intervention for people with psychosis: the 'ACT for life' stud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50: 257-263.
- Keulen, J., Matthijssen, D., Schraven, J., Deković, M., and Bodden, D. 2023. "The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s a transdiagnostic intervention for transitional-age youth: study protocol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BMC psychiatry* 23(1): 1-16.

- Lieberman, P. B., Wiitala, S. A., Elliott, B., McCormick, S., and Goyette, S. B. 1998. “Decreasing length of stay: are there effects on outcomes of psychiatric hospit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7): 905-909.
- LaGrange, T. C., and Silverman, R. A. 1999.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37(1): 41-72.
- Lingiardi, V., and McWilliams, N. (Eds.). 2017. *Psychodynamic diagnostic manual: PDM-2*. Guilford Publications.
- Luthar, S. S., Cicchetti, D., and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oeller, F. G., Barratt, E. S., Dougherty, D. M., Schmitz, J. M., and Swann, A. C. 2001. “Psychiatric aspects of impulsiv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1): 1783-1793.
- Martínez, O. G., Soriano, M. C. L., and Valverde, M. R. 2004. “A proposal for synthesizing verbal contexts in experiential avoidance disorder and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Therapy* 4(2): 377-396.
- Mohammadi, M., Farhoudian, A., Shoaee, F., Younesi, S. J., and Dolatshahi, B. 2015. “Aggression in juvenile delinquents and mental rehabilitation group therapy based on acceptance and commitment. *Iranian Rehabilitation Journal* 13(2): 5-9.
- Parker, J. G., and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

- Polat, H., and Asi Karakas, S. 2021. "The effect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rientated anger management training on anger ruminations and impulsivity levels in forensic psychiatric pati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57(4): 1616-1627.
- Reid, J. B., Patterson, G. R., and Snyder, J. E. 2002.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model for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iz, F. J. 2010. "A review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empirical evidence: Correlational, experimental psychopathology, component and outcome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ological Therapy* 10(1): 125-162.
- Ruiz, F. J., Luciano, C., and Valdivia-Salas, S. 2012. *A preliminary demonstration of transformation of functions through hierarchical relations* (No. ART-2012-76546).
- Saracutu, M., Rance, J., Davies, H., and Edwards, D. J. 2018. "The effects of osteopathic treatment on psychosocial factors in people with persistent pai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pathic Medicine* 27: 23-33.
- Teichner, G., and Goldenm C. J. 2000. "The relationship of neuropsychological impairment to conduct disorder in adolescence: A conceptual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 509-528.
- Twohig, M. P., Masuda, A., Varra, A. A., and Hayes, S. C. 2005.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s a treatment for anxiety disorders." In *Acceptance and mindfulness-based approaches to*

anxiety: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101-129.

- Vaillancourt, T., Brendgen, M., Boivin, M., and Tremblay, R. E. (2003). "A longitudina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ndirect and physical aggression: Evidence of two factor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4(6): 1628-1638.
- Vitacco, M. J., and Rogers, R. 2001. "Predictors of adolescent psychopathy: the role of impulsivity, hyperactivity, and sensation seeking."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9(4): 374-382.
- Weissberg, R. P., Caplan, M., and Harwood, R. L. 1991. "Promoting competent young people in competence-enhancing environments: a systems-based perspective on primary preven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6): 830.
- Wickes-Nelson, R., and Israel, A. C. 2003.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5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A Brie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Program on Impulsiveness, Aggression and Self-Control in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s

Seong Jin Lee* · Seong J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icacy of the Brie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program on impulsivity, aggression, and self-control in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s. 24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selected through Self-Behavioral Evaluation Scale among adolescents aged from 15 to 17 who were reported to have conduct problems in Busan. The selected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n a control group, each consisting of 12 subjects.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a Brie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program, but the control group didn't receive any treatment. The Brief ACT program consisted of a total of 4 sessions of 60-90 minutes and 2 sessions a week were performed for 2 weeks. The subjects were given a pre-test, a post-test and a follow up test and each test was measured through the Impulse Scale, the Aggression scale, and the Self-Control Scale. Data analysis was executed using SPSS 25.0 and homogeneity verific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analyzed through independent sample t-test. In order to analyze the efficacy of the program by comparing with the results of the Impulse scale, the Aggression Scale, and Self-Control Scale which were respectively measured in the pre, post and follow up test, two-way repeated measurement variance analysis and corresponding sample t-test were us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adolescents with conduct problems who participated in the Brie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program decreased in the level of impulsiveness and aggression, and increased in the level of self-control compared to adolescents with conduct problem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rough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hat adolescents' conduct problems can be reduced through Brie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programs.

* Ph.D. student, Tongmyo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Keywords: A Brie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Program,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s, Impulsiveness,
Aggression, Self-Control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4.3.9.1.139>

【연구논문】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 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배 성 희**, 양 난 미***

논문요약

본 연구는 기혼 여교사가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교직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기혼 여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일-가정 양립 갈등, 긍정심리자본, 교직만족도를 측정하였고 SPSS 27.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은 긍정심리자본과 교직만족도와 부적 관련이 있었고 긍정심리자본과 교직만족도는 정적 관련이 있었다. 일-가정 양립 갈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심리자본은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근거로 교육 장면에서 기혼 여교사의 교직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긍정심리자본에 중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중요성,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혼 여교사, 일-가정 양립 갈등, 긍정심리자본, 교직만족도

* 본 연구는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631)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제1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교사들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가 9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로 나타났다(한국대학신문 23/07/25). 또한 '최근 3년간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내한다고 말했다(서울경제 23/11/29). 이러한 문제들은 교사들의 마음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23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중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교사는 66.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63.2%의 교사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16%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이데일리 23/09/05). 특히 여교사의 폭력 비율이 69.3%로 높았으며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그리고 유치원 및 초등교사가 상대적으로 우울 증상이 더 심했다(안전신문 23/09/05).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교직만족도는 4점 만점에 2.72점으로 나타나 만족도를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년까지 재직할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응답 또한 초등학교가 46.85%로 가장 낮았다(에듀프레스 23/11/27). 이처럼 교사들의 낮은 교직만족도는 이후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퇴직은 56.4% 증가했다(매일신문 24/01/24).

특히 기혼 여교사의 경우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김윤미 외(2013)의 연구에서는 기혼 여교사의 다중 역할 갈등이 정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 임지숙 외(2021)의 연구에서도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안관영(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갈등이 직업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양한 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혼 여교사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교직만족도는 교직헌신, 심리적 소진, 이직의도 등 교직의 지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직무 수행을 즐기고 만족감을 느낄 때 교직에 대한 헌신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박희진 외 2019; 장영숙 2012) 교직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오봉희 외 2017; 이주영 외 2020; 임원신 외 2017). 또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직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직 의도는 낮아진다는 결과(김희태 외 2020; 문혁준 2021; 조혜숙 외 2013)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교사들의 교직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심리적인 소진은 덜 경험하고 교직에 대한 헌신도가 높아지며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더 오래 근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생 지도를 유지하기 위해 교직만족도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직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일-가정 양립 갈등, 교사 직무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원, 직무성취도, 교사효능감 등이 있으며(박영신 외 2009; 신호진 2022; 양난미 외 2021; 최수찬 외 2015; Demir 2018; Elcicek 2022; Saharan 외 2014) 그 중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사 직무 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원, 직무성취도와 교사효능감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교사의 경우 초등 77.3%, 중등 71%, 고등 54.7%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KOSIS, 2023) 본 연구에서는 직장과 가정에서 업무와 육아라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혼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과 교직만족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고려하였다. 최근 낮은 교직만족도로 인해 교사들의 직업적인 이탈이 높아지고 있는데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직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교사들의 이탈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긍정심리학은 긍정적인 감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Seligman, 2009).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덕을 탐색하고 발휘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직장에서 많이 느낄수록 높은 생산성과 낮은 이직률을 보일 수 있다(Seligma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직업적인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교직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로써 긍정심리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혼 여교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사회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교사의 직업 적응을 돕고자 한다.

기혼 여교사의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 갈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가정 양립 갈등이란 업무 또는 가정의 역할 참여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의 참여가 어려워져 역할 압력과 부정적 제재를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Greenhaus 외 1985). 이러한 일-가정 양립 갈등을 설명하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시간 기반 갈등(Time-Based Conflict)의 경우 한 역할에 대해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다른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행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근무 일정이 통제될수록 더 심각한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Herman 외 1977; Greenhaus 외 1985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긴장 기반 갈등(Strain-Based Conflict)은 경직된 근무 시간, 과도한 출장, 초과 근무는 긴장 증상을 유발하여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는 배우자와의 신념 차이와 가족 내 지지 자원의 부족이 이러한 긴장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동 기반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은 한 개인이 다양한 역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없다면 역할 간 갈등을 경험하는 형태를 의미한다(Greenhaus 외 1985). 일-가정 갈등의 핵심은 결국 일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서 촉발되는 것으로(Spell 외 2009)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직무만족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문제가 직장 일을 방해할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신효진 2022; 최수찬

외 2015).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 갈등이 직무만족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일-가정 양립 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Hong 외 2021; Purwanto 2020). 또한 Cinamon 외(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일-가정 양립 갈등에서 가족 내 역할에서 큰 갈등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직장 일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더 큰 갈등을 경험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정 및 직장에서 기혼 여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 갈등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대처하고 교직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개인의 약점보다는 강점에, 병리보다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기효능감(C Confidence), 희망(H Hope), 회복력(R Resilience), 낙관성(O Optimism)으로 구성되어 있다(Luthans 외 2004). 자기효능감은 특정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한 동기 부여를 가지고 자신의 인지적·행동적 자원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긍정심리자본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업무 관련 성과와 강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Luthans 외 2004). 긍정심리자본 중 희망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나 긍정심리자본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변인으로서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를 의미하며 회복력은 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Luthans 외 2004). 또한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것을 영구적으로 귀인하고 부정적인 것을 일시적으로 귀인하는 능력으로(Luthans 외 2004)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의 4가지 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성은 개인이 통제감을 갖도록 돕고 주체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도와준다(Luthans 외 2017).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고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동기를 갖게 하며 희망은 이렇게 설정한 목표 추구를 촉진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회복력이 높을수록 좌절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Luthans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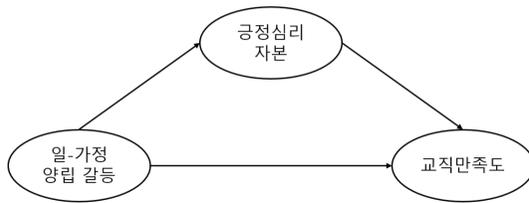
일-가정 양립 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해진 외(2013)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이 발생한 경우 긍정심리자본은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부정적인 업무 간섭을 줄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Morganson 외 2014). Yardley(2012)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통해 다양한 수준이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할 수 있지만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개인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Dewi 외(2020)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이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데에는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정서적인 피로도가 감소하고 이직 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u 외(2017)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일-가정 양립 갈등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개인이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과 교직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영일 외(2016)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Kurt 외(2019)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은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긍정심리자본은 교육, 세미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교직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Demir 2018; Elcicek 2022; Saharan 외 2014)를 통해 교사들의 교직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기존 여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대처하고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 갈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해봄으로써 기존의 두 변수의 관계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예방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긍정심리자본, 교직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II.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뒤 전국의 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Google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비슷한 속성의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눈덩이 표집을 통해 교직에 있는 연구자의 지인에게 설문조사 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교사들의 이용도가 높은 사이트에 설문을 게시하였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조사 전 연구의 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자율성을 설명하였다. 이 중 설문 조사에 미동의 1부, 남성 9부, 미혼 5부를 분석에 제외하여 총 29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나이는 만 28세부터 만 60세 사이였으며 평균 41.27세(SD=6.72)였다. 근무지별로는 초등학교 교사 228명(78.6%), 중학교 교사

38명(13.1%), 고등학교 교사 24명(8.3%)이었으며 교육 경력은 5년 미만 13명(4.5%), 5년 이상~10년 미만 71명(24.5%), 10년 이상~20년 미만 116명(40.0%), 20년 이상 90명(31.0%)이었다. 총 자녀 수는 0명이 14명(4.8%), 1명이 92명(31.7%), 2명이 162명(55.9%), 3명 이상이 22명(7.6%)이었다.

2. 측정도구

1) 일-가정 양립 갈등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zywacz(2000)가 개발한 일-가정 양립 척도를 정순애(201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가정 양립 척도는 부정적 전이의 양립 갈등(8문항), 긍정적 전이의 양립 조화와 균형(8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립 갈등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에서 갈등과 조화와 균형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 8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응답 형태는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순애의 연구(2012)에서 일-가정 양립 전체 *Chronbach's α*는 .76이었고 배현주의 연구(2018)에서 일-가정 양립 갈등이 .87,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 긍정심리자본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Luthans 외(2007)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김규태 외(2015)가 학교 상황에 맞추어 용어를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효능감(6문항), 희망(6문항), 회복력(6문항), 낙관성(6문항)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효능감은 “나는 장기적인 문제

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희망은 “요즘 내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회복력은 “학교에서 좌절할 때 그것을 잘 견뎌내고 회복한다”, 낙관성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형태는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통해 학교의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규태 외(2015)의 척도 중 역채점 문항을 순채점으로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김규태 외(2015)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자기효능감이 .91, 희망이 .95, 회복력이 .92, 낙관성이 .90, 전체 척도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81, 희망이 .84, 회복력이 .78, 낙관성이 .78, 전체 척도는 .93이었다.

3) 교직만족도

교사들의 교직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교육중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의 교직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교사로서 하는 업무에 만족한다” 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형태는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항상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주영 외(20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3. 분석방법

각 변인들의 특성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를 활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이 교직만족도로 가는 직접효과와 긍정심리자본을 통한 간접효과, 그리고 두 경로를 모두 합친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인들에 대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 긍정심리자본, 교직만족도의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으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외 1996).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 갈등은 긍정심리자본($r=-.40, p<.001$)과 교직만족도($r=-.32, p<.001$)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긍정심리자본은 교직만족도($r=.53,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290)

	일-가정 양립 갈등	긍정심리자본	교직만족도
일-가정 양립 갈등	-		
긍정심리자본	-.40***	-	
교직만족도	-.32***	.53***	-
M	2.63	3.71	3.55
SD	.80	.53	.53
왜도	-.22	-.06	.03
첨도	-.56	.25	.30

주. *** $p<.001$

2.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 p < .001$).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은 교직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4, p < .001$) 긍정심리자본은 교직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7, p < .001$). 분석 결과 각 변인들의 관계가 유의미하므로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분석(N=290)

변수		B	SE	β	t	95% 신뢰구간		R ²	F
						LLCI	ULCI		
독립변인	종속변인								
일-가정 양립 갈등	긍정심리자본	-.26	.04	-.40	-7.30***	-.33	-.19	.16	53.34***
일-가정 양립 갈등	교직만족도	-.11	.05	-.14	-2.53***	-.20	-.03		
긍정심리자본		.59	.07	.47	8.72***	.46	.73	.29	59.21***

주. *** p<.001

3.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는 95%의 신뢰구간에서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갈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B=-.27, p<.001$)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B=-.11, p<.05$).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간접효과($B=-.16, CI[-.22, -.10]$)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효과(N=290)

구분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 효과	-.27	.05	-.36	-.18
직접효과	-.11	.05	-.20	-.03
간접효과	-.16	.03	-.22	-.10

IV. 논의

본 연구는 기혼 여교사가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교직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 갈등, 긍정심리자본, 교직만족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갈등은 긍정심리자본, 교직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긍정심리자본과 교직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은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해

진 외 2013; Dewi 외 2020; Morganson 외 2014; Yardley 2012).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신효진 2022; 최수찬 외 2015; Cinamon 외 2002) 긍정심리자본이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김영일 외 2016; Demir 2018; Elcicek 2022; Kurt 외 2019; Saharan 외 2014).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혼 여교사의 높은 일-가정 양립 갈등이 긍정심리자본과 교직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은 교직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교직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가정 양립 갈등은 교직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긍정심리자본 또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직업 및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심리적 소진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Li 2021)와 유사한 결과이며 일-가정 양립 갈등과 직업 소진 사이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Wang 외 2012)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이 긍정심리자본을 저해시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Hao 외 2015)와 일-가정 양립 갈등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직업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Zhou 외 2021)와 유사하여 일-가정 양립 갈등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우울, 직업적 안녕감, 교직만족도와 같은 직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변인들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교사들의 교직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기혼 여교사의 교직만족도와 관련있는 변인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초·중학교의 경우 70%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50% 이상이 여교사인 점을 고려했을 때(KOSIS 2023) 그들의 일-가정 병행 경험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과 관련한 역할 갈등에는 교사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사 집단은 규모가 크지 않고 조직적이며 전문성과 주체성을 필요로 하고 남녀가 같은 수준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사회적 사명감과 사회적 열등감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승진에 한도가 있으며 활동 분야가 좁고 관료제의 규제와 세간의 교사상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이규만 외 2007). 특히 기혼 여교사의 경우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풍부하지만 일-가정 양립 갈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김윤미 외 2013). 즉, 기혼 여교사는 교사 집단의 역할 갈등과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갈등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감시키고 균형을 찾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유지하고 복지 및 휴직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Saltzstein 외 2001; Johari 외 2018).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교사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다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일-가정 양립 갈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가정 양립 갈등이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들의 교직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로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긍정심리자본은 훈련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PCDTI(The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ment Training Intervention)를 통해 교사들이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성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적·직업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alman 외 2016; Kalman 외 2017). PCDTI는 매주 2시간씩 총 16시간 동안 8개의 세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배 교사의 경험 공유, 심리상담사의 스트레스 대처 기법 안내, 참가자 간 토론과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만(이아름 외 2022)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으로, 교사들을 위한 한국형 PCDTI가 개발 및 보급된다면 교사들이 긍정심리자본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기혼 여교사의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일-가정 양립 갈등과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직만족도는 교직헌신, 심리적 소진, 이직의도 등 교직의 지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써(김희태 외 2020; 문혁준 2021; 박희진 외 2019; 오봉희 외 2017; 이주영 외 2020; 임원신 외 2017; 장영숙 2012; 조혜숙 외 2013) 교직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교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가정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교직만족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중 78.6%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기혼 여교사로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혼 여교사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초등과 중·고등 기혼 여교사가 직업 장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5년 미만의 경력자가 4.5%,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31%로 저경력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력과 교직만족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종규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임양미 외(2008)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또한 김은영 외(2014)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는 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교직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직에 있는 연구자의 지인에게 설문조사 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교사들의 이용도가 높은 사이트에 설문을 게시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의 교사를 모집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이용도가 높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교사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교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의 하위요인 중 일-가정 양립 갈등을 연구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하위요인인 일-가정 양립 균형 또한 선행연구에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Saeed 외 2014; Žnidaršič 외 2021) 추후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균형 또한 연구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 갈등 외에도 교사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교사효능감 등 다양한 변인이 교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박영신 외 2009; 양난미 외 2021)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기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남성들의 일-가정 양립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기혼 남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갈등에서 성차를 살펴보고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성 역할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문헌

- 김규태·최경민. 2015. “초등 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3집 2호: 201-225.
- 김영일·유기웅. 2020. “중등교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습민첩성,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인문사회 21』 11집 2호: 1225-1240.
- 김윤정. 2023. “교사 63% 우울증상…16%는 극단선택도 생각.” 『이데일리』 (9월 5일).
- 김은영·권성민. 2014. “유아교사의 생태실천행동, 경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효과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3집 1호: 131-153.
- 김종규·전수빈. 2019. “Talis 2018 자료 분석을 통한 교사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26집 3호: 371-399.
- 김주영·장재홍·박인우. 2018.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교사협력정도, 수업개선활동, 교사효능감, 교직만족도 비교 분석.” 『교사교육연구』 57집 1호: 1-15.
- 김한울. 2023. “유·초·중등 교사 95.3%,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 어렵다…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처벌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국대학신문』 (7월 25일).
- 김희태·김정림·곽창순. 2020.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4집 6호: 195-214.
- 문혁준. 2021.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전문성 지원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집 6호: 140-146.
- 박영신·김의철·박은실. 2009. “사회적 지원과 교사효능감이 직무성취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교사에 대한 단기 종단분석.” 『교육심리연구』 23집 3호: 491-520.

- 박종완. 2023. “신체특정부위 지칭·치마 복장 강요까지…경남 일선 학교 관리자 들의 갑질.” 『서울경제』 (11월 29일).
- 박희진·이문수. 2019. “중학교 교사의 입직 동기에 따른 교직 만족도와 효능감이 교사의 헌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36집 1호: 309-335.
- 배현주. 2018. 『기혼 보육교사의 일·가정 양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 학교 석사 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집 4호: 1147-1168.
- 신효진. 2022. “기혼 직장여성의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와 일상스트레스, 일-가정양립갈등 그리고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8집 6호: 251-260.
- 안관영. 2008. “기혼 여교사의 직무특성, 직장-가정 갈등 및 직업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50집: 163-180.
- 양난미·이아라·신현우.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교직 만족도의 관계: 내적통제성에 따른 교사 직무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과학교육연구소』 60집 4호: 529-544.
- 오봉희·송주연·박수경. 2017. “영아교사의 정서노동,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집 2호: 201-223.
- 윤정훈. 2024. “교단 떠나는 교사들… 대구 공립 초·중등교사 명예퇴직 2년 새 27% 증가.” 『매일신문』 (1월 24일).
- 이규만·김용훈. 2007. “기혼교사들의 직장-가정 갈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教育行政學研究』 25집 3호: 219-241.
- 이아름·이윤주. 2022. “중·고등학생 축구선수를 위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집 2호: 159-185.
- 이주영·유재경. 2020. “교사학습공동체 풍토와 교사효능감, 교직만족도, 교사소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7집 1호: 109-134.

- 이혜진·이남걸. 2013. “긍정심리자본과 직무태도의 관계에 일-가정 갈등이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5집 6호: 105-120.
- 임양미·이명신. 2008. “유치원·보육시설 교사의 현직 교육 요구도 및 직무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4집: 23-51.
- 임원신·김소희. 2017.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소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집 2호: 559-567.
- 임지숙·배성희·양난미. 2021. “기혼 여교사의 기본심리욕구와 일-가정 양립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젠더와 문화』 14집 1호: 43-74.
- 장영숙. 2012. “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도가 교직현실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7집 4호: 1-21.
- 장재훈. 2023. “[단독] ‘정년까지 교직에 근무하겠다’ 51.3% .. 초등 만족도 큰 폭 하락.” 『에듀프레스』 (11월 27일).
- 정민혁. 2023. “‘변아웃 교사들...’ 심한 우울증상 38%, 초등교사 높아.” 『안전신문』 (9월 5일).
- 정순애. 2012. 『기혼 직장여성의 개인, 가족 및 직장 변인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조혜숙·조성연. 2013.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Human Ecology Research(HER)』 51집 5호: 527-535.
- 최수찬·고수연·이지연·이희종. 2015.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갈등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집 8호: 293-303.
- 통계청. 2023. “교사 수 및 여교사 비율(OECD 회원국)” 『KOSIS』 (10월 5일).
- Cinamon, R. G., and Y. Rich.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work and family roles: Implic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Sex Roles* 47: 531-541.
- Curran, P. J., S. G. West, and J. F.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emir, S.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stress, anxiety,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5: 137-153.
- Dewi, R., Artiawati, and A. Parung, J. 2020. “The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predicting work-family conflict.”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volume, 530*: 167-173.
- Greenhaus, J. H., and N. J. Beutell.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Hao, J., D. Wu, L. Liu, X. Li, and H. Wu. 2015.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female nurses: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6): 6682-6699.
- Hong, X., Q. Liu, and M. Zhang. 2021. “Dual stressors and female pre-school teachers' job satisfaction during the COVID-19: the mediation of work-family conflict.”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2.
- Johari, Farah Shazlin, Muhammad Ridzuan Ruslani, Nor Maslia Rasli Samudin, Nurhafizah Mohd Zolkapli, and Siti Norashikin Basirun. 2018. “Understanding teachers' job satisfaction through work-life balance policies.” *Journal of Academia* 6(1): 112-119.
- KALMAN, M., and M. S. SUMMAK. 2016. “A mixed methods study on developing teachers' psychological capital.” *Gaziantep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15(1): 27-58.
- Kalman, M., and M. S. Summak. 2017. “Revitalizing the HERO within

- teachers: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PsyCap development training.” *Qualitative Report* 22(3): 655-682.
- Kurt, N., and A. O. Demirbolat. 2019.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percep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of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 and Learning* 8(1): 87-99.
- Li, X., X. Lin, F. Zhang, and Y. Tian. 2021. “Playing roles in work and family: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s on job and life satisfaction among junior high school teachers”. *Frontiers in Psychology* 12: 1-13.
- Luthans, F., K. W. Luthans, and B. C. Luthans.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Luthans, F., and C. M. Youssef-Morgan. 2017. “Psychological capital: An evidence-based positive approach.”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4: 339-366.
- Morganson, V. J., M. L. Litano, and S. K. O'Neill. 2014. “Promoting work-family balance through positive psychology: A prac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Psychologist-Manager Journal*, 17(4): 221.
- Pu, J., H. Hou, R. Ma, and J. Sang. 2017.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job burnout in chinese university teachers: Testing for mediation and moder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14): 1799-1807.
- Purwanto, A. 2020.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a study of Indonesian female employe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29(03): 6724-6748.

- Saeed, K., and Y. A. Farooqi. 2014.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life balanc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teachers (A case of university of gujrat)."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Sciences and Engineering* 5(6): 9-15.
- Saharan, S., and M. Jain. 201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relation to job satisfaction: A study of school female teachers." *Indian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5(1): 19-24.
- Saltzstein, A. L., Y. Ting, and G. H. Saltzstein. 2001. "Work-family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attitudes of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452-467.
- Seligman, M 저. 김인자, 우문식 역. 2009.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 Spell, C. S., J. Haar, and M. O'Driscoll. 2009. "Managing work-family conflict: Explor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options." *New Zealand Journal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9(3): 200-215.
- Wang, Y., L. Liu, J. Wang, and L. Wang. 2012. "Work-family conflict and burnout among chinese doctors: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4(3): 232-240.
- Yardley, K. 2012. *Psychological Capital as a Positive Resource to Assist with the Organisational Outcomes of Work Family Conflict: A Thesis Presented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Psychology*. Ph. D. Massey University.
- Zhou, M., D. Wang, L. Zhou, Y. Liu, and Y. Hu. 2021.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occupational well-being amo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Frontiers in Public Health* 9: 1-10.

Žnidaršič, J., and M. Marič. 2021. “Relationships between work-family balance,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nd work engagement among higher education lecturers.” *Organizacija* 54(3): 227-237.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teacher satisfaction among married female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ongHee Bae**· NanMee Y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teacher satisfaction among married female teach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that teachers may experience and to find out how to increase teacher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demographic variables, work-family confli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er satisfaction were measured among 290 married female teachers nationwide, and SPSS 27.0 and PROCESS Macro were used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among married female teachers was negatively related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ing satisfaction, and positively related to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ing satisfaction. Both the direct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teacher satisfaction and the indirect effect mediated b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significant, suggesting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teacher satisfaction.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teacher satisfaction among married female teache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terventions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re necessary to increase teacher satisfaction among married female teachers in the educational contex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issues are discussed.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22. (NRF-2022S1A5C2A02093631)

** Ph.D. studen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Married female teachers, work-family conflic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eacher satisfaction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4.3.9.1.165>

【연구경향】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김 덕 렬* · 엄 기 홍**

논문요약

새로운 세대(M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의 MZ세대 연구는 미흡하다. 1980~1994년에 출생한 M세대와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개인주의 성향과 온라인 활동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MZ세대의 관심사 분석은 온라인 활동이란 공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MZ세대의 관심사를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수집한 블라인드(Blind) 커뮤니티 토픽베스트 게시물 제목과 본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LDA 기반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MZ세대의 주요 관심사는 육아 및 결혼 생활, 취업 및 회사생활, 주택 및 보험, 헬스, 부동산 및 주식, 여행, 일생, 뷰티 등 8개로 분류되었다. 특히, 육아 및 결혼 생활, 취업 및 회사생활, 주택 및 보험, 부동산 및 주식 등은 현재의 불안정과 미래의 불확실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치권이 주목해야할 점을 제시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M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블라인드,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소장,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미디어, 언론, 정치, 그리고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대는 바로 'MZ세대'이다. 이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른 시대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모습은 인터넷, TV, 뉴스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박순형 2022). 'MZ'라는 세대 구분은 2019년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¹⁾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에 MZ세대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2019년 처음으로 122건의 관련 뉴스가 등장하였고, 이후 2020년에 3,327건, 2021년에 20,768건, 2022년에 24,885건으로 MZ세대 키워드는 3년 사이 급부상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MZ세대는 10년 이내 세계 노동인구의 약 75%를 차지하여 사회 전반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MZ세대가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된다(박순형 2022). 이러한 흐름 속에서 MZ세대를 파악하는 연구 비중이 높아졌으며, 소비, 마케팅,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MZ세대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선거 연구에 있어서 '세대'는 연령 및 지역과 함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서창훈 2015). 2000년대 이후 한국 선거에서 세대는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청년세대의 지지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강윤택 2003; 조원빈 2022). 세대에 따른 투표행태의 차이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서창훈 2015)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MZ세대의 선거 투표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제20대 대선에서 MZ세대의 요구가 선거의 판세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MZ세대에 대한 고려가 그만큼 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최셋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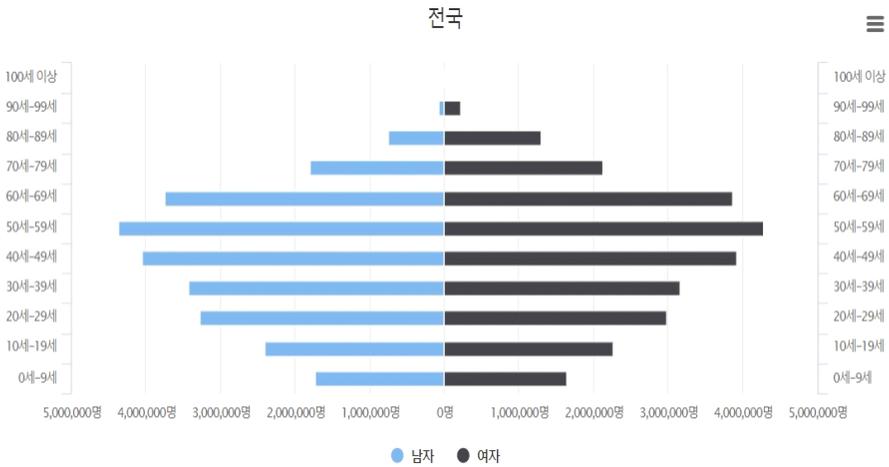
1) 빅카인즈(bigkinds.or.kr)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접목한 뉴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특정 기간에 특정 키워드를 가진 모든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Z세대에 대한 많은 분야에서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요구와 행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유정균 2021).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심사와 삶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의 승리와 정책 입안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기성세대가 국가 전체의 방향과 관련된 거대담론에 관심을 가졌다면, 현재의 MZ세대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즉 개인적 담론에 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김수정의 2020).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 공유와 정치적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MZ세대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에 존재하는 게시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MZ세대의 주요 관심사 및 행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MZ 세대의 등장: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MZ세대'는 1980~1994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세대 명칭이다(김민종·김정열 2021).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두 세대의 합성어로 영미권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개념이지만, 이를 합친 MZ세대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호규현 외 2023). 기존 세대의 구분 개념과 다르게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 현시점에서 10~40대 초반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이다. 10-19세 4,669,685명, 20-29세 6,250,051명, 30-39세 6,586,864명으로 전체 51,370,001명 중 약 35%로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MZ세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 1] 2023년 전국 연령대별 인구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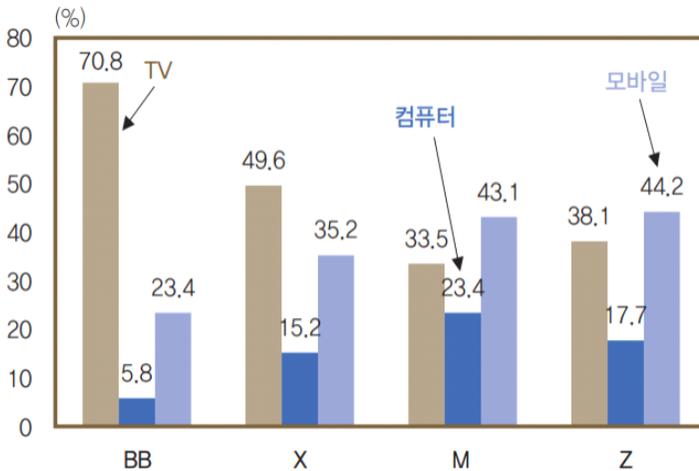
물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동일 연령 시기에 경험한 사회적 변화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는 IMF 외환 위기를 청소년기에 겪었지만 Z세대의 경우 유아기를 보냈던 시기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구분의 등장은 기성세대가 새롭게 등장하는 신세대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대립적인 틀로 등장해 왔다. 따라서 MZ세대는 일정한 연령대에 속한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하나의 대립 구조로 나뉘었을 때, 기성세대에 대응하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최셋별 2022).

M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반 디바이스를 잘 다루며, SNS에서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기에 ‘디지털 원주민 세대’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년 시절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한 세대이며 코호트적 관점에서²⁾ COVID-19라는 팬데믹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경험하면서

2) 코호트(Cohort)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한 기간에 주요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면서 일정한 심리적 속성을 공유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을 의미한다(Karl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형성해왔다. 따라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MZ세대는 COVID-19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학업, 업무, 생활 등에 있어 일련의 특징을 체화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디지털과 각종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이다(박순형 2022; 최셋별 2022; 호규현 외 2023).

[그림 2]에서 보듯이 미디어 기기별 이용시간 비율은 베이비붐(BB)세대와 X세대에 비해 TV 이용시간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이용시간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미디어 기기별 이용시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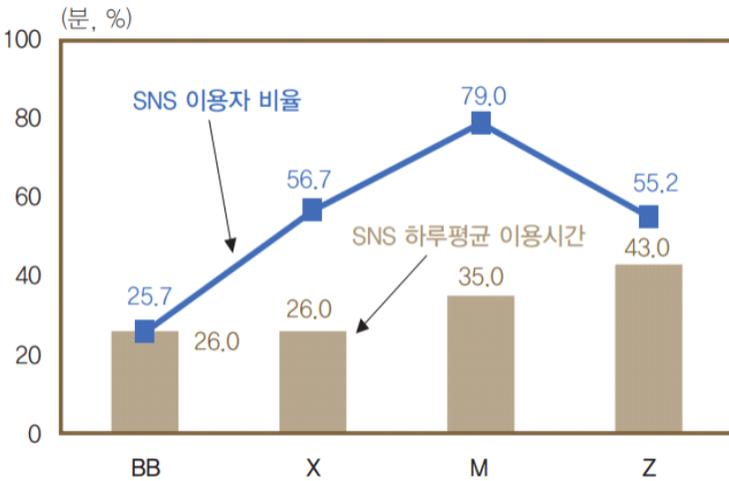
출처: 최영준(2022)

또한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듯이, MZ세대는 SNS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다른

Mannheim 1952). 특정 세대는 시대별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 세대만의 문화와 특성을 만들어간다.

세대에 비해 약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Z세대의 경우 SNS 이용자 비율(55.2%)은 X세대에 비해 낮지만(56.7%), 이용시간은 X세대의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세대 43분, X세대 26분). 이러한 특징에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은 더욱 제한되었으며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새로운 공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즉, MZ세대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과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특징을 보였고, SNS는 정보를 습득·공유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었다(박순형 2022; 이예슬 2022). 또한 밈(meme)³⁾과 같은 유행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MZ세대에게 급속도로 양산·확산되고 있다.



[그림 3] SNS 이용자 비율 및 이용시간

출처: 최영준(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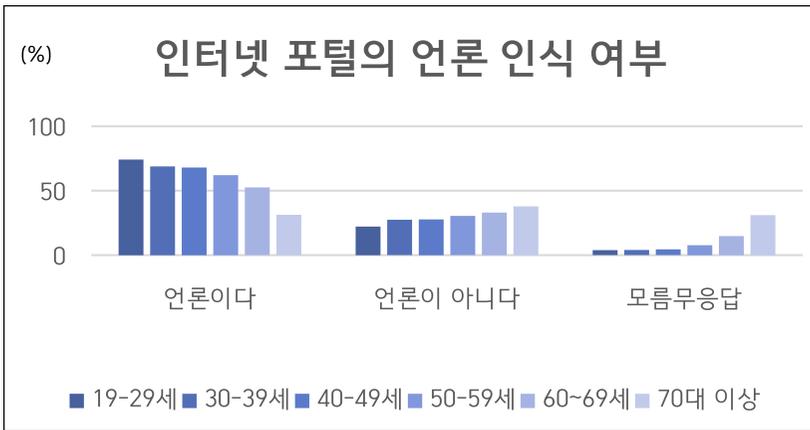
이처럼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글자로 된 책이나 문서보다 영상에

3) 밈(meme)은 1976년에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가 진화론에서 이미 소개한 개념으로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가 전파되는 것처럼 문화도 우월한 밈으로서 전파된다고 본다(이예슬, 2022).

익숙하며 TV보다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대학 내일 20대연구소의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2021)에 따르면 MZ세대가 가장 많이 즐긴 여가생활은 72.8%로 유튜브 감상이 가장 많았으며,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유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43.1%로 가장 높았다. 요컨대 MZ세대는 과거 그 어떤 세대보다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그리고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한 세대라 할 수 있는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세대별 특성이 있다(손정희 외 2021).

MZ세대의 이러한 특징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곳에서 탈제도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이와 같은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모바일 기기의 이용 증가로 인해 개개인이 SNS와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박태순 2008). 따라서 MZ세대의 정치 환경과 정치참여 형태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 정당 활동, 선거 운동, 투표, 시위 및 사회 운동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 방식에 더해, MZ세대는 정치 관련 유튜브,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SNS 게시물 공유, 해시태그 운동, 정치인과의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넓은 범위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하나의 새로운 공론장으로 만들어 인터넷 토론과 다양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 또는 불매 운동과 같이 직접적인 활동 외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김수정 외 2020).

[그림 4]는 2022년 연령대별 언론수용자조사 자료로 인터넷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메신저 서비스를 언론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래프이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이라고 인식한 비율은 19-29세 74.1%, 30-39세 68.8%, 40-49세 67.9%, 50-59세 62%, 60-69세 52.4%, 70대 이상 31.12%로 MZ세대 에 해당하는 19-29세와 30-39세는 기성세대에 비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뉴스와 종이신문과 같은 하나의 언론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 연령대별 인터넷 포털의 언론 인식 여부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2)

요약하면,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확산하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또한 이러한 MZ세대의 특징에 맞게 온라인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이미 정치인의 소통 도구 및 정치적 경쟁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한정훈 2021). 홍준표 대구 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는 2023년 10월 기준 구독자 65.9만명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MZ세대와 소통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밈(meme)과 MZ세대의 언어를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즉,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새로운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정치정보의 습득과 정치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서향리 외 2022). 그 이용 비율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는 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MZ세대 관심사와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III. MZ세대의 정치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

MZ세대를 설명하는 주요 특징은 특정 이슈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있어 집단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이다(손정희 외 2021). 호규현·심승범·조재희(2023)와 최영준(2022)의 연구는 MZ세대가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며 개인의 기준에 따라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는 개인주의 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M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박순형 2022).

MZ세대의 이러한 특징은 하나의 세대효과로 나타나는데,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보다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MZ세대는 기성세대가 정당에 따른 투표가 연령별로 두드러진 것과 달리 후보자 개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서향리·정재민·윤종성(2022)의 연구는 MZ세대가 투표에 있어 정당보다 후보자의 살아온 삶과 정치적 인생, 후보자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후보자 개인의 인성과 인품을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당이라는 집단 요소보다 개인의 기준과 취향에 부합하는 후보자인가라는 개인적 요소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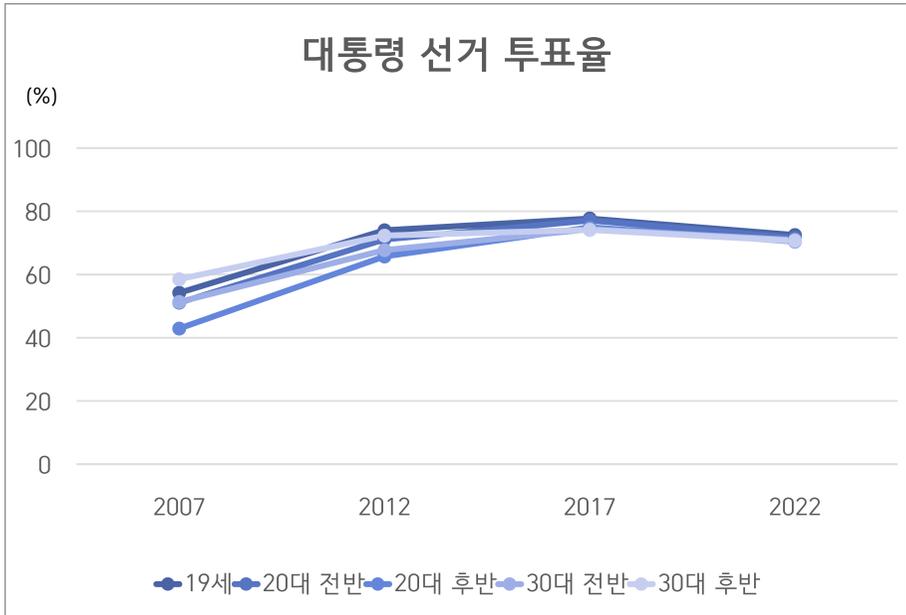
둘째, 기성세대들은 민주화 운동과 같이 개인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대 담론이 존재했지만, MZ세대는 개인 관심사와 가치에 따라 그 영역이 매우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정치참여가 어렵다는 점이다(김수정 외 2020).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적 선택과 참여에 있어 정당에 귀속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1>은 한국갤럽연구소가 2023년 9월 정당 지지도를 표로 재구성한 것으로 MZ세대에 해당하는 18~29세와 30대의 무당층 비율은 각각 48%와 38%로 다른 세대에 비해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8~29세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절반 정도가 무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23년 9월 연령대별 정당지지도

2023년 9월 3주 (19~21일)	조사 완료 사례수 (명)	가중 적용 사례수 (명)	정당 지지도(현재 지지하는 정당)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기타	무당층
18~29세	156	161	19%	29%	4%	1%	48%
30대	142	150	25%	32%	5%	1%	38%
40대	177	180	24%	44%	3%	0%	29%
50대	201	197	28%	44%	6%	0%	21%
60대	183	173	47%	26%	6%	2%	19%
70대 이상	142	141	58%	15%	0%	3%	23%

출처: 한국갤럽조사 연구소(2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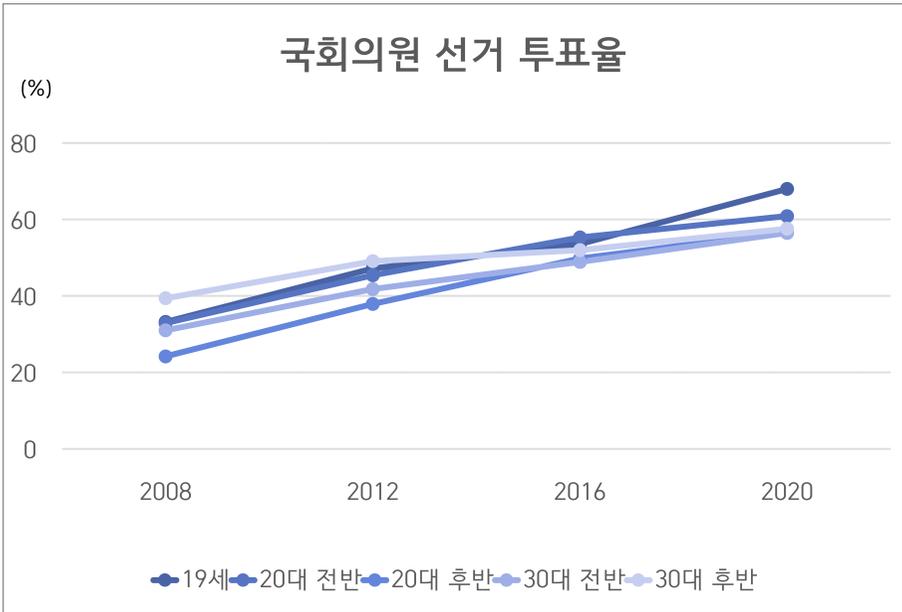
그렇지만 MZ세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림 5]는 MZ세대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0대 후반까지의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율로 19세의 경우 2007년 54.2%, 2012년 74.0%, 2017년 77.7%, 2022년 72.5%, 20대 전반의 경우 2007년 51.1%, 2012년 71.1%, 2017년 77.1%이었고, 2022년 71.6%, 20대 후반의 경우 2007년 42.9%, 2012년 65.7%, 2017년 74.9%, 2022년 70.4%이었다. 30대 전반의 경우 2007년 51.3%, 2012년 67.7%, 2017년 74.3%, 2022년 70.9%이었고, 30대 후반의 경우, 2007년 58.5%, 2012년 72.3%, 2017년 74.1%, 2022년 70.6%로 2022년 약간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과거 약 50%의 투표참여율은 현재 약 70% 이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림 5]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율

출처: 국가지표체계

[그림 6]은 MZ세대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0대 후반까지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율로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 19세의 경우 2008년 33.2%, 2012년 47.2%, 2016년 53.6%, 2020년 68%이었고, 20대 전반의 경우 2008년 32.9%, 2012년 45.4%, 2016년 55.3%, 2020년 60.9%, 20대 후반의 경우 2008년 24.2%, 2012년 37.9%, 2016년 49.8%, 2020년 56.7%이었다. 30대 전반의 경우 2008년 31%, 2012년 41.8%, 2016년 48.9%, 2020년 56.5%이었고, 30대 후반의 경우, 2008년 39.4%, 2012년 49.1%, 2016년 52%, 2020년 57.6%로 2008년 40% 미만의 투표참여율은 2020년 약 60%의 투표참여율로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6]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율

출처: 국가지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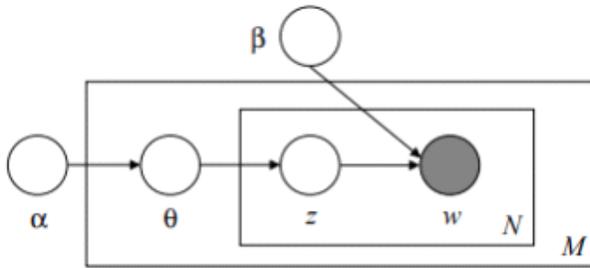
MZ세대의 정치참여는 온라인 공간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MZ세대의 무당층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적이고 다양한 관심사를 대변할 정당이 없는, 즉 MZ세대가 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 방식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최셋별 2022). 따라서 정당보다 후보자 개인에 관한 관심, 높은 무당층 비율, 정치참여의 증가 등의 특징은 MZ세대의 관심사를 정당이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결국 선거의 승리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MZ세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전문가들은 MZ세대의 표심이 핵심적인 ‘캐스팅 보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조원빈 2022).

IV. 데이터 및 연구방법

1.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Topic Modelling)은 문서 집합 내에서 주제를 도출하고, 개별 주제가 어떤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즉,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제, 즉 토픽을 발견하고 추출하여, 본문의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는 모델링 기법이다(Blei 2012). 특정 주제로 추출된 문서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할 것으로 전제할 수 있고, 따라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통해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안순태 외 2022). 예를 들어, ‘사회과학’이라는 주제로 분류된 문서에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단어 등장 빈도가 높을 것이라 전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단어들의 등장 빈도가 높다면 해당 문서의 주제를 ‘사회과학’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군집화(clustering) 기법은 한 개 문서를 하나의 주제로 전제하지만, 토픽모델링은 하나의 문서에 여러 개의 주제로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Kim et al., 2017).

토픽모델링 기법은 1990년 Deerwester 등이 제안한 LSA(Latent Semantic Analysis)가 토픽모델링 알고리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윤효준 외 2019). LSA를 시작으로 pLSA, LDA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그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이 여러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 활용하기 용이하므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갑철 외 2019). LDA는 분석 대상 문서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나타나는지 서술하는 토픽모델 기법 중 하나로 전체 문서 집합의 주제, 문서별 주제 비율, 각 단어가 각 주제에 포함될 확률 등을 파악할 수 있다(김태훈 외 2023; 박준형 외 2017). [그림 기은 LDA 알고리즘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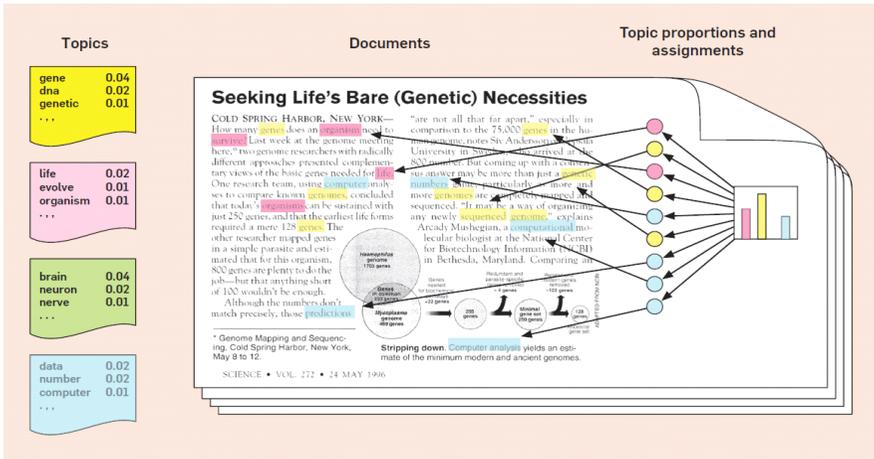
[그림 7] LDA 알고리즘

출처: Blei(2012)

α , β 는 Hidden Parameter, θ 와 z 는 Hidden Variable, w 는 실제 관측 가능한 값으로 α 는 토픽의 개수인 k 차원 디리클레분포의 매개변수이며, 해당 문서가 어떤 토픽 비율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Parameter이다. θ^i 는 문서가 i 번째 토픽에 속할 확률분포를 나타내며 β 는 $k \times V$ (단어집) 크기의 행렬 매개변수이며, β_{ij} 는 i 번째 토픽이 단어집 j 번째 단어를 생성할 확률을 나타낸다(윤효준 외 2019). 따라서 각 문서는 k 개의 주제에 대해 가중치 θ 가 존재하며 문서 내의 각 단어 w_n 은 k 개의 주제에 대해 가중치 z_n 을 가지게 된다.

LDA는 토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비중과 문서에서 나타난 토픽의 비중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결합에 확률분포를 적용하여 문서의 토픽을 찾는 과정이다(윤순옥 외 2020). 이때 디리클레분포의 성질에 따라 k 차원의 실수 벡터를 모두 더한 값을 1로하여 확률값이 정해진다. [그림 8]은 LDA를 활용한 토픽모델링을 보여준다. Seeking Life's Bare(Genetic) Necessities라는 문서에서 노란색 토픽에 gene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값은 0.04, dna는 0.02, genetic은 0.01이며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단어들의 확률값의 합은 1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노란색 토픽의 주제가 '유전자'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토픽들의 주제를 파악하여 문서 전체의 의미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추출된 토픽에는 빈도 혹은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 토픽 내에 담긴 키워드는 문서 전체에서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김태훈 외 2023). 따라서 연구자는 키워드를 해석함에 있어 토픽 내에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서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그림 8] LDA Topic Modeling 도식화

출처: Blei(2012)

토픽모델링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토픽의 개수에 따라 연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체 문서에서 토픽의 개수를 결정해야 한다. 토픽 수가 적으면 전체 문서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한 토픽의 주요 단어들로만 구성되며, 토픽 수가 많으면 여러 토픽에 주요 단어들이 중복되어 토픽의 구분과 토픽명을 정의하기 어렵게 된다(류병준 외 2022). 따라서 적절한 토픽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 Perplexity Score(혼잡도)와 Coherence Score(일관성)를 활용한다. Perplexity Score는 특정 확률모델이 실제 관측되는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해당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Blei et al. 2003). 하지만 Perplexity Score는 해당 모델의 학습 성능을 의미하고 있을 뿐 결과물의 해석 편의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윤효준 외 201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oherence Score를 활용하여 적절한 토픽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수는 토픽모델링 결과로 산출된 각각의 주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상위 단어들 간 얼마나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Newman et al. 2010). 따라서 Coherence Score가 높을수록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들 내 단어들이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데이터

MZ세대의 관심사 분석을 위해 블라인드(Blind) 플랫폼 토픽 베스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을 이용하였다. 블라인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와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보다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쉬우며, 주요 사용자 그룹이 MZ세대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또한 블라인드는 주식 및 투자, 부동산과 같은 전문적인 주제와 함께 연애, 결혼생활, 패션 등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주제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MZ세대의 다양한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토픽 베스트 게시판'은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조회수 등 이용자의 관심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게재되는 곳으로 이용자의 주요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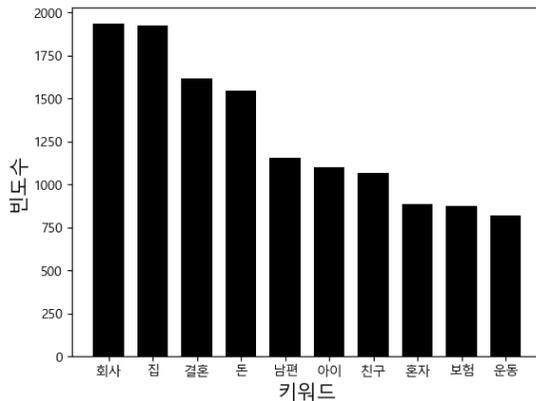
데이터 수집은 Python 언어로 작성한 웹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블라인드 내 토픽 베스트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을 수집하였다. 블라인드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성에 맞춰 셀레니움(Selenium)을 활용해 동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였다. 추출한 온라인 데이터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토픽 베스트에 게시된 20,747개의 제목과 본문의 텍스트 데이터이다.

수집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전처리로 konlpy의 한글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Okt를 활용하여 토큰화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와 같은 1음절 형태소를 제거하였다. '암호화폐'와 같은 신조어의 경우, 토큰화 과정에서 '암호', '화폐'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 사전을 통해 처리하였다. 전처리를 한 결과 20,747개 게시물 중 28,923개의 토큰을 추출하였다.

V. 분석 결과

1. 키워드 빈도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기에 앞서 MZ세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처리한 토큰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출현 빈도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동반 등장한 키워드는 총 12,881 단어였다. 총 12,881개 단어 중 ‘회사’ 1935회, ‘집’ 1928회로 전체 키워드 중 약 15%로 나타났으며, ‘결혼’ 1615회, ‘돈’ 1546회로 모두 약 12%로 나타났다.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회사’, ‘집’, ‘결혼’, ‘돈’ 키워드는 상위 10개 키워드 중 약 42%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림 9]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상위 4개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유사한 빈도를 나타냈다.



[그림 9] 상위 10위 키워드

또한, 상위 10개 키워드와 동반 등장한 단어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 작성했다. 워드 클라우드는 각 단어의 출현 빈도수나 중요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어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연승 외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큰들의 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500개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0]은 500개 단어를 기준으로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이다. 상위

10개의 키워드 외에도 ‘여행’, ‘업무’, ‘연봉’, ‘소개팅’, ‘게임’, ‘주식’, ‘투자’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다. 키워드를 활용한 빈도분석 결과, MZ세대의 관심사는 회사, 직장, 업무, 연봉 등의 ‘취업 및 회사생활’, 결혼, 남편, 아이, 집 등의 ‘결혼생활’, 소개팅, 연애, 친구 등의 ‘대인관계’, 운동, 게임, 주말, 여행 등의 ‘여가생활’, 그리고 돈, 주식 및 투자, 보험 등의 ‘재무’ 등에 집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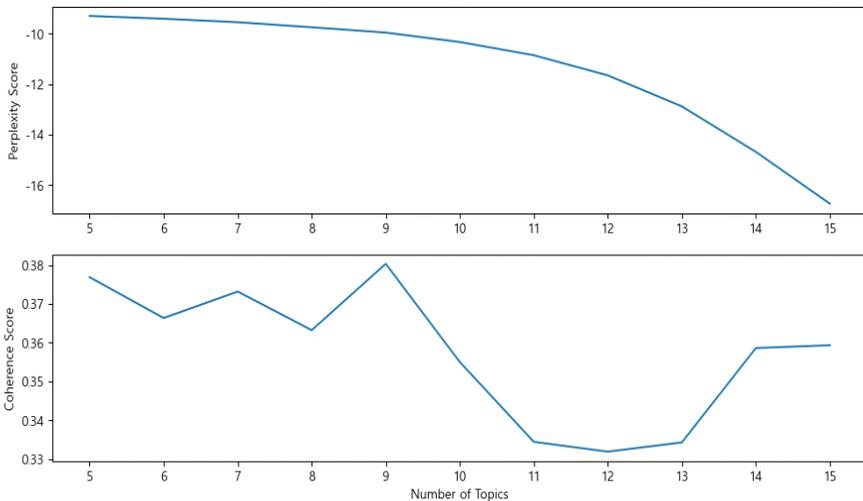


[그림 10] 키워드 관련 워드 클라우드

2. 토픽모델링 분석

본 연구는 MZ세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에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Python의 Gensim 라이브러리의 LDA model을 통한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위한 토픽 수는 앞서 언급한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11> 최적의 토픽 개수를 찾기 위해 토픽 개수 5개부터 15개까지의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를 계산한 그래프이다. X축은 토픽의 개수를 의미하며, 위 그래프는 토픽 개수별 Perplexity Score를, 아래 그래프는 토픽 개수별 Coherence Score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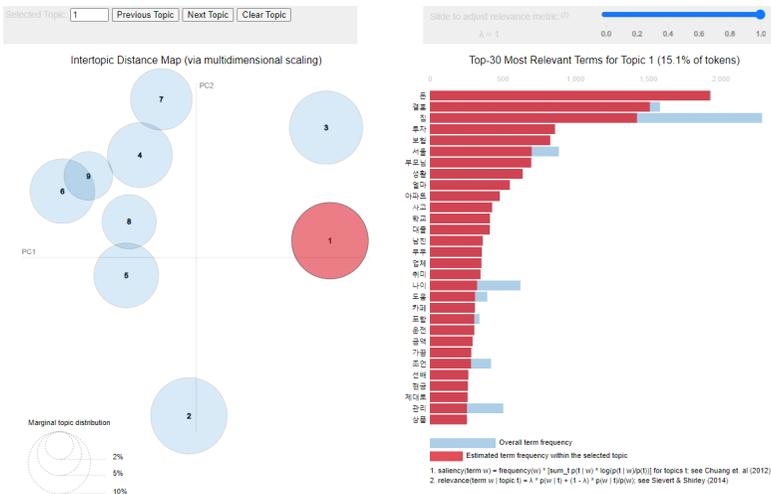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토픽 개수가 증가하면 한 토픽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는 감소하므로 토픽 내 문서의 유사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Coherence Score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토픽 개수를 늘리면 대량 데이터를 주제별로 그룹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토픽의 개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은수 외 2022). 따라서 앞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소 토픽 개수를 5개, 토픽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토픽의 개수를 15개로 한정하였다.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Perplexity Score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Coherence Score는 9개일 때 최고점을 보인다. 따라서 토픽 개수는 9개인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1]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

[그림 11]에서 파악된 토픽 개수(9개)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12]는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LDAvis 패키지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왼쪽의 좌표평면은 키워드의 총 개수만큼의 차원을 가지는 토픽 데이터를 차원축소방법(PCA)을 통해 2차원으로 축소시켜 놓은 것으로 원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은수 외 2022). 또한 원의 크기가 가까울

수록 토픽 간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픽모델링 결과 전체 게시물에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6번, 9번 토픽의 경우 유사성이 높은 토픽으로 확인된 반면, 2번, 7번 토픽의 경우 매우 상이한 토픽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오른쪽의 그래프는 각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30개의 키워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1번 토픽은 돈, 결혼, 집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된다.



[그림 12] LDA모델 시각화

〈표 2〉는 각 토픽의 주요 키워드와 해당 토픽의 게시물 수(비중)이다.⁴⁾ 먼저, 게시물 수가 가장 많은 0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아이’, ‘남편’, ‘혼자’, ‘와이프’, ‘집’이었다.

4) 토픽 내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표 2〉 토픽 분류

순위	토픽 번호 ⁵⁾	토픽	키워드	게시물 수 (비중)
1	0	육아 및 결혼생활	아이, 남편, 혼자, 와이프, 집	3496(16.8%)
2	3	취업 및 회사생활	회사, 업무, 연봉, 근무, 경력	2844(13.7%)
3	7	주택 및 보험	돈, 결혼, 집, 투자, 보험	2752(13.2%)
4	2	헬스	운동, 아침, 오운완, 식단, 헬스장	2678(12.9%)
5	1	부동산 및 주식	부동산, 거래, 주식, 금리, 상승	2090(10.0%)
6	4	여행	여행, 거리, 비용, 맛집, 추천	2074(9.9%)
7	6	일상	선물, 연애, 게임, 방법, 소개팅	1985(9.5%)
8	5	뷰티	피부, 제품, 추천, 구매, 시술	1595(7.6%)
9	9	광고	소개팅, 관심, 추천, 어플	

〈표 3〉부터 〈표 10〉은 토픽의 게시물 본문 예시이다. 예를 들어, 가장 비중이 높은 0번 토픽은 ‘육아 및 결혼생활’ 관련 키워드 및 포스팅을 포함한다. 이는 전체 게시물 대비 비중이 약 16.8%로 MZ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표 3〉 0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육아 및 결혼생활	[최고 조회수 게시물] ‘새벽에 실수로 20짜리를 일곱번해서 140ml를 먹어야 하는데 40짜리로 일곱번에 물 140ml로 녹여 먹었어 지금 분유를 두배농도로 먹인건데 응급실에 전화해봐야할까? 생후 60일 아기가’
	‘애기는 원래 우는건데 엄마들은 애기가 울면 스트레스 받나요? 제가 이상한건가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힘든 육아지만 나를 보며 미소지을 때마다 내 맘이 눈처럼 사르륵 녹아 ㅎㅎ 이제 갓 돌지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금 요맘때가 너무 좋아 더 크지 않았으면 할 때도 있고 다시는 오지않을 시간.. (중략)’
	‘조리원까지는 예약했는데 벌써 어린이집 알아봐야하는지 궁금해

5) 토픽 번호는 토픽 구분을 위한 임의의 숫자이며 중요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와이프가 우선 일 쉼거야!’
	‘침엔 우리끼리 잘살자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너무 원해,,ㅠ 근데 안생겨,,ㅠ 난 덩크로 살고 싶은데 남편은 시험관하자고 해.. 난 그렇게까진 하고싶지 않은데,, 어떡해야할까..... 휴’
	‘출산시 이벤트나 유전병으로 아픈 아이 말고... 자폐나 원인불명의 발달 장애는 환경호르몬의 축적으로 출산 시 엄마 몸 속에 있던 수은 다이옥신 등등이 태어나는 아이에게 전달돼서 아이가 성장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중략)’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3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회사’, ‘업무’, ‘연봉’, ‘근무’, ‘경력’이다. <표 4>는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로, 3번 토픽의 주제는 ‘취업 및 회사생활’이다. 주로 언론에서 다루는 이직, 취업 관련 게시물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해당 연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MZ세대에게 있어 주요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3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취업 및 회사생활	[최고 조회수 게시물] ‘공채 출신이다 내근 2년 화재진압 2년 반 휴직 8개월 이 조직에서 건강히 정년퇴직할 수 있을까’
	‘요즘 00 00 신입 연구원들 학력이 최하 중경외시란 소문을 들었음 현직자분들 실제로 00 본사 연구원들 학력 컷 심한가요?’
	‘우리 입사 8년차 부장이랑 입사 3개월 주임이랑 연봉 똑같이 둘 다 연봉 3,500만원임’
	‘00 경력직 구미 쪽으로 지원해보려 하는데 서류나 면접 전형 박셀까요? 직무는 구매로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본 적 있는분? 증거나 그런걸 제출하라고 하나? 말로 교묘하게 괴롭히는건.. 어떻게 증빙하지? 요즘은 녹음도 함부로 할 순 없잖아.. 자긴 안그랬다고 발뺌하면 어떡해?’
	‘면접 분위기 어떤지 알고싶어~!! 오늘 합격 발표 났는데 당장 내일이 면접이야,, 도와줘~~’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7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돈’, ‘결혼’, ‘집’, ‘투자’, ‘보험’이다. <표 5>는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로, 7번 토픽은 ‘주택

및 보험'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해당 토픽의 게시물 비중은 약 13.2%이다.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주택 가격 및 제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주된 관심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 7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주택 및 보험	[최고 조회수 게시물] '형이 큰거 알려준다 내년에 금리인하 + 총선 겹침 3년 뒤에는 아파트 공급절벽 지금도 이미 강남은 전고점 다와가거나 신고가 찍고 그 아래 중상급지, 신도시들도 80~90%까지 반등함 총선에 부동산 호재들 쏟아지는 와중에 금리인하?.. (중략)'
	'현재 제 실비보험 상태인데, 실비 4만천으로 많이 내는거 같고 암보험비도 10만원이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 20대라 어린이보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비갱신형으로 설계 부탁드립니다.'
	'금천은 서울에 가기 가깝고 신축인데 서울도 아닌 광명에 광명역이 더 비싸던데 이유가 뭐야?'
	'지금 보험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라도 준비하고 하는데 보험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무슨무슨 보험은 있으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공무원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서울빌라 월세 1년 정도 살아야하는데 12평 정도 살만한가요? 신혼 생활 1년 정도 참고 가능할까요? πππ 몇 달 후 예식인데 신혼집 못 구해서 난감하네요πππ'
	'아파트 화재보험 견적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배상책임 가입하려고 하는데 준공이 85년 6월이라 누수보장이 막혀있는 곳이 많네요πππ 누수보장 가입가능한 상품 있을까요?'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2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운동', '아침', '오운완', '식단', '헬스장'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내용으로 2번 토픽의 주제는 '헬스'이다. 2번 토픽은 전체 게시물 중 약 12.9%를 차지한다. 헬스 주제는 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과 같은 개인적인 운동 게시물이나 운동 관련 제품들의 추천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난다.

〈표 6〉 2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헬스	[최고 조회수 게시물] '올려달란거 씻고 생각남 시간 없어서 한시간 짧굽 유산소만 했는데 외쳐도 되지? 공복이니까 봐줘 내일 열심히 할게'
	'아침부터 공복 유산소 조졌네 근데 좋네~'
	'오늘 운동가기 정~말 싫었는데 꾸역꾸역 다녀옴 하체 운동은 할만(?)한데 상체는 여전히 어려워'
	'운동하고 술 마시면 근육통 안 오나요? 그냥 운동을 덜해서 근육통이 안 오는건가요?'
	'공복 유산소 30분, 어깨 조금, 복부 조금 공복 운동하시는 선생님들 물만 드시나요? 커피나 몬스터, bcaa 등 뭐 드시면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생체연수 2일차.. 밖에서 혼밥해야 하는데 비가 내리네... 오늘은 식단 어디서 해야할까?'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1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거래’, ‘주식’,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다. 〈표 7〉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로, 1번 토픽의 주제는 ‘부동산 및 주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토픽의 게시물 비중은 약 10.0%로 확인되었다. 게시물이 특정 정당을 언급한 경우 00으로 처리하였다. 부동산 주제는 독립적이기보다 정치, 정부, 정책과 연결지어 언급되고 있다.

〈표 7〉 1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부동산 및 주식	[최고 조회수 게시물] '지금도 7평짜리 원룸에서 아끼면서 사는데ㅋㅋㅋ 30살 되니 차도 갖고 싶고 아파트 전세 들어가고 싶고 계좌 보면 사이버 머니 같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해 헬스장 쉬는 날 기념으로 마라탕 배달 정돈 괜찮지 체지방 14%가 목푼데 오늘 하루만 좀 쉬어가자'
	'몇달 만에 몇억씩 오르네 이번 상승장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다음 정권은 00같은 더 무서워지네'
	'최근 가격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낙관론이 우세한 듯? 지금이 상승상 시작한거로 보는지, 하락장 시작한거로 보는지 투표좀 ㅋㅋ 1년 후엔 지금 가격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정부가 집 값 하락을 원한다고? 표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말 하겠지 ㅋㅋㅋ 진실은 집 값 오른 가격에 거래활성화로 세수 확보임 ㅋㅋㅋ 정부가 하는 일은 세금과 연관지면 답이 명확해짐'

	‘국내 주식 중에 주주 가치를 진정 신경쓰는 회사가 있을까?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회사는 괜찮을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우리 자기가 알고 있는 개똥같은 회사 댓글로 달아보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쳐다보지도 말자 테마로 사더라도 최소한 장기투자는 피해야지 반대로 장기투자하기 좋은 회사도 추천해줘요 (있을까..)’
	‘여기다 살포시 자랑, 주식 잘하구 싶다.’

여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4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여행’, ‘거리’, ‘비용’, ‘맛집’, ‘추천’으로 나타났다. 4번 토픽의 주제는 “여행”이고 <표 8>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해당 토픽의 게시물 비중은 약 9.9%로 확인되었다. 기성세대에 비해 해외여행, 경험 및 워라밸이 강조되는 만큼 여행이 하나의 토픽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표 8> 4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여행	[최고 조회수 게시물] ‘본인 씹프피 일정 짤습니다 동반자가 J인데 전체일정을 나에게 맡긴 죄로 고통받을 예정 데이1 9/19 1시 부산도착 SRT 시그니엘 체크인 점심 해운대 근처 밀면 or 국밥 소화시킬겸 해운대 구경. 해리단길은 어땠? 커피 아님 낮맥 때리고 호텔와서 수영하고 씬 저녁 선선해지면.. (중략)’
	‘11월 말부터 8일 정도 여행 계획하는데 LA랑 시드니랑 고민 중이야 LA가면 비행시간 빼고 딱 채운 6일 놀 수 있고 시드니로 가면 비행시간 빼고 7.5일 놀 수 있어 (항공시간 달라서) La 가보고 싶는데 6일은 너무 짧아서 아쉬울거 같고 시드니는 기간이 긴거는 좋은데 la보다 재미없을까봐 고민돼 아직 두 군데 모두 가본 적은 없어서 어딜가나 좋긴 하겠지만 어디가 더 괜찮을까??’
	‘나도 여행 좋아해서 50개구 정도 가봄 좋았던 곳 추천해줘 :)’
	‘속초 여행가는데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 ㅎㅎ 시장 들릴까? ㅎㅎ 저녁에 회에 소주 먹고시픈데,, 맛집 있을까아~~ 영금물회 정도 찾아보긴 했어!’
	‘여긴 꼭 먹어야 한다 하는거 있어? 알려주면 바로 먹으러 갈게 ㅋㅋㅋ!’
	‘어디 가기는 힘들고 서울에서 물회에 한잔 하고싶은디 맛집 추천 해줄만한 곳 있나? 아는 형들 알려주라’

일곱 번째 비중인 6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선물’, ‘연애’, ‘게임’, ‘방법’으로 나타났고 여가생활 및 일반적인 관심사를 담고 있다. <표 9>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을 정리한 것이다. 주로 연애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와 주제까지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6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일상	[최고 조회수 게시물] ‘7개월차 30초중반 커플임 남친은 내가 자고 있어도 본인이 새벽3시까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이 늦게 끝나거나 늘 중간 중간 카톡을 다 남겨주는데...(시킨거 아님) 뭔가 말투가 쏘~스윗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건조하네 .. (중략)’
	‘남자친구 바꿀 때 됐다고 해서 사서 선물해주고 싶은데 순정? 아님 다른거? 뭐 사서 주면 좋아할까? 가격 가성비 상관없이 받으면 우와~ 고마워~ 소리듣고싶음♡’
	‘이번 달은 이미 끝났다는 느낌이 들고 다음 달에는 연애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짝사랑할 여자라도 좀 생기게 해주세요(이모티콘)’
	‘바쁜 사람과의 연애... 본인이 바쁜 사람이었던 사람 혹은 상대가 바쁜 사람이었던 사람 있어?’
	‘진짜 왜 꼭 브론즈3에서 브론즈2 올라갈 때마다 지나고ㅠㅠ 를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아니 한달 만에 게임 난리났어... 패치가 없어 패치가’

여덟 번째 비중인 5번 토픽은 ‘피부’, ‘제품’, ‘추천’, ‘구매’, ‘시술’을 주요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다. ‘뷰티’ 주제는 전체의 약 7.6%로 일반적인 관심사 중에서도 주제가 독립될 정도로 청년 직장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5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토픽	게시물
뷰티	[최고 조회수 게시물] ‘나이 92년생 패션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무난한 거 위주로 샀었는데 소개팅이나 TPO 신경 안쓰고 입고 다녔었음다 .. (중략)’

	'쿠션 바꾸고픈데 머가 좋을지 몰겠음 ,,ㅠㅠ'
	'가성비 좋은 피부과 잘 아는 형누나 없어?? 여친 피부과 좀 알아봐주려고 해서 잘 몰라서 좀 도와주십쇼 급신급신'
	'최근에 스킨케어랑 클렌징을 확 바꿨는데.. 원래 고민이었던 코랑 눈 밑쪽 모공&피지는 정리됐는데 이마에 좁쌀이 많이 생기고 여드름 같은 것도 생기면서 이마만 뒤집어졌어ㅠㅠ 스킨케어랑 클렌징 중 뭐가 문제인지 좀 봐줄 사람 있을까? (중략)'
	'2년째 피부 건선으로 고생중인데.. 하필 부위가 얼굴이거든..그러다보니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날은 진짜 어디 나가기도 부끄럽고, 각질 제거를 해도 몇시간만에 다시 올라오고.. 또 각질 제거는 자주 하면 안 좋으며? 그래서 아예 각질을 화장품으로 가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죄다 각질 제거제만 나오더라고.혹시 저런 기능하는 화장품이 있을까?'
	'내가 엉덩이쪽에 몽고반점이 오백원짜리 만한게 있어 좀 거슬려서 피부과 가서 상담받아봤는데 색도 좀 진한 편이고 그래서 그른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거 장담 못하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든다고 차라리 그걸로 얼굴에 시술이나 받으라는데 나는 슬쩍 봤을때 티 안날정도만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음

아홉 번째 비중인 8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소개팅’, ‘관심’, ‘추천’, ‘어플’, ‘코드’로 해당 토픽의 게시물 본문은 소개팅 어플 광고로 토픽모델링 결과 관심사 파악에 있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MZ세대 게시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해당 세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부터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까지 두 세대를 아우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관련 주제가 2개로 다른 주제들과 다르게 청년세대가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일상적인 관심으로는 건강과 미용이 독립된 주제로 나타났다. 건강한 삶을 온라인 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MZ세대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균형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과 가정은 청년세대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부동산과 주식을 통한 재산증식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보여준다. 건강, 여행, 뷰티는 개인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VI.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MZ세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MZ세대의 경우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활발히 나타나고 기성세대보다 개인의 취향을 더욱 중시하는 특성이 정치영역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MZ세대의 관심사는 크게 '육아 및 결혼생활', '취업 및 회사생활', '주택 및 보험', '헬스', '부동산 및 주식', '여행', '일상', '뷰티'로 8개로 분류되었다. 헬스, 여행, 일상, 그리고 뷰티의 비교적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관심사를 제외한 4개 주제는 정치적으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육아 및 결혼 생활의 경우 주로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출산 전의 경우, 태아에 관한 기본 지식과 주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출산 후의 경우, 산모 식단 및 조리원 정보 등 출산 전후 필요한 내용들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예방 접종 및 적절한 교육, 나아가 육아 휴직에 관한 정보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습득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정보들에 대한 MZ세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온라인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개인이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은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취약하다(이종철 외 2014). 따라서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산모 등에게 기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설명회 및 세미나와 같은 오프라인 형태와 동영상 콘텐츠나 디지털 문서 형태로 제공되는 온라인 형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 및 회사생활'의 경우, 취업, 일자리 정책, 연봉, 이직 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와 해결방안을 얻고자 하는 게시물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취업과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제재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있어(정희경 2020) 직장이라는 조직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나아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및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 활성화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주택 및 보험’과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두 가지 주제가 ‘현실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함축될 수 있었다. MZ세대의 경우,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며 기성세대에 비해 경제성장률, 금리, 물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변혜원 외 2021). 또한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일반적인 봉급으로는 소위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 큰 차익을 만들기 위해 ‘영끌’, ‘올인’과 같은 투기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은 현재 한국 사회의 부동산, 주택 정책의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및 주택,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요구되며, 이는 MZ세대의 모든 연령대에서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관심사를 일정한 주제로 구분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연령대를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에서 분석 결과가 편향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블라인드’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임에도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 결과, ‘취업 및 회사생활’보다 ‘육아 및 결혼생활’ 관련 내용이 더 빈번하게 다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Z세대의 주요 특성으로 개인주의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육아 및 결혼 관점에서 많은 사회·제도적 지원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족한 제도적 지원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Z세대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상호 간의 정보 공유가 발생한다는 점은 MZ 세대의 특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온라인에 존재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MZ세대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심사가 MZ세대의 특성처럼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언론에 드러나는 주제 외에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와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함의와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다가올 선거에 있어 하나의 정책적, 정치적 길잡이를 제시할 수 있다. 육아 정보 관련 콘텐츠 제공 및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MZ세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이 MZ세대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주제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지를 비롯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젊은 세대인 MZ세대의 관심사에 대한 고려는 정치적 의미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윤활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김갑철·노현중. 2019.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지역지리교육 연구 동향 분석.” 『사회과교육』 58집 4호: 49-67.
- 김민송·김정열. 2021. “패션 온라인 쇼핑몰의 AI 추천 서비스 만족도 연구-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집 3호: 15-26.
- 김선애. 2021. “MZ세대의 직업문화.” 『충북 Issue & Trend』 45호: 14-19.
- 김수정·오지현·최셋별. 2020. “청년세대의 정치: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집 2호: 283-318.
- 김찬우. 2021.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포퓰리즘 뉴스 분석.” 『국제정치연구』 24집 2호: 99-126.
- 김태훈·김은희. 2023. “토픽모델링(LDA)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43집: 177-212.
- 류병준·하용훈. 2022. “토픽모델링 이용한 한·미·일·중 해양무인체계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집 11호: 395-403.
- 박순형. 2022. “MZ세대의 특성과 언어 사용 연구.” 『한말연구』 63집 18호: 1-23.
- 박준형·오효정. 2017.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LDA와 HDP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8집 4호: 235-258.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집 3호: 1-23.
- 박태순. 2008. “디지털 뉴미디어와 정치 공론장의 구조변동.” 『정치정보연구』 11집 2호: 119-140.
- 변혜원·손지영. 2021.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MZ세대의 은퇴저축.”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집 8호: 1-205.
- 서창훈. 2015. “직관의 투표, 이성의 투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시민사회와 NGO』 13집 1호: 163-198.
- 서향리·정재만·윤종성. 2022. “MZ세대의 선거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

- 문사회 21』 13집 4호: 241-252.
- 손정희·김찬석·이현신. 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 별 반응 연구-MZ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7집: 203-216.
- 송경재. 2012. “소셜 미디어 시대와 선거의 변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대학생 정치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0집 1호: 43-75.
- 안순태·이하나·정순돌. 2022.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세대 갈등에 대한 온라인 댓글 여론의 반응 : 세대 연대를 위한 미디어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66집 1호: 89-126.
- 유정균. 2021. “MZ세대를 들여다보다.” 『이슈&진단』 479호: 1-25.
- 윤순욱·김민철. 2020. “LDA 기법을 이용한 미세먼지 이슈의 토픽모델링 분석.” 『에너지공학』 29집 2호: 23-29.
- 박재현·윤효준·윤지운. 2019. “비정형 텍스트 자료에서 잠재정보 추출을 위한 토픽모델링 소개: 치매관련 신체활동 뉴스 기사의 이슈 분석.” 『체육과학연구』 30집 3호: 501-512.
- 이슬기. 202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인식한 직장 내 지지와 상담접근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집 1호: 125-146.
- 이연승·박건령. 2022. “빈도분석 및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장애유아통합교육 해외연구 동향분석: 2001~ 2022년 논문을 기준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4집 4호: 28-57.
- 이예슬. 2020. “MZ세대의 문화예술 트렌드.” 『한국예술연구』 28호: 341-350.
- 이종철·오진아. 2014. “인터넷 지식검색 프로그램상 사회,역사 관련 지식 정보의 정확도에 관한 분석적 고찰 네이버(NAVER) 지식iN과 다음(DAUM) 지식의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5집 2호: 149-186.
- 전은수·오승훈·조영목. 2022.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코로나 관련 언론 키워드 분석.” 『보건학논집』 59집 1호: 1-11.

- 정희경. 202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무상 제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97호: 241-276.
- 조원빈. 2022. “한국 사회 ‘MZ세대’와 정치 참여.” 『철학과 현실』 132호: 111-120.
- 최셋별. 2022.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지식의 지평』 32호: 63-76.
- 최영준. 2022.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BOK 이슈노트』 제2022-13호.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2023. 데일리 오피니언 제559호 (2023년 9월 3주). 『갤럽 리포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2 언론수요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정훈. 2021. “유튜브 정치채널 시청의 결정요인과 표본선택편향.” 『한국정치학회보』 55집 5/6호: 93-118.
- 호규현·심승범·조재희. 2023. “정말 MZ세대 직원은 까다로운 개인주의자일까?: 미디어에서 묘사된 MZ세대 조직원 특징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연구.” 『한국언론학보』 67집 1호: 272-315.
- 행정안전부. 2023. 연령별 인구현황.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검색일 : 2023.10.23.)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Kim, N. G., Lee, D. H., & Choi, H. C. 2017. “Investigations on Techniques and Applications of Text Analytic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42(2): 471-492.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76-320.

Newman, D., Lau, J. H., Grieser, K., and Baldwin, T. 2010. "Automatic Evaluation of Topic Coherence." Human Language Technologies: The 2010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CL, 100-108.

What are the Interests of the MZ Generation? Exploring Issues through Blind Platform Posts

Deok Ryeol Kim* · Kihong Eom**

ABSTRACT

Despite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new generation(MZ generation), research on the political dimension of the MZ generation is inadequate. The MZ generation, encompassing those born between 1980 and 1994(M generation) and those born between 1995 and 2010(Z generation), is reported to exhibit individualistic tendencies and primarily engage in online activities, distinguishing them from previous generation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interests of the MZ generation has been limited due t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onlin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ests of the MZ generation through online spaces. The study conducted LDA-based topic modeling on the Blind community topic best posts' titles and body texts collected from July 14, 2023 to September 15, 2023.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in interests of the MZ genera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Parenting and Married Life,' 'Employment and Corporate Life,' 'Housing and Insurance,' 'Health,' 'Real Estate and Stocks,' 'Travel,' 'Life,' and 'Beauty.' Particularly, 'Parenting and Married Life,' 'Employment and Corporate Life,' 'Housing and Insurance,' 'Real Estate and Stocks' represent significance in representing current instability and future uncertaintie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what the political sphere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e context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Keywords: MZ generation, digital native, Blind community, text mining, LDA topic modeling

투고일: 2024.01.14.

심사일: 2024.02.16.

게재확정일: 2024.03.06.

* MA stu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연구방법논총』 원고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1)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한 200매를 넘지 못한다.
- (2) 제출 논문의 표지에 원고 매수를 명기하여야 한다.
- (3)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 필자는 원고지 초과분의 매 1매당 5,000원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구성

- (1) 원고는 국문 요약,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요약,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2)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소속을 포함하여 국문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장)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 중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각주는 본문 중의 적당한 곳에 (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각주 내에서 각주의 번호는 본문 좌단과 일치시키되 둘째 줄부터는 첫째 줄 각주 번호 뒤에 나오는 첫 글자와 일치시킨다.
- (5)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6)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 혹은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3. 저자의 익명성

(1)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출고(拙稿)XXX… 혹은 …(拙著)YYY…

4. 기타 사항

(1) 한글 사용: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2)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3)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4)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재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예: …뉴욕(New York)…; …치앙마이(Chiang Mai)…

(5) 외국 기관, 단체, 정당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 이하 EMS)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 모두가 가입하고 있다.

(6) 출전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

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 (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5.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 (1)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6)은…。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 (2)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2)… 혹은 …(Moore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93/04/08, 5) 혹은 …(신동아 93/, 233).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출판예정’을 사용하고, 미간행 원고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한다.

예: ...잉거정(출판예정); ...홍길동(미간행).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외교안보연구원 1992)...

6.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1988.10.20).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1996. 한국의 통일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1.1998.10.20>. (1/10 Bar).

7.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 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예: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권(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 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꺼쇠(『』)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 (3) 각 문헌의 첫 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

가.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17대 총선의 분석』. 서울: 민음사.

Tillich, Paul. 1963.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 허생,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Berelson, V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나.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장노자. 1991. “국건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서울: 호박사, 231-263.

Schydl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Cynthia McClintock and Abaraham F. Lowenthal, eds.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94-113.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 자본주의의 정치』. 서울: 집현연구소, 261-306.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2013.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코트, 제임즈. 1991. "20세기 초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본주의의 농촌 침투와 농민 운동." 『집단선택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 (봄), 101-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1988.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론."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 (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April 22), 23.

자. 편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를 제공한 후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ox, Robert W. 1979. "Labor and the Multinationals." Modleski(1979), 414-429.

Hymers,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5.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편집위원회 (053-950-7396, basicdatakreditor@gmail.com)로 문의한다.

『연구방법논총』 저술 윤리강령

1. 목적

- (1)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는 저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혹은 게재 신청)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3) 본 저술 윤리강령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의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 ①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②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③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 ①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 ② 타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경우.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모든 독자의 제보 내지는 자체 판단에 따라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고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와 편집위원회 각 2인씩 지명하는 총 4인의 2차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 및 판정을 한다.

4. 제재방식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방법논총』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방법논총』을 통하여 공지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5. 기타

- (1)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기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할 때는 원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본 강령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게재 신청한 논문에 적용된다.

『연구방법논총』 편집 및 심사 규정

제정 2016.01.01. 규정 제1호

개정 2018.11.08. 규정 제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연구방법논총』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호선한다. 단, 초대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제3장 『연구방법논총』 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1. 『연구방법논총』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JAMS 웹사이트(<http://polisci.jams.or.kr/>)를 통해 투고한다(2018.11.08. 개정).
2. 『연구방법논총』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연구방법 논총』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3. 제출 원고는 『연구방법논총』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연구방법논총』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6.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1호-1월 말일, 2호-5월 말일, 3호-9월 말일(2018.11.08. 개정).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로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연구방법논총』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 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발간 예정일)

『연구방법논총』은 연 3회 발간하며, 1호는 3월 31일, 2호는 7월 31일, 3호는 11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8.11.08. 개정).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후 게재',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후 게재	
가	가	게재 불가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1조 (재심후 게재여부 결정) 초심 결과,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1.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편집위원이나 새로 지정한 심사위원 1인에게 초심결과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심사는 '게재' 혹은 '게재불가'만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2. 기일- 재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연구방법논총』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방법논총』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정관 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

『연구방법논총』 편집위원명단

직 책	이 름	소 속
편집위원장	조 진 만	덕성여자대학교
편집위원	박 원 호	서울대학교
	엄 기 홍	경북대학교
	지 병 근	조선대학교
	이 유 신	영남대학교
	이 재 목	한국외국어대학교
	정 한 범	국방대학교
	황 태 희	연세대학교
	김 동 수	부경대학교
	Satoshi Machida	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
편집간사	민 정 훈	국립외교원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 2024 Spring Vol.9, No. 1 |

- An Analysis of Political Bias in Major Newspapers' Coverage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and comparison of similarity using Doc2vec
Sanghyun Park / 1
-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e, and Causal Explanation: Explaining Thatcherism in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ory
Yongwoo Jeung / 45
- Which Legislators are Assigned to Committees Favorable for Reelection? Focusing on Party Loyalty, Committee Assignment Experience, and Electoral Stability
Sinjae Kang / 75
- A Brief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Program on Impulsiveness, Aggression and Self-Control in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s
Seong Jin Lee · Seong Jin Choi / 109
-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teacher satisfaction among married female teachers :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SeongHee Bae · NanMee Yang / 139
- What are the Interests of the MZ Generation? Exploring Issues through Blind Platform Posts
Deok Ryeol Kim · Kihong Eom / 165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Basic Social Science